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0. 3

수행기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용역과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수 행 기 관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과제책임자 : 박재현(정보유통지원실 실장)

참여연구원 : 이재진(정보유통지원실 팀장)

하진희(정보유통지원실 선임연구원)

황수민(정보유통지원실 선임연구원)

이영대(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이광진(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신승윤(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정진희(법무법인 수호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공공정보 저작권의 기본 개념	9
제1절 공공정보 및 저작권의 정의	11
1. 공공정보의 정의	11
2. 저작권의 정의	13
제2절 현행 법령에서의 공공정보	16
1. 정보공개 측면	16
2. 전자정부 측면	27
3. 국유재산 측면	38
제3절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	43
1. 공공정보의 저작물성	43
2. 저작권법 적용의 유형	46
제3장 공공정보 저작권 관련 해외사례	67
제1절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	69
1. 영국의 저작권 제도	69
2. 호주의 연방저작권	79
제2절 저작재산권은 제한하고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사례	82
1.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82
2. 영국의 Data.gov.uk	85
3. 일본 문화청의 자유이용마크	88
4. 미국의 연방정부 저작권	90
제3절 저작인격권을 제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인정하는 견해	98
1. 일본 판례를 통해 보는 정보개시제도상 '정보개시'와 저작권법상 '공표권'의 관계	98
2. 일본 저작권법상 정보공개를 위한 공표권 제한	99

제4장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 실태	103
제1절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 현황 분석 결과	105
1. 조사 개요	105
2. 보유 공공정보 현황	107
3. 저작권 관리 현황	116
4. 제공 실태 현황	123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6
1. 저작권 관리 지침 관련	126
2. 자유이용허락에 대한 의견	126
3. 신탁 운영 관련	127
4. 기타 의견	128
5. 시사점	129
제5장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131
제1절 저작권법에 의한 관리방안	133
1. 현행 법 체제하의 관리방안	133
2. 자유이용 확대	138
3. 저작권의 권한 제한	139
제2절 기타 관련법 개선에 의한 관리방안	142
1. 사용료 산정방법	142
2. 사용허가에 관한 문제	147
제6장 결론	153
참고문헌	163
부록	171
A. 해외 주요국의 공공정보 관련 저작권법	173
B. OPSI 저작권 가이드	213

표 목차

<표 2-1> 각 성청이 홈페이지에 공통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게재하는 정보	35
<표 2-2> CCL의 유형	59
<표 3-1> 정부저작물의 범위	70
<표 3-2> 클릭유즈 라이선스의 종류	75
<표 3-3> 클릭유즈 라이선스 획득 방법	79
<표 4-1> 조사 대상 기관	106
<표 4-2> 조사된 공공정보의 형태별 현황	108
<표 4-3> 자체 제작 사례	118
<표 4-4> 외부 제작 사례	119
<표 4-5> 타 기관의 이관에 따른 수집 사례	120
<표 4-6> 개인의 기증·납본에 따른 수집 사례	121
<표 4-7> 저작권 관리 방법별 기관 사례	122
<표 4-8> 기관별 이용 대상·목적별 제공 현황	124
<표 4-9> 공공정보의 저작권 발생 유형	129

그림 목차

(그림 2-1) 법률 규정에서의 공공정보	12
(그림 2-2)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아이콘	60
(그림 3-1) 일본 문화청의 자유이용마크	88
(그림 4-1) 공공기관의 정보 생산 방법에 의한 구분	116
(그림 5-1) 지적재산권 형성 유무에 따른 구분	134
(그림 5-2) 공공기관의 정보 생산 방법에 의한 구분	135
(그림 5-3) 공공저작물의 권리주체에 따른 구분	136
(그림 5-4) 공공정보 제공에 따른 구분	13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는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나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서비스 개발 등으로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활용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다각도로 공공정보를 접근·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일반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기술적 기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런 정책 집행으로 인해 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공공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반 국민이나 관련 기업에서의 공공정보 접근이나 이용·활용은 여전히 어려운 과정이며, 무엇보다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그러한 접근 내지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공개된 공공정보라도 저작권이 있을 경우 원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나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에서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저작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보다 보편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상의 관련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관해 현행 저작권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정보의 접근 내지 활용이 보편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은 제10장에서 왕실 및 의회의 저작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왕실 또는 왕실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 수행상 작성한 저작물은 왕실이 최초의 저작권자가 되고, 상원이나 하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해 제작된 의회의 저작물은 의회가 저작권자가 되며, 양원에 의해 또는 그 지시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일 경우 양원이 공동저작권자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¹⁾ 즉, 공무원이나 외교관, 군복무자, 법원 직원, 왕실 구성원, 그 외 정부 관리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저작물 예컨대, 편지나 보고서, 인구조사 응답지, 군복무 기록, 운송 기록, 전쟁 일지, 작전 기록, 내각 의사록 등은 왕실 또는 의회가 그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고 한다.²⁾

또한 프랑스 저작권법인 ‘문화·예술 저작권법(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에서도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정신적 창작물의 저작자가 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권리(배타적 무체적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고, 이때 저작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관련 공공기관, 법인격을 부여받은 독립행정기관, 프랑스은행의 직원인 경우에도 그가 저작권을 가진다. 그러나 공무상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또는 지시에 의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는 창작한 때로부터 정당하게 국가에 양도되는데, 이때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권한은 공무원 저작자에게 우선적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저작물을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때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인 공무원이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상 또는 지시를 받아서 저작물을 창작한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공표권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업무 등을 명시한 규정을 존중하여 행사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또는 지시에 의해 창작한 소프트웨어 및 그 자료에 대해서(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무상 저작)도 공공기관 등은

1) 박덕영 역. 2005. 『영국 저작권법』.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pp.130-133.

2) 정경희. 2007.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1): pp.171-172.

재산권 행사 자격만 부여된다.³⁾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공공정보의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공공정보의 저작물성 여부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공공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즉, 일선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민간 수요에 부응하고 싶어도 공공정보 제공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선결되지 않아 실제 업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정보는 그 특성상 저작권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정보는 정부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수집되었다는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정보는 그것이 정부의 ‘권리’ 즉, 저작권으로서 보호받는 것에 초점이 있기 보다는 그 공개와 개방을 통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관련 산업 및 경제를 발전시킬 정부의 ‘의무’라는 점이 보다 부각될 필요가 있다. 물론 공공정보라고 해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능사가 될 수는 없다. 공공정보도 엄연히 저작물성을 갖고 있다면 현행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적 틀 속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공공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저작권 관리방안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공공정보 이용·활용에 대한 권리부여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의 저작물 관리체계 및 공정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서달주 역. 2009. 『프랑스 저작권법』.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pp.5-5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입법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공공정보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정보의 민간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정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

공공정보 저작권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저작권법 취지가 통용되기 어려운 공공정보에 대해 저작권 인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정보의 각종 유형에 따른 저작물성의 판단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보의 권리 행사 범위와 저작물로서의 특성을 감안한 공공정보의 공정이용 범위를 규명하였다.

둘째, 공공정보 저작권에 관한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영국 왕실 저작권 및 클릭유즈 라이선스, 미국 저작권법, 호주 연방저작권법, 일본 저작권법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공공정보 저작권 관련 법·제도적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 기관의 유형과 저작물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대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범위,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저작권 관리체계 또는 계약 등의 유무 등 저작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일선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과 향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국유재산법」, 「저작권법」 등에서 공공정보가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신탁관리, 자유이용확대 등 공공정보의 민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법률 및 판례, 선행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공정보 저작권에 대한 기본 방향을 탐색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13개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 면접을 통해 기관별 저작권 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향후 저작권 관리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인 자문을 받아 연구 내용의 충실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혀 둔다.

제2장 공공정보 저작권의 기본 개념



제1절 공공정보 및 저작권의 정의

제2절 현행 법령에서의 공공정보

제3절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

제2장 공공정보 저작권의 기본 개념

제1절 공공정보 및 저작권의 정의

1. 공공정보의 정의

‘공공정보’란 공공부문이 생산·보유·관리·배포하는 일체의 정보를 가리키며, 민간부문이 생산·배포하는 정보에 대응되는 개념이다.⁴⁾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이때 디지털화된 것(즉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도 포함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기록물’이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공공정보와 공공기록물이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법의 취지에서 보면 공공정보는 공개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시한 개념인데 비하여 공공기록물은 생산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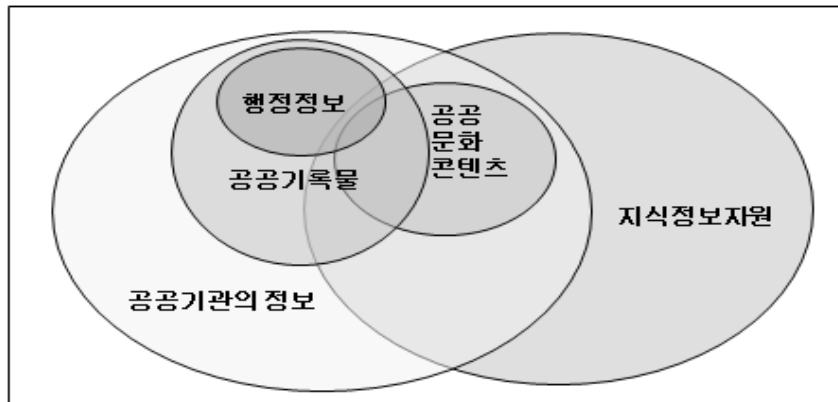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는 공공정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정부 구성을 위한 대상 정보로서의 행정정보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4) 뒤에서 ‘생산’은 제작과 수집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보고 있는데, ‘생산’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에 비추어 과연 수집(외부로부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취득)을 개념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견해도 있다.

5) 이영대. 2006. 『공공정보 상용화에 관한 입법 연구』.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p.12.

되어 표현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공공정보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실질적으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정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상의 ‘지식정보자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정보자원’도 내용적인 한계와 디지털 형태라는 형식적 한계가 있지만 행정정보와 마찬가지로 공공정보에 포함되는 개념임에는 틀림없다.



(그림 2-1) 법률 규정에서의 공공정보

요컨대 공공정보가 공공기관에 부여된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생산되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고 본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정보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살펴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각종 자료나 정책 제안, 해설 등의 ‘정치정보’, 범죄관련 정보나 사법 정책 및 법집행 관련 정보 등의 ‘법률정보’, 예산, 금융, 각종 경제 지표 통계 등의 ‘경제정보’, 인구통계학 정보, 행태 정보, 보건 및 질병 정보 등의 ‘사회정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정보 등의 ‘문화정보’,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결과물 등의 ‘과학정보’, 토지사용, 지리, 기상, 수로 정보 등의 ‘환경정보’ 등이 공공정보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⁶⁾

한마디로 ‘공공정보’란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단순한 데이터는 물론, 그림이나 음악·사진 등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특허법」상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권리’까지도 공공정보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권리 부문은 제외하고 단순히 권리를 표현하는 데이터 또는 콘텐츠를 공공정보의 범주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특히 주의할 점은 공공정보가 반드시 공공기관이 정보 생산의 직접적인 주체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부 위탁이나 기탁 등을 통해 수집·보유하는 정보도 공공정보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보유’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취득한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으로 취득하게 된 정보자원도 포함하게 되며⁷⁾, 이때 보유가 반드시 저작권 제반 권리의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저작물의 창작과 이의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일정한 제한을 통하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저작권계의 일반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결국 저작권법의 기본원리는 지식의 성과를 이용하려는 일반 공공의 필요와 저작자에게 보답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자극시키려는 필요가 서로 양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6) Onsrud, H.J., X. Lopez. 199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isseminating Digital Geographic Data, Products, and Services: Conflicts and Commonalities among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Approaches* in Masser, Ian and Francois Salge ed. *European Geographic Information Infrastructures: Opportunities and Pitfalls*, London: Taylor and Francis. pp.153-167.

7) 예컨대 기탁 등에 의해 정보자원이 수집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Human Rights: UDHR) 제27조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1)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의 문화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고, 또 과학적 발전과 그 혜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모든 형태의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실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창작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 기초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은 일차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자의 권리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고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 저작권의 이중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독창적인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때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8) 세계인권선언 제27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무제한 독점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저작물의 유통이 줄어들어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물론 이에 인접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 틀림없지만 공공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이 불가피하다. 즉, 공공 교육과 창조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저작권법」에서는 제3자의 공공성이 높은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보호기간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의 형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2절 현행 법령에서의 공공정보

1. 정보공개 측면

가. 국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이념은 “공공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대원칙이 있고, 그러나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국가·사회의 안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개시하지 않는 것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방법은 열람부에서 필요한 문서·정보를 찾고 창구에서 열람 또는 필요에 따라 복사를 의뢰하는 형태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편의 제공’과 ‘종합적인 정보공개 추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 「정보공개법」의 원활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동 법에서는 “종합적인 안내 창구의 정비, 자료 제공, 기타 개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편의성에는 소재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새로운 미디어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공개의 가능성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공표나 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꾀하고,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공개 추진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공개 방법에는 ‘자기테이프’, ‘전자적 기록물’, 기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체에 의한 열람, 복사 교부의 방법 등도 최대한 보장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사실상 폭넓은 제외 사유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공공정보 이용에 태생적 한계를 지우고 있다. 실제 동 법은 불개시 정보로 아래의 정보를 명기하고 있다.

- 법령상 지정된 비밀
-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
- 국민안전에 관한 정보
- 재판·범죄·수사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계약·기술·인사·의결·검토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 정보
- 기업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정보

위와 같은 한계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제공이나 활용에 있어 큰 제약이 있음은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공개 기관의 재량 남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가안보나 국민안전, 재판, 수사 등 제외 규정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공개 제외의 범위를 넓히고자 할 때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사실상 소송을 제외하고는 공개 요청을 위한 적절한 통제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공개 대상에 관한 해석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이다. 예를 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셋째,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동법은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 공개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타인의 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하여 대부분 차단되므로 정보공개의 실익은 문언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정보공개법은 공개에만 한정하고 더 나아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 또는 재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정보공개법은 활용의 사회적 편익이나 관련 산업 진흥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점에서만 만들어진 법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정보의 산업적 부가

가치화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기술하기 전에 미국 연방법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법은 연방 헌법(constitution), 법률(statute), 행정부령(regulation)이나 대통령령(executive order) 그리고 각 주의 헌법, 법률, 행정부령이나 주지사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Village Town 등의 조례(ordinance)나 규칙(regulation)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법률 구성은 성문법부터 영미법상의 관습법(Common Law)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법과 주법이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의 근원은 연방 헌법에서 시작하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는 서열상 체계가 존재하여 하위의 법은 상위의 법에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최상위의 연방 헌법을 기준으로 다음 순위에 있는 연방 법률은 상위법인 연방 헌법에 반하지 못하고 다시 각 주의 법률은 상위법인 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

예컨대, 이민법은 연방 법률이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지 못한다. 이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시행 세칙은 다시 상위법인 이민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상위의 연방법인 이민법의 위임된 사항이나 보완하는 사항만이 제정될 수가 있다.

1787년에 제정된 연방 헌법은 7개조의 본문과 27개조의 수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부의 구성, 즉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사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주의 아래 연방 정부와 주 정부와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률 제정권에 대하여 헌법은 광범위한 연방 정부, 즉 의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로

부터 위임된 또는 주의 자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 정부의 법률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체계 속에서 미국 정보자유법(FOIA)은 미국합중국법령 제1편(기관일반) 제5장(행정) 제11부(행정절차) 제552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1966년 성립되어 국민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보관하는 공문서나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후 1996년 클린턴대통령 시절 전자정부의 공개를 포함하는 FOIA수정법이 성립되어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가 추진되었다.

연방정부의 각 행정기관(agency)에서는 정보공개실(FOI Office)을 설치하여 FOIA를 운용하는 동시에,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로는, FOIA의 일반 정보, 정보공개청구방법에 관한 가이드, 각 행정기관의 연락처, 대표적인 질의응답, 연차보고서, 청구 등에 관련된 비용, 관련 사이트, 정보공개열람실(FOIA reading room)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미국 정보자유법에는 연방정부의 각 행정기관이 소유하는 공문서는 모두 입수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이 성립되면서 정보의 필요성에 관련된 입증책임이 청구자 개인에서 연방정부로 옮겨졌기 때문에, 정보 청구자는 그 정보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지 않게 되었다. 즉 ‘알 필요’가 있는 가라는 기준이 ‘알 권리’가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바뀐 결과, 지금은 연방정부 쪽에서 청구된 정보의 개시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는 이유의 정당성에 관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 정보자유법에는 국민이 각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연방법원에서의 민사소송에 의해 행사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 행정기관이 공문서의 개시 요구에 대한 회답기한을 위반한 경우, 개시 요구된 공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시를 거부한 경우, 청구자는 연방지구법원 판사에게 각 행정기관의 대응을 재검토하도록 한 후에 FOIA의 준수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편 FOIA에는 다음의 9개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미국 정보공개법상 적용제외 사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기밀사항이나 국방, 외교정책에 관한 것. 단,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기밀로 취급되는 정보에 한한다.②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규칙이나 관례에 관한 것.③ 다른 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개시가 면제받은 것.④ 영업상의 비밀사항, 및 제3자로부터 얻은 것으로 은닉권이 인정되거나 또는 비밀에 속하는 상업상 또는 금융상의 정보.⑤ 행정기관과의 소송에서 행정기관 이외의 당사자는 법률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각서 또는 서간.⑥ 개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명백하게 부당한 침해가 되는 사실 또는 의료에 관한 서류,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⑦ 법 집행의 목적을 위해 편집된 수사기록. 단, 이 경우 법집행기록 또는 정보의 제출이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평한 재판 또는 공평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경우 등에 한한다.⑧ 금융기관의 규제 또는 감독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에 의해, 또는 그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그 행정기관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된 검사, 운영 또는 상황에 관한 보고에 포함되거나 관계가 있는 것.⑨ 유전(油田)에 관한 지도를 포함하는,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상의 정보나 데이터. |
|--|

미국 정보자유법은 연방정부의 행정부문에만 적용되며, 연방의회 및 연방사법기관이 보유하는 공문서에 대한 접근은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주 및 지방정부, 또는 개인기업 및 개인이 소유하는 공문서에 대한 접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 주는 미국 정보자유법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미국 정보자유법에 따라 제정한 각 주의 법령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미국 정보자유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텍사스 주의 경우 텍사스 ‘공공정보법(Public Information Act)’ 552장은 국민들이 정부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공정보 관련 공무원 및 공무 집행관은 해당 정보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모든 정부정보는 공공에 공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단 정보 공개에 대한 특정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헌법, 법령 또는 판결에 의한 기밀이 아닌 또는 공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 요청에 대하여는

그 즉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캔사스주는 1984년 ‘캔사스주 정보공개법(Kansas Open Records Act)’을 제정하여 45-216 (a)항에서 “주의 공공정책에 따라 본 법률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사항이 없다면, 공공정보는 누구에게나 열람 가능해야 한다. 이 법률은 주의 공공정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해되고 적용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45-221에서는 공개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를 상당히 상세하게 별도로 정하였는데,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크게 (a) 공공정보가 개인에 관련된 민감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 (b) 공공정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프로그램 관리에 필수적일 때 또는 (c) 공공기록이 기밀 정보에 영향을 미칠 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캔사스주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 제외 관련 조항은 5년에 한 번씩 개정되며, 입법기관은 정보공개 예외조항을 제정하기 전에 연방정부의 공개원칙과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정보자유법과 관련된 몇 개의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원고)가 상무부(피고)를 상대로 FOIA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조정된 인구조사 수치를 담고 있는 컴퓨터 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하자 피고가 위 테이프는 FOIA의 예외조항 5, 즉 의사결정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심사숙고 중인 문서를 보호하는 규정인 ‘입안 과정 특권(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공개거부를 한 사례에서 항소심법원은 위 컴퓨터 테이프는 의사결정을 위한 것도 심사숙고를 요하는 문서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California Assembly v. U.S. Dept of Commerce).

석유정보사가 토지관리국의 LLD(법적 토지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위해 정보자유법에 따른 공개신청을 하자 토지조사국이 이 파일은 미완성의 ‘초안’이므로 정보자유법(FOIA)에서 정한 예외규정 즉, ‘입안 과정 특권(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건에서 대상정보는 정보

자유법의 공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Petroleum Information Corporation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상기 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예외조항은 공공정보 접근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권의 주장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박사과정인 Margolius(청구인)가 클리블랜드 경찰(피청구인)에 경찰 출동과 운용에 관한 자기테이프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출력한 서면 이외에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 형태 즉, 자기테이프 복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과도한 업무 부담의 우려로 이를 교부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건에서 법원은 R. C. 149.43(B)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기테이프를 복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The State, ex rel. Margolius v. City of Cleveland et al. No. 91-367).

상기 판례는 공공기록 공개청구권은 인정받았으나, 공개 형태 즉 ‘유체 매개물에 저장된 공공정보의 복사본’에 대한 청구권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공공정보의 축적물은 별개의 공공정보에 해당하지만 조직화된 새로운 가치를 내재한 별개의 공공정보 역시 마땅히 공공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개되는 공공정보의 형태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티인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기소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플로리다 법률가 등이 아이티 국민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를 상대로 FOIA에 근거하여 밀입국한 아이티 국민들에 대한 인터뷰 리포트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가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그 후 강제 송환된 아이티 국민들의 정보가 포함된 25개 문서들 중 그 성명을 삭제하여 제공한 사건에서 그 삭제가 FOIA 예외 조항 6은 “FOIA는 개인, 의료 기록 및 이에 준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⁹⁾에 의해서 정당화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원래의

9) Which exempts from disclosure personnel and medical files and similar files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constitute a clearly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리포트를 공개했을 때 침해되는 인터뷰에 응한 자들의 사익이 정부가 아이티 공화국과의 밀입국자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그 삭제를 정당하다고 보았다(U.S. Department of the State, *Petitioner v. Michael D. Ray et al.*).

상기 판례는 공익을 위해 공개되는 공공정보가 치명적인 사익의 침해가 된 경우, 개인의 이익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다.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본에서의 행정정보를 둘러싼 상황에는 크게 2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세계적인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의 정보화, IT전략, E-Japan과 같은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조류이고, 다른 하나는 1999년 성립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2001년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보제공에 관한 정책의 변화이다.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일본 정보공개법제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정보공개법제의 목적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라 행정문서 및 법인문서의 개시를 청구하는 권리에 관해 정함으로써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원활한 공개를 꾀하고, 이로써 정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행하는 그 모든 활동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에 있다.

각 대상기관을 보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 근거하여 내각에 설치되는 기관(내각관방, 내각부 등), 내각 관할 하에 설치되는 기관(인사원), 정부 행정기관으로서 설치되는 기관(성, 위원회 및 청) 및 회계감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독립행정법인(2006년 현재 104개 법인) 및 국립대학법인(87개 법인), 인간문화연구기구 등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4개 법인) 그리고 일본우정공사 등 특수법인(18개 법인) 및 종합연구개발기구 등 허가법인 및 기타법인(5개법인)이 대상이 된다.

대상문서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직원·독립행정법인 등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문서, 동영상 및 전파적 기록이며, 직원이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¹⁰⁾

누구나 행정문서 및 법인문서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정보공개법 및 독립행정법인 정보공개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개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개시 정보의 유형으로는 ① 개인에 관한 정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 ② 법인 등에 관한 정보 중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④ 범죄의 예방, 수사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있다. 한편 불개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독립행정법인 등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시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개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그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그 실시에 힘쓰도록 하였다.

특히,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이 성립되면서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부분은 공표권 및 복제권에 관한 내용인데 공표권과 관련해서는 제3장 제3절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복제권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문을 살펴보겠다. 즉, 동법 제42조의 2에서는 개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물의 복제를 행하는 경우에 복제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해당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10) 행정기관 정보공개법 및 독립행정법인 정보공개법 각 제2조. 단, 제2조 2항 1호 관보, 백서, 신문 기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과 2호 정령(명령의 하나로 내각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함)에서 정하는 공문서관 기타 시설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적 또는 문화적인 자료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제외로 한다.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등에 의한 개시를 위한 이용)

제42조의 2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은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의해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항 (동항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의 규정을 포함함) 에 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 개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행정기관 정보공개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행정문서의 개시'는, 문서 또는 도서에 관해서는 열람 또는 복사를 교부함으로써, 전자적 기록에 관해서는 그 종별, 정보화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령(명령의 하나로 내각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함)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행한다. 단, 열람 방법에 따른 행정문서 개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문서의 보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를 복사함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일본에서는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1995년을 첫해로 하는 5개년 계획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동 계획은 1997년 12월 '행정부문의 정보화를 사회 전체의 정보화 선도로까지 이어가자'는 사회적 요청에 의해 원 계획을 수정하여 1998년을 첫 해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방침'의 하나로 '행정정보의 제공'이 제기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서 기존의 보도 발표자료 외에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와 '백서·연차보고서 등 행정의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정정보', '각종 통계정보 등 사회적 이용가치가 높은 행정정보' 제공을 추진할 것이 명기되었다.¹¹⁾

동시에 이 개정 계획에는 행정정보의 소재안내 시스템(clearing system) 정비 및 각 성청이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표준화가 포함되어 총무

11) 일본 총무성. 『行政情報化推進基本計画』. 1997年(平成9年) 12月20日改定. [online]. [cited 2010.3.12]. <<http://www.e-gov.go.jp/doc/19971220doc.html>>.

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총무성에서는 1997년 ‘행정정보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소재안내 시스템의 통일적 사양’을 작성하였고, 이 중 소재안내 시스템에서 정비 및 제공되는 데이터 항목에서 행정정보에 관한 상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A분류 : 산업 등에 의한 분류

분류 코드	분류	분류 코드	분류
A01	산업·경제 전반	A17	환경·공해
A02	농림·수산	A18	방재·보안
A03	광업·제조업	A19	기상·해상·지상
A04	건설·토목	A20	국민생활
A05	전기·가스·수도	A21	의료·보건위생
A06	상업·서비스업	A22	여가·사회복지
A07	운송	A23	교육·문화
A08	통신	A24	인구
A09	무역	A25	재정·국유재산
A10	기업경영·사업소	A26	사법·법무
A11	통화·금융·보험	A27	입법·의회
A12	가계·물가	A28	국제일반
A13	임금·노동	A29	방위
A14	토지·주택	A30	행정관리
A15	과학기술·연구개발	A99	기타
A16	자원·에너지		

• B분류 : 문서의 종류에 따른 분류

분류코드	분류	내용
B01	행정보고	백서, 연차보고, 사업보고 등
B02	법규관계문서	법령, 공시·고시, 훈령, 통달 등
B03	허인가 관계문서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
B04	심의회 등 관계문서	심의회, 위원회 답신, 보고, 간담회, 연구회 보고 등
B05	계획서	행정운영에 관한 중장기 기본 계획, 대강 등(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 규제완화추진계획 등)
B06	조사연구보고	실태조사보고, 조사연구보고 등
B07	통계조사보고 등	각종 통계월보, 연보, 국제조사결과 상업통계, 자연현상 관측데이터 등
B08	홍보자료	정책홍보, 급부·시설 등 안내, 기자회견자료 등
B99	기타	-

이 계획은 소정의 결과를 얻고 예정대로 2002년 종료되었다. 이후 후속 작업으

로는 2001년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 본부(IT전략본부)’가 설치되어 ‘e-Japan 전략’을 수립, 5년 이내에 세계 최고 최첨단의 IT국가가 될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는 ‘e-Japan 전략Ⅱ’가 진행 중이다.¹²⁾

2. 전자정부 측면

가. 국내 전자정부 관련 법률

「전자정부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공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으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으로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 이용 하여야 한다. 운영외주의 원칙으로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운영에 있어서 민간 부문에 그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자적 업무수행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적 급부 제공으로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정부법의 하위법은 아니지만, 실제 전자정부의 특성을 일부 감안한 개별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상법」 및 「기상산업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계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일본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이트 <<http://www.e-gov.go.jp/doc/scheme.html>>.

첫째, 「기상법」과 「기상산업진흥법」을 보면,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키고,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즉,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기상청장을 상대로 기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술이라 함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동법은 기술이전 기반의 확충에 관한 원칙과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정보 제공 촉진에 관하여 정부는 기술·기술인력·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민간협력에 관하여, 정부는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회사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정보의 유통시설 설치 등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통계법」을 보면, 통계청장은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하는 통계간행물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업적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통계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

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기록물로서 정의 하고 있으며, 이 법은 생산이 종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기록물 공개 및 열람에 관한 중요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다.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에 관하여 공공기관은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 아닌 한 국민에게 공개하고, 비공개기록물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비공개기록물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가 운영된다.

다섯째,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보면,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동법은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원칙과 범위를 규정한다. 공공정보화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식·정보의 공유·유통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 협력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위 입법들이 소송상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공정보를 규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즉,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근거는 사실상 개인적 공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개인적 공권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주관적 공권의 탐구는 행정법규가 지향하는 공익추구라는 객관적 법 의무에서 어떻게 주관적인 사익 보호의무를 도출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개인적 공권의 관념은 현대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및 사회국가 원리에 있어서 개인은 더 이상 행정객체가 아니라, 행정주체에 대해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의 지위를 향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은 이러한 개인적 공권을 매개로 하여 행정소송절차에서도 국가와 동등한 지위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을 법원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행정의 적정한 권한행사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의 현행 「전자정부법」 및 관련 법률상 정보제공은 법원을 통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공권의 보장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실제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먼저, 강행규범의 존재가 필요하다. 즉, 행정주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러한 행위위무는 행정주체에 대한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행정주체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권이 발생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법규는 공익의 실현뿐만 아니라 사익보호 역시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법규의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의 보호만을 향하고 있는 경우, 사익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해 법규범의 사익보호 목적의 인정여부는 이른바 보호규범론이 기준이 된다. 이에 따르면 사익보호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공익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들의 이익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인적 범위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 많은 전자정부의 행정 규범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집행은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재량규범에서도 일정한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개인적 공권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로운 공권의 등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강행규범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및 행정과정의 절차적 권리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행정재량의 영역에서도 이를 흠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공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익보호 목적도 함께 인정하려는 목적론적 해석이 강조되고 있고, 단순히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단순히 객관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공권으로 인정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판례는 최근 처분의 근거법령의 범위를 처분의 직접적인 법령에만 한정하지 않고, 법률의 목적과 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해 관련된 모든 법규를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강행규범 판단 자체가 구체적 사안에서 상대적 관점으로 결정되므로 명백히 전자정부 규범이 의무 규정이나 제재 규정으로 보완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개인적 공권으로 공공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은 희색 지대에 남아 있게 된다.

법제에 따라 구분하면서 정보공개제도와 전자정부시스템 관련 사례를 나누어 기재하였지만,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전자정부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제도가 그 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미국 캔사스(Kansas)주의 INK

INK(Information Network Kansas, 캔사스 정보 네트워크)는 미국의 캔사스 주가 1991년 설립한 정보공익기구이다. 즉, 캔사스 주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기구로서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데, 주요 목적은 캔사스 주 정부정보의 관리, 보존, 배포, 재생산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캔사스 주 정부의 행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INK는 전자정부의 발상지로 인정받으며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설립 근거 모범은 캔사스 주법전(Kansas State Statute)으로 주법전 제74장 제93항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INK의 설립 목적과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들을 위해 공공정보 전달기관에 전자적 접근을 허용할 것
- 공공정보 접근을 위해 교환원의 매개 없는 전자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
- 네트워크 관리자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 제공되는 공공정보의 양과 종류를 증가시키는 수단, 제공되는 공공정보의 효용과 형태를 증가시키는 수단, 공공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기반을 넓히는 수단, 적절하게 이러한 변화를 수행하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
- 정보 시스템 부서와 협력하고 INK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
- 시민과 기업의 공공정보 접근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
- 시민과 기업에게 다른 영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에 대한 접근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에게 전자우편과 일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정보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INK는 정부정보를 배포하는 단일한 대행사로 민간법인인 '캔사스 정보 컨소시엄(Kansas Information Consortium, Inc. : KIC)'을 지정하고, KIC로 하여금 네트워크 관리, 전자정부 기능, 정부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KIC는 완전히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6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999년에는 인허가 절차를 전산화하였고, 마침내 2000년 공식적인 주 전자정부로 공인되었다. 현재 캔사스 주의 전자정부인 Kansas.gov¹³⁾는 완전히 민간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정보의 제공도 실질적으로는 민간의 영역에 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캔사스 주는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보공개법상 무상공개를 예외로 보고 있다. 이는 무상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연방정부모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INK 이용약관 제6조에서 '저작권'이라는 제목 하에 “내용의 구성, 도표, 디자인, 편집물, 기타 사이트에 관련된 여타 자료들을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된다. 저작권은 주정부에 귀속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 배포, 사용, 출판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은 저작권의 이전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공공정보 자체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기본 형태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즉, 라이선스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제15조에서는 “INK는 재량으로 이용자의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INK는 저작권 위반 사실 접수 등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캔사스 주의 경우는 공공정보의 저작권을 원칙으로는 규정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예외로 주 정부공개법(Kansas Open Record Act)¹⁴⁾에 의한 공개를 예시하고 있다.

13) Kansas.gov 홈페이지 <<http://www.kansas.gov>>.

14) K.S.A. 45-215 et seq.

다. 일본의 전자정부 종합창구

2000년 2월 성립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정합의 요건에서 행정문서 파일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¹⁵⁾ 이후 같은 해 3월 각 성청 사무연락회의에서는 ‘종합적인 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를 승인하고 ‘행정문서 관리방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 성청의 행정문서 파일 관리부를 횡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종합 행정문서파일 관리시스템’과 ‘성청별 행정문서관리시스템’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정하였다.¹⁶⁾

‘종합 행정문서파일 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맞춰 2001년 4월 개시되었는데, 이것이 현 ‘전자정부 종합창구(e-Gov)’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04년 11월 각부 성청 정보화 총괄 책임자 연락회의에서 결정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관한 기본 방식(지침)’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갖춘 ‘전자정부 종합창구(e-Gov)’가 탄생되었다.

그 정보제공 시스템을 보면 각 부성의 각 기관(본 부성, 지방지분부국, 시설 등 기관)이 각각 홈페이지를 정비·운용하고 정보를 게재하는 동시에, 총무성 행정관리국에서 통일성 있고 정보에 국민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이들 각 부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색·안내하는 기능을 갖춘 ‘전자정부 종합창구(e-Gov)’를 운용한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관한 기본 방식(지침)’의 내용¹⁷⁾을 살펴보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① 행정의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② 사회적인 활용에 이바지하는 정보, ③ 법령에 의해 공표 등이 의무화되고 있는 정보, ④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개시된 정보 등에서 반복 계속적으로 개시청구가 전망

15) 일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9호.

16) 일본 국회도서관. 2009. 『종합적인 문서관리시스템 정비에 관해서(総合的な文書管理システムの整備について)』. [online]. [cited 2010.3.12]. <<http://warp.ndl.go.jp/info:ndljp/pid/283520/www.soumu.go.jp/gyoukan/kanri/sogobun.htm>>.

17) 各府省情報化統括責任者(CIO) 連絡會議決定. 2004. 『行政情報の電子的提供に關する基本的考え方(指針)』. [online]. [cited 2010.3.12]. <<http://www.e-gov.go.jp/doc/20041112doc1.pdf>>.

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의 표에 게재된 정보에 관해서는 각 부서의 홈페이지 상에 공통의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2-1> 각 성청이 홈페이지에 공통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게재하는 정보

구분	공통카테고리	제공내용
행정조직, 제도 등에 관한 기초적 정보	조직·제도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부국, 심의회, 시설 등 기관, 특별기관 및 지방부국의 내부조직, 임무, 담당 주요 사무 또는 사업 - 소재안내도(전화번호·부성메일주소 포함) - 소관행정의 개요 - 간부직원명부, 가능하면 과 등의 단위까지 전화·팩스번호
	소관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법인 및 국립대학법인(가능하면 ‘조직·제도의 개요에 준한 정보’) 등, 공익법인 및 특별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민간법인에 관한 정보
	소관법령, 고시·통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법령의 일람 및 전문 - 소관 고시·통달(법령의 해석, 운용 지침 등에 관한 것) 기타 국민 생활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통지 등(행정기관 상호 교환하는 문서 포함)의 일람 및 전문 - 신규로 제정된 법령의 전문, 개요 기타 알기 쉬운 자료 - 개정된 법령의 전문, 개정 개요 기타 알기 쉬운 자료
	국회제출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의 전문, 개요 기타 알기 쉬운 자료
행정활동의 현상 등에 관한 정보	심의회, 연구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신·보고서 등의 전문 및 개요 - 심의록의 요지 또는 전문 - 관계자료의 전부 또는 발췌
	통계조사결과	통계자료 기타 공표자료
	백서, 연차보고서 등	백서 등의 전문 및 요지
	퍼블릭 코멘트(※)	규제의 설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절차(1999년3월23일 각의결정. 2000년12월26일 일부개정)에 근거한 게재
	법령적용 사전확인절차	‘행정기관에 의한 법령적용 사전확인절차 도입에 관해서’(2001년3월 각의결정. 2004년3월 일부개정)에 근거한 게재
	신청·신고 등의 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안내 - 양식, 기입방법 및 기입 예 - 심사기준, 표준처리기간 등
	조달정보	‘가상에이전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노력에 관해서’(1999년12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결정) 및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정부조달제도의 수정에 관해서(2000년3월 정보시스템에 관한 정부조달부청연락회의 승낙)에 근거한 게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정보	예산 및 결산의 개요
평가 등에 관한 정보	평가결과 등	정책평가의 결과 등
각 구분에 공통된 정보	대신 등 기자회견	대신 등 기자회견의 개요
	보도발표자료	-
	정보공개	정보공개의 절차·창구안내정보

- 1) 상기 표를 기본으로 하나 적절한 변경은 가능하다. 단, ※표시 부분은 정부 전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다.
- 2) 게재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표 후 3년간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각 부성 홈페이지에는 게재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게재정보의 저작권, 이용, 무단개변금지 및 게재정보를 이용한 책임에 관한 기술)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 예로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저작권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

-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저작권 관련 내용

저작권에 관해서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개별 정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또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전체도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일본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는, 사적 사용 또는 인용 등 저작권법 상 인정된 행위로 적절한 방법에 의해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인용·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무단전재를 금한다’는 주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십시오. 당 홈페이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문부과학성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변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그러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특정인에 한정되고 전자적 제공에 관련된 경비가 상당한 금액을 요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에 관련된 경비의 실비를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 공개의 범위 확대를 최초로 제창한 ‘행정정보화 추진계획’ 이후에도 전자정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2002년 행정절차 등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 성립을 거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구축계획’이 각부 성청 정보화 총책임자 연락회의에서 결정되었고, 나아가서 전자정부의 조직을 한층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동 회의에서 ‘전자정부추진계획’이 확정되었다.

전자정부 종합창구시스템(e-Gov)의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① 각 성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 검색 시스템과 ② 인쇄물이나 전자매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행정정보의 소재나 입수방법을 검색하여 각 성청의 행정정보 소재안내에 링크되는 일명 종합안내 클리어링 시스템, ③ 행정절차 안내나 신청

및 신고 양식을 검색할 수 있는 종합행정서비스 시스템, ④ 법령데이터나 지리 정보 클리어링 시스템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그리고 ⑤ 각 성청의 행정 문서파일 관리시스템에 링크되는 종합행정문서 파일관리시스템이 있다.

전자정부평가위원회의 2008년도 보고서¹⁸⁾에 따르면, 총무성에서 공표한 ‘2007년도 행정절차 온라인화 상황’ 조사에서 정부 기관이 취급하는 신청·신고 절차의 온라인 이용률은 전체 이용률의 20.5%로 전년 대비 5% 증가세를 보였으나 아직은 이용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총무성에서 2008년도에 온라인 신청과 관련하여 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자증명서 취득이나 IC카드 리더의 구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개인 및 기업 모두에서 응답자의 60%를 넘는데, 이러한 점이 온라인 신청의 이용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생각된다.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의 사용 편의성에 관한 지적도 있다. 총무성의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예로 들어보면, 성청에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인터넷에서 일반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은 데이터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검색 기능도 협소하므로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무상제공이 결정된 만큼 기타 단체를 통해서 유상 배포되던 자기테이프의 제공은 정지되었지만, 정부가 만든 정보의 무상제공과는 별도로 민간업자가 부가가치를 붙여 판매하는 형식의 배포를 허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¹⁹⁾

정부가 작성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의 하나가 ‘저작권법’이나 ‘국유재산법’과의 관계였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나 공적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꾀하는 양 법의 취지는 공적 데이터의 유통 자체에 반드시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해석, 나아가서는 절차 면에서의 정비 부족이라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 및 국유재산법이 멀티미디어·네트워크 사회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현재

18) 일본 전자정부평가위원회 2008년도 보고서. [online]. [cited 2010.3.12]. <<http://www.kantei.go.jp/jp/singi/it2/hyokukaworking/dai01/sankou1.pdf>>.

19) 大塚 奈奈繪. 2001. 電子政府と行政情報. 『情報管理』. 44(6): p.439.

일본의 전자정부 정책을 비롯한 행정정보 공개 정책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적 데이터 유통 촉진의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이나 「국유재산법」과의 정합성 평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²⁰⁾

3. 국유재산 측면

가. 국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 그리고 처분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법이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적정성을 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관리·처분 여하에 따라 공공정보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유재산의 범위로서 제5조에서 부동산 등과 더불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 소위 지적재산권이 규정되어 있다. 공공정보 유통시 이 법이 근거가 되는 것은 저작권이 국유재산으로서 평가·관리되기 때문이다. 즉, 주로 유체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본 법이 무체재산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은 특정인에게 부여하면 타인은 이용할 수 없게 되나 저작물의 경우에는 복제가 용이하여 그것을 제공해도 점유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적용시 고려되어야 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2가지로 분류된다. 행정재산은 관리청이 관리할 수 있고, 일반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하게 된다.²¹⁾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부분인 경우 관리청에서는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행정재산 중에 ‘공공용 재산’이라는 항목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각 관리청이 보유하는 저작물이 그 공공용 재산이라면 이들은 이론상 각 관리청의 판단으로 사용할

20) 大橋有弘, 1997. 公的データ流通促進のための法的・制度的課題. 『情報管理』. 39(10): p.761.

21)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며(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한다(동법 제41조 제1항).

수 있다. 동법에서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거나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각 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를 국가 이외의 자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중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각 관리청에 의한 공공정보의 유통 추진은 가능하다. 보존재산의 경우에도 보존 목적을 광의로 해석하면 공공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리청이 보유하는 공공정보가 외부에 제공되고 있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것은 동법상 사용·수익허가는 이른바 완전 자유재량으로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보편적 접근을 이념으로 하는 공공정보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위 해석론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저작권을 국가재산으로 보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각 관리청 입장에서 유체재산을 기준으로 만든 내부적 과정을 모두 다시 고려해야 하는 지극히 번잡하고 어려운 사례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동법에 의하면, 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 대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재산의 증감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처분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저작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요구된다. 즉 이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대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평가액을 기입하고 처분에 따라 재산가치가 어떻게 증감되었는지를 보고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저작물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각 재산의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면, 조사표 배포부터 집계,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구축 등 일련의 작업 과정에 수백억 원을 요하는 경우 관리대장 상의 평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재산가치의 증감을 연도별로 보고하여 관리의 적정성을 꾀하려고 하는 이상, 이 평가액은 중요함에는 틀림없으나, 저작물에 관해서는 타당성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해당 범위도 기준을 정하여

통일시키기가 어려우며, 정해졌다 하더라도 전체 공공정보를 계량화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저작물의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저작물의 사본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원래 재산 가치는 어떻게 증감한 것이 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이다. 저작물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유체재산과 달리 복제에 의해 사실상 무한정 증가시킬 수 있는 것에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이것은 가령 저작물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산정이 지극히 곤란함을 의미한다.

또 그 저작물 평가액 전체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불특정다수의 복제가 가능하므로 원가계산이 어렵고 개별 요구에 대해서 복제를 제공하는 경우의 가액 설정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 복사 실비에 약간의 수수료를 더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물의 평가액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관리대장에의 기재·갱신과 관련하여, 연도단위 등 일정 기간으로 실행되는 공공정보의 수집·집적의 경우에는, 대장에 기재되는 시점은 문제없이 결정될 수 있으나, 예를 들면 관측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정보가 수집되고 갱신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시점에서 대장에 기재하고 내용을 갱신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도 대두된다. 실제로 관측정보를 대장에 기재·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배경에서 공공정보를 국유재산으로서 대장에 기재하고 평가액을 산출하여 관리하는 예는 지극히 적다.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고 관리한다는 것은 역으로 유통되기도 곤란한 것이라 하겠다.

나. 미국 국유재산법

미국 국유재산법은 연방법 제40권으로 편제되어 연방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보기술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데는 정부 차원의 투자 촉진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정보 상용화의 법적 전제는 정보가 재산의 대상이 되는 경제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공공정보가 민간에 유통되어 그 이용자의 효용을 높일 때 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된다. 이 경제적 가치에는 공공정보라는 원재료(raw material)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민간 영역은 이러한 원정보에 부가가치를 더하여 유통시킨다. 이 때 유통 형태는 공공정보라는 전체 꾸러미 중 수요에 따라 묶거나(banding), 풀어서(unbanding) 제공된다.

비록 연방정부의 저작권 보유는 부인된다 하더라도 공공정보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이외의 다른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는 당연히 가능하다.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예로 들면, 상표권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의 평판과 명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혼돈을 일으킬 위험을 줄인다. 공공기관이 공공정보에 대하여 상표권을 획득하면,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공공정보 ‘버전(version)’으로 되어 공적 신뢰성을 획득하게 된다. 나아가 상표권 이용허락을 통하여 프랜차이즈나 민간부문의 상표권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 기능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여 민간부문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매개 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나 포맷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보호도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래픽 이미지 구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적재산권 행사가 이윤 획득에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이용이 활성화되어 더 이상 공공기관의 지적재산권 행사로 인한 공적 이익의 확보가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지적재산권 행사를 축소 내지 자제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행정과정에서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롭게 부가가치가 더하여진 정보가 민간부문이나 주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민간이나 주정부 등이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 내는 산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적 보호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공공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그 선택과 배열 기준에 따라 채택된 데이터와 이를 구동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방 정부가 민간 기업과 사이에서 공공정보를 토대로 한 새로운 부가가치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 한계비용을 넘어선 고정비용 회수도 가능한 가격정책을 펼 수 있다.

한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DOE)’ 및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사무소(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 EERE)’의 사례와 같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재정적 혹은 비금전적 지원을 받아 발생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확대된 국유재산으로서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명 혁신 프로그램은 미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주요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인데, 그 중 중점적으로 육성되는 분야가 에너지 관련 발명 프로그램이다. EERE의 방침에 따르면,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기술 및 연구결과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성공적으로 상업화될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07년 8월 ‘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²²⁾을 제정하여 DOE의 예산을 향후 7년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동법 섹션 1009 ‘과학연구 성과의 발표’에서는 “연방관련 기관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자가 행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기관, 정책결정자 및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데이터가 교환됨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국유재산법’과 ‘경쟁력강화법’ 2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결국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얻어진 결과물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2)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doc.cgi?dbname=110_cong_public_laws&docid=f:publ069.110.pdf>.

제3절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

1. 공공정보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이며, 저작권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가의 여부, 즉,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인 창작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를 적용한다. 창작성이란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정신적 산물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는 미국처럼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으면 창작성을 인정해주는 경우와, 대륙법계 국가들처럼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으면서 동시에 문화발전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권 부여의 근거는 그 저작물이 저작권의 궁극적 목적인 문화발전을 유인해 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창작성이 없는 것은 비록 그것을 작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신적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문화 발전에 아무런 동인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저작물이 반드시 예술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예술성이 없는 학술논문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다만 누가 작성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한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이러한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보았을 때 공공정보도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 저작물의 영역에 포함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예컨대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들 중에 창작성이 없는 사실 그 자체의 나열에만 불과한 공문서나 창작성이 없는 대장 등은 공공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문서, 보고서, 간행물, 시청각자료, 회의록 등은 저작물성을 갖춘 ‘공공저작물’²³⁾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따라서 「저작권법」은 그 주체를 가리지 않고 저작물성을 갖춘 저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저작물도 당연히 보호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정부저작물(Government Works)에 대해 창작성은 인정되나 저작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비보호 규정을 두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왕실 또는 의회가 왕실저작물과 의회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왕실 또는 의회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저작물의 경우에도 배타적인 이용권이 발생하여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정부부처의 공무원이 작성하여 국가기관 명의로 공표하게 되면 「저작권법」상 단체명의 저작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²⁶⁾

그러나 공공저작물의 성격상 다른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공공저작물은 업무의 결과로서 당연히 생산되는 것이며, 그 노력의 대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23)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정해진바 없으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저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4) 정경희. 상계서. p.169.

25) 미국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 : 미국 정부저작물.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본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양도, 유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할 수는 있다.

26) 김윤명. 2009. 『패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147-153.

이미 지불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저작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견지에서 정책적으로 특정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밖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성질을 갖는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 등은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일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한편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자체적으로 생산한 정보의 경우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저작권에 대한 제반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정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는 저작 권리는 위탁받은 기관이 갖게 된다. 다만 외부 위탁에 의해 발생된 저작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공공기관이 갖는다는 별도의 계약이나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제반권리는 공공기관이 갖게 된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외부기관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탁 등의 경우와 같이 저작물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권만 갖게 될 뿐 저작권에 대한 제반 권리의 보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공공기관이 다른 저작물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 또는 2차적 저작물로 가공하여 생산할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저작물의 가공으로 인해 발생된 또 다른 저작물에 대한 일부 저작권은 보유하게 된다.

2. 저작권법 적용의 유형

가. 공공정보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공정보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로서 이는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 형식에 부합한다. 전통형 보장은 현행 법제도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므로 기존 권익을 유지·보존하는데 적합하고, 기존 법제도의 틀을 변형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정보 확산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려는 정책 취지에 반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해 관계자나 관련 기업들에 의하여 상당한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작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해 집단의 대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경쟁력 있는 공익적 정보 제공에도 대응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의 특성상 법적 강제를 위한 행정·사법의 사회적 비용도 크므로 정책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가 실제로 적용되는 개념으로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로써 국내 저작권위탁관리제도와 일본의 저작권관리사업제도가 있다.

(1) 국내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개별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해 각 권리자에게 분배함으로써 다수의 권리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저작권집중관리’란 “특정 집단이 저작자를 대신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물 및 인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²⁷⁾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물의 모든 이용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용자 역시 일일이 저작권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저작물의 대량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 저작자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물의 개별관리의 어려움 속에서 저작물의 통합 관리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발전해왔다.

저작권관리에 대한 관심은 국가마다 유사하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하고 관리하는지는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업을 자유직업으로 하여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저작권관리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입법례를 본받은 셈이나, 그 중에서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제도를 따르지 않고 저작권법에서 직접 허가제와 신고제로 규율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나 저작물 등을 권리자를 대신하여 ‘신탁관리’하거나 ‘대리중개’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27) WIPO. 2006.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line]. [cited 2010.3.12]. <http://www.wipo.int/about-ip/en/about_collective_mngt.html>.

-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27호

제2조(정의)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인 신탁업체에게 이전된다. 신탁관리단체는 수탁 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신탁자인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수탁 받은 권리의 주체, 즉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신전속권의 성질을 가지는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들 위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되 그 요율 및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중관리단체는 12개가 있다.²⁸⁾

(2) 일본의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²⁹⁾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을 행하

28)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언론재단,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3.12 현재, <http://www.copyright.or.kr>).

29)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http://www.bunka.go.jp/chosakuken/kanrijigyohou.html>>.

는 자에 대해서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저작권관리사업은 60년 이상에 걸쳐 「저작권관련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법적 기반을 정해 왔으나, 업무실시 허가제 때문에 신규 참여가 제한되고, 저작물 이용계약의 매개 행위 등 원 권리자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적은 형태까지 ‘저작권관련 중개업무’로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범위가 소설, 각본, 악곡을 동반하는 경우에서의 가사 및 악곡에 제한되어 현재의 저작물 이용실태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한편 위탁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저작권관련 중개 업무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을 2000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구 중개업무법과 신 관리사업법을 비교해 보면,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은 신규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고쳤고,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위탁자가 저작권 등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준한다고 생각되는 형태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관리 형태만을 ‘저작권 등 관리사업’으로서 규제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용 실태 변화에 대응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미치는 모든 분야(저작물 일반, 실연, 레코드, 방송, 유선방송)로 확대하고 위탁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동시에, 저작물 등의 사용료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사용료 규정 인가제 폐지와 함께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재정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본 법에서 ‘관리사업’이란 제2조 제2항에 나와 있듯이 ‘관리수탁계약(위탁자가 인적 관계, 자본관계 등에서 수탁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³⁰⁾에 근거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기타 저

작권 등의 관리를 행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리위탁계약’이란 법 제2조 제1항과 같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권 등을 이전하고, 저작물 등 이용허락 기타의 해당 저작물 등의 관리를 행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물 등 이용허락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도록 하고, 더불어 해당 중개 또는 대리에 동반하는 저작권 등의 관리를 행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에서, 수탁자에 의한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 이용허락 시 위탁자(위탁자가 해당 저작물 등에 관련된 다음에 게재하는 계약의 수탁자일 때는 해당 계약의 위탁자)가 사용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³¹⁾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는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관리위탁계약 약관을 정하고 사전에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또한 변경 신고 시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신고에 관련된 관리위탁계약약관의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관리위탁계약은 반드시 계약 약관에 근거하여 행해야 하고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는 이용구분 별 저작물 등의 사용료 금액이 기재된 사용료 규정을 정하고 사전에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관리사업자는 사용료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이용자 또는 그 단체가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료 규정을 신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공표해야 한다. 저작물 사용료 청구 시에는 반드시 사용료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 한편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는 실시금지기간³²⁾ 중에는 사용료 규정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급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 등의 번호, 명칭 기타 취급하고 있는 저작물 등에 관한

30) 친족 간의 계약,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계약 등에 관해서는, 위탁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관리가 행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1) 허락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료 금액 결정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경우(소위 비밀임형 관리)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관리하는 소위 자기관리와 같은 관리 형태로서 위탁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권리자가 자기가 소속된 단체를 통해서 관리사업자에게 권리행사를 재위탁하는 경우 등에 관해서는, 사용료 금액 결정권이 해당 단체가 아니라 권리자 자신에게 유보될 필요가 있다.

32) 문화청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간.

정보, 그 저작물별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문화청 장관은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에 대해서 그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관하여 보고 받고, 문화청 직원이 사업소에 방문하여 업무 상황이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의 업무 운영에 관해서 위탁자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자 또는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관리사업자에게 관리위탁계약 약관 또는 사용료 규정의 변경 기타 업무 운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사업자가 동법이나 동법에 근거한 처분을 위반했을 때 및 부정한 수단을 통해 등록을 받았을 때는 문화청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 등 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리를 명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구 중개업무법에서는 저작물 사용료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청 장관의 인가가 필요했지만,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에서는 사용료 규정을 문화청 장관에게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30일 간의 실시금지기간이 경과하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복수의 관리사업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도 적절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시장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관리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사업자가 고액의 사용료를 결정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원활한 이용이 저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사태를 피하고 이용자 측의 의향이 반영된 사용료 규정이 작성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재정제도이다.

문화청 장관은 사용료 금액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큰 관리사업자를 ‘지정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로 정한다. 지정 요건은,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지정관리사업자에는 ① 어느 하나의 이용 구분에서 모든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가 수령한 사용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그 수령 사용료 금액의 비율이 상당한 비율인 자, ② 그 사용료 규정이 해당 이용구분에서의 사용료 금액의 기준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저작물 등의 원활한 이

용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자의 2가지 타입이 있다.

지정관리사업자는 이용자대표(이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응할 의무가 있다. 지정관리사업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를 안 좋게 끝난 경우에는 이용자대표의 신청에 의해 문화청 장관이 협의 개시 또는 재개를 명하게 되어 있다. 협의를 개시되거나 또는 재개 명령이 행해져, 당사자 간에 협의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문화청 장관이 재정을 행하도록 하고, 지정관리사업자는, 협의를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근거하고, 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료 규정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2010년 1월 현재 지정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2005년 12월 9일 지정)
- (협)일본각본가연맹 (2002년 3월 7일 지정)
- (협)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 (2002년 3월 7일 지정)
- (사)일본복사권센터 (2002년 3월 7일 지정)
- (사)일본레코드협회 (2002년 3월 7일 지정)
-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2002년 3월 7일 지정)
- (중)출판물 대여권관리센터 (2008년 5월 12일 지정)

그러나 법 시행 10년을 맞고 있는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든 집중관리단체가 독점적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되면서 위탁받은 권리를 남용하여 권리자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권리처리 취급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집중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

효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³³⁾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를 예로 들어 일본 저작권 등 집중관리사업 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권리자(작사자·작곡자·음악출판자)들은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위탁할 때 저작권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저작권 관리 범위, 관리방법 등을 정한다. 위탁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할 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맡기게 되는데 이때 저작자인격권은 제외된다.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부터 모든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나, 위탁받는 권리 범위 중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지분권(연주권·녹음권·대여권·출판권 등)이나 이용형태(CM송신용 녹음, net 배신 등) 별로 자기가 관리를 하거나 다른 저작권 관리사업자에게 권리를 위탁하는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작품별 선택은 불가하다.

한편 1977년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및 (사)일본레코드협회의 3단체가 사적 녹음녹화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문화청장관에게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제도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저작권심의회의 오랜 검토 끝에 1993년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제30조 제2항이 추가되었다.

-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2항

제30조

②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갖는 기기’(방송 업무를 위한 특별한 성능 기타 사적 사용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특별한 성능의 것 및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 기타 본래의 기능에 부속되는 기능으로서 녹음 또는 녹화 기능을 갖는 것을 제외)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용으로 사용되는 기록매체이며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녹음 또는 녹화를 행하는 자는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33) 음악의 경우 대량으로 사용되므로 집중관리·포괄처리가 불가능하면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의한 관리가 필수이지만, 각본 및 소설의 경우에는 사용빈도가 낮고 개별 권리교섭이 가능하므로 각본의 경우 관리사업자가 개별 교섭하고 있다.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제도’는 이제까지 자유롭게 무상으로 행해졌던 사적 녹음 및 녹화에 관해서 권리자가 입는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령에서 지정된 디지털방식의 기기·기록매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녹음 자체는 자유롭게지만 권리자(작곡자나 작사가 등의 저작권자, 가수나 연주가, 배우 등의 실연가, 레코드 제작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의해 그 징수를 개별 권리자가 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사)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만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는 징수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분배할 때 저작권자·실연가·레코드제작자의 각 구분에 따라 관계단체에 분배를 위임한다. 즉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사)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로부터 저작권자 구분을 대표하는 한 단체로서 사적녹음보상금을 수령하고 개별 권리자에 대해 분배업무를 행하는 것이다.

상기 보상금의 분배는 (사)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 및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사적녹음보상금분배규정’³⁴⁾에 근거하여 행하게 된다. 이 분배규정에 따르면 본래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관리업무는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위탁자에 한정되지만, 사적녹음녹화보상금 분배에 한해서는 위탁자뿐 아니라 비위탁자에게도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공공정보의 저작재산권은 제한하고,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견해

이것은 주로 공공정보의 저작재산권은 제한하고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실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정보 이용자의 입장을 극대화한다.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 제도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규정으로서 이 견해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 CC)도 이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로 그 제한되는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표준이용허락 약관을 제정하여 저작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있다. 이를 자

34) 일본의 사적녹음보상금분배규정 <http://www.sarah.or.jp/sarah/sarah05_i.html>.

세히 설명하면, 먼저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성명표시마크로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조건의 공유마크를 붙이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작품에 같은 조건을 붙이는 범위 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인정한다. 또 비영리적 이용마크는 비영리적 이용에 한하여 복제, 배포가 가능한 것이다. CCL은 이러한 3가지 마크를 조합하여 다양한 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이용 라이선스(free license)이다. 자유이용 라이선스는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취지인 일련의 라이선스들을 일컫는 것으로 공중 이용허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인 이용허락의 한 종류이다.³⁵⁾ 다만 보통의 이용허락과는 달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방법과 조건이 부가된 모든 이들의 이용을 허락하는 포괄적 의사표시를 미리 해버리고 이용자는 저작권자와의 개별적인 교섭 없이 위 의사표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먼저 공정이용의 개념을 살펴본 후 이어서 자유이용 라이선스의 대표격인 한국식 CCL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 사례보다는 좁은 의미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례로서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의 법정허락제도와 유럽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공정이용

‘공정이용’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흔히 ‘자유이용(free use)’이란 용어로 언급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폭넓은 의미에서의 ‘공정이용’ 기준에 대해서는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35)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여기서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즉,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과는 무관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말한다. 공정이용 법리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판례에 의해 발달되어 온 것으로 성문법인 1976년 저작권법에 수용된 공정이용(fair use)을 말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이라는 일반 규정은 없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로서 공정이용은 비평, 논평, 시사 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구체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몇 가지 요건을 참작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은 단순히 저작권에 대한 침해 책임에 대한 예외 또는 침해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역할에 한정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다.³⁶⁾

공정이용의 법리는 저작자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저작권법을 기술적으로는 위반하였으나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위반하지 않은 이용을 의미한다.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히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침해의 자유를 허용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되는 표현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우회하는 재창작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나아가 문화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이용으로 판단한 사례에 있어 법원의 결론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고려 요소는 ‘사용목적 및 성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며, ‘저작물의 성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연구결과³⁷⁾는 그러한 공정이용의 의의를 잘 반영한다. 즉 ‘공중에 대한 편익’과 ‘보상금청구권’ 등에 가장 비중을 두는 저작권법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36) 류종현, 2008.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214-226.

37) 이규호, 서재권, 2009.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pp.136-155.

이에 국내에서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한편, ‘자유이용(free use)’은 특정한 경우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정이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정이용이 일반적인 저작권의 제한에 대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자유이용은 저작권의 제한 규정을 포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의미한다.³⁸⁾

좀 더 자세히 자유이용의 개념을 살펴보면, 협의, 광의, 최광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자유이용을 협의의 범위로서 본 것으로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라고 하면 대개 이러한 협의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광의의 자유이용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법정허락제도까지 포함된다.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유이용에 대한 정의는 자유이용을 광의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넓게 보는 최광의의 자유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조약상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인의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을 지난 저작물 등의 자유이용을 포함한다.³⁹⁾

우리나라 저작권법 관련 서적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이용’이라는 용어를 ‘공정이용’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이용 라이선스 등의 ‘자유이용’ 개념과 구분하기 위하여 ‘공정이용’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3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 제5호 : “자유이용정보”라 함은 저작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되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학술·문화·산업·과학기술 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말한다.

39) 오승중, 이해완. 2005. 『저작권법』. 제4판. 서울: 박영사. p.329.

(2)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⁴⁰⁾은 2001년 스탠포드 로스쿨의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 의하여 시작되었는데,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에게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이다.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어떠한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하여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추출한 다음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몇 가지 유형의 이용허락규약을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다. 저작자들은 그중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들은 그 저작물에 첨부된 라이선스 내용에 따라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한 저작권자로부터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⁴¹⁾

CCL의 조건은 4가지 기본 조건, 즉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조건 중에서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라이선스가 된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이나, 저작자표시는 필수조건으로 모든 CCL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운용되는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이다(<표 2-2> 참조).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CCL은 미국의 저작권법에 기반을 둔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2003년부터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각국의 법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 후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2010년 2월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2개국이⁴²⁾ 고유의 CCL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40)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creativecommons.or.kr>>.

41) 정진섭, 이미영. 2009.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p.53.

42) 과테말라,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베트남, 아일랜드 등 9개국에서⁴³⁾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2-2> CCL의 유형

이미지			
조 건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권표시 변경금지
텍스트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URL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kr/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
이미지			
조 건	저작권표시 비영리	저작권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권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텍스트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URL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이완, 태국,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아르헨티나(2010.2.24 현재).

43) 그루지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집트(2010.2.24 현재).

(3) 정보공유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는⁴⁴⁾ 국내 NGO인 정보공유연대가 만들어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2002년부터 정보공유운동을 펼쳐온 정보공유연대는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을 발표했고, 2005년 9월에는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내용은 CCL과 거의 비슷하게 2차적 저작물 작성허용 여부와 영리적 이용여부를 이용허락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① 영리적 이용허용과 개작허용 ② 영리적 이용불허와 개작허용 ③ 영리적 이용허용과 개작불허 ④ 영리적 이용불허와 개작불허 등 총 네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가 선택될 수 있다.

다만 CCL과 달리 카피레프트 조항을 원칙으로 채택하여 개작허용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개작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배너	 정보공유라이선스	
심볼	 허용	 개작금지
	 영리금지	 영리금지·개작금지

(그림 2-2)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아이콘

정보공유라이선스는 CCL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국내 고유의 라이선스를 만들어 정보공유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확산을 위한 활동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⁵⁾

44)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 <<http://www.freeuse.or.kr>>.

45) 정진섭, 이미영. 상계서. p.45.

(4) 법정허락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법정 또는 강제허락제도이다. 특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제도’라고 하고, 저작권자에게 이용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제도’라고 한다.⁴⁶⁾

즉, 강제허락은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과 저작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3자인 정부기관이나 특정 단체의 허락을 받고 그 허락 조건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반면, 법정허락은 저작권자의 허락은 물론 제3자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일정의 사용료만 내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추세에 의하면 강제허락에 해당하고, 넓은 의미의 강제허락에는 법정허락도 포함된다.⁴⁷⁾

-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52조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46) 송영식, 이상정. 2009. 『저작권법개설』. 제5판. 서울: 세창출판사. p.232.

47) 김기태. 2005. 『저작권법개설』. 서울: 이체. p.151. (최영목 위음. 2009. 『미디어콘텐츠와 저작권』. 서울: 논형. p.173. 재인용).

-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52조(계속)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5) 복유립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 ECL)

전통적으로 저작자 및 기타 권리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왔지만, 대량 이용의 상황에서 권리자가 그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용자 측에서는 그가 필요로 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수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권리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성립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인 권리자의 권리만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회원 관리자의 저작물에 관해서도 이용자의 편의와 비회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한 법적·기술적인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창출된 제도가 복유립국가의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 ECL)이다.

1970년대부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5개 복유립 국가들이 저작권법에 규정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타협책으로 대표성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 자발적 이용허락 계약의 효력이 위탁관리를 맡기지 않은 모든 저작자에게 미치도록 의제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한 정당한 이용자가 법 위반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⁴⁸⁾

즉 비회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은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없는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이용자와 체결한 ECL계약상의 이용허락은 이용자에게 ECL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비회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비회원 저작권자들은 회원 저작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회원 및 비회원 저작권자 모두는 각각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동일한 계약상의 이익을 취득한다.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가 체결한 계약이 위탁을 하지 않은 권리자에게 효력이 확장되는 것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그 적용범위는 대체로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 라디오 및 TV프로그램의 재송신, 교육목적을 위한 라디오 및 TV프로그램의 녹음, 녹화, 인쇄물의 복사기에 의한 복제 등에 국한된다. 또한 이용자가 특정 분야의 저작자 다수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와의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집중관리단체에 권리를 위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동종의 저작물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다.⁴⁹⁾

그리고 ECL의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도 포함시키게 되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대한 사용료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ECL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는 주로 단순 복제와 전송행위에 국한된다.⁵⁰⁾

ECL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회원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ECL제도에서는 비회원 저작권자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회원 저작권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원하지 않는 경

48) 방석호. 200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327-328.

49) 상계서. p.329.

50) 윤종수. 2008.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계. 『저스티스』. 통권 106호: p.426.

우에는 배타적 독점권을 여전히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ECL제도로 인해 특정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부여된 이용허락권 안에서 이용 가능한 저작물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용허락이 용이해진다. 셋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입장에서 보면, ECL제도로 인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 가치가 증대된다.⁵¹⁾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ECL제도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비회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들 수 있다. 현재 ECL제도에서는 비회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비회원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 거부권을 부여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부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 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은 비회원 저작권자에게 있다.

둘째, 비회원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해 반대할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그러한 이용허락 거부 의도를 각각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회원 저작권자의 책임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저작권자가 하나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해당 저작권자가 가입하지 않은 다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물 이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⁵²⁾

셋째, 비회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ECL제도에 의거해 이용된다면 그 저작물이 이용된 사실을 승인하는 것과 어떠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그러한 저작물을 이용허락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용을 허락한 단체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비회원 저작권자의 책임이 된다.

51) David Sinacore-Guinn. 1993.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pp.404-405.

52) David Sinacore-Guinn. *supra* note. p.405.

다. 공공정보의 저작인격권은 제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인정하는 견해

공공정보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인정하는 견해, 반대로 공공정보의 저작인격권을 제한하고, 저작재산권은 인정하는 견해는 저작활동 격려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공공정보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일부는 내용상 제한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제한되는 저작권의 내용은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으로서, 공공정보의 공표권이 제한되면, 공공정보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저작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작자에게 공표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작물이 사적 소유일 때 소유권의 전속성 또한 사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사적 영역의 문제에 관하여 저작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공공정보가 비록 형식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해도 본래 사적 성격을 띠는 소설이나 가곡, 회화 등의 예술 작품과는 달리 작품의 사적 성격에서 유래하는 공표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다른 적용 제외 사유, 예를 들면 국가 안보나 사회 질서 상의 최소한의 제약 외의 제한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 그 결과 공공정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시장 기구에 의한 유통 극대화를 도모하면서도, 저작물성을 공공복리에 의하여 일정 부문 제한하여 제외 극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제3장 공공정보 저작권 관련 해외사례



제1절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

제2절 저작재산권은 제한하고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사례

제3절 저작인격권을 제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인정하는 견해

제3장 공공정보 저작권 관련 해외사례

이 장에서는 공공정보의 저작권을 다루는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 관련 제도를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절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

1. 영국의 저작권 제도

가. 왕실 저작권(Crown Copyright)

왕실 저작권은 「1988년 저작권, 의장,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의 섹션 163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출판국(HMSO) 또는 관리 및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저작물”이다.⁵³⁾

이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격을 갖추며, 왕실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의 최초 소유주가 된다.

- 왕실 저작권 정의 조항

제163조 (왕실 저작권)

- (1)왕실 또는 왕실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 수행상 제작한 저작물은—(a)제153조 제 1항(저작권 보호 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b)왕실은 그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
- (2)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편에서는 “왕실 저작권”이라고 한다.
- (3)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왕실 저작권은 다음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a)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125년의 기간이 지난 때까지 또는, (b)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75년이 경과되기 전에 상업적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최초 발행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때까지.

53) 관리 및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베이스는 『1997년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 규정 1997(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 Regulations 1997)』의 보호를 받는다. 1958년 공공정보법, 1937년 스코틀랜드 공공정보법, 또는 1923년 북아일랜드 공공정보법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에 따라 공공열람이 가능한 공공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는 관련 법이 지명하는 공무원의 권한에 의해 또는 권한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권리에 대한 침해 없이 재사용할 수 있다.

• 왕실 저작권 정의 조항(계속)

- (4)공동저작물에서 그 저작자의 전부가 아닌 1인 또는 그 이상의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 조는 그 저작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5)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에 명시된 제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의 규정은 그것이 다른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왕실 저작권에 적용된다.
- (6)이 조는 의회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또는 그 한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4조 (법률 및 조치에 대한 저작권)

- (1)왕실은 의회의 모든 법률(스코틀랜드 의회의 법률, 웨일즈 국회의 조치, 웨일즈 국회의 법률) 또는 영국교회 총회의 조치에 대한 저작권에 관하여 자격을 가진다.
- (2)그 저작권은 왕실의 재가가 있는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때까지 왕실의 재가에 의하여 존속한다.
- (3)이 편에서 왕실 저작권은 이 조의 저작권을 포함한다;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의 규정은 다른 왕실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 (4)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되지 아니한다. (a)영국 교회 총회의 조치나 법률의 경우, 왕실의 재가가 있는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때까지 그리고 (b)웨일즈 국회의 조치의 경우, 의회에서 왕실의 재가를 받은 그 해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때까지

정부생산 저작물의 범위⁵⁴⁾ 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 정부저작물의 범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입법 및 사법적 성격의 저작물	의회 활동
	법률문서, 규율 및 명령
	칙령서 및 하원문서 시리즈로 출판된 기타 부서의 문서
	법원판결 및 재판기록
실제 법령시행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인 준입법적인 (quasi-legislative) 성격의 저작물	교통법규와 같은 정부행동법규
	부처의 절차매뉴얼 출판본
	정부 양식
	정부 포스터 및 사인
	국가 커리큘럼
	건물규정승인 문서와 같은 법률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
	정부 안내장

54) U.K. Government. 1998. *Crown Copyright in the Information Age*. HMSO. Green Paper. [online]. [cited 2010. 3.12]. <<http://www.uk-legislation.hmso.gov.uk/advice/crown-copyright/crown-copyright-in-the-information-age.pdf>>.

<표 3-1> 정부저작물의 범위(계속)

대중유포를 위해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정보	언론통지
	정부 전단 및 브로셔
	표제통계
	자문문서
	부처별 연간 보고서 및 보도
전문 청증을 주 대상으로 한 자료	국방부가 국방계약자들이 국방계약의 감시를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공포한 규범을 비롯한 기술규범
	의학적 분류
	과학 데이터
	리서치 문서 과학자 및 정부 내의 전문가들이 생산한 과학, 기술, 의학적인 성격의 논문
정부가 생산한 부가가치물 또는 자유재량물 (discretionary works)	부가가치 통계 데이터
	지도데이터 및 관련 제품
	공인이력
	사진, 삽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부가 생산한 일반적인 저작물 예) 운전면허 시험 통과하기 도움말, 공공정보국 가이드
	민간부문의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정부가 개발하는 데이터 베이스 제품 예) DTI 시장 연구
보안사항이 담긴 자료 또는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자료	컴퓨터 텍스트 복구 소프트웨어
	보안사항을 포함한 문서
	출생, 결혼, 사망, 지목, 기업등록, 또는 기타 공공등록의 복사본 또는 일부와 같은 법적 등록 및 기록
	여권, 운전면허, 출생증명, 사망증명, 결혼증명과 같이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하여 보안적인 조건 하에 생산한 표준 문서
보안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출판 문서	정부 로고
	공공기록보존소, 스코틀랜드 기록보존소, 북아일랜드 공공 기록보존소, 또는 대법관에 의해 승인된 보관 장소에서 공공이 접근 가능한 모든 미디어 공공 기록
	여당 문서 및 연설의 텍스트
공공물의 오타배열	-

- 왕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저작물의 저작권⁵⁵⁾

- ① 일반

정부기관 및 부서는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비왕권(non-Crown)의 개인 및 기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어떤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적으로 저작권의 소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위임업무의 저작권이 왕실로 양도되거나 또는 이전되어야 한다고 위임 계약에 특별 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게 된다. 즉, 위임 계약상 동의가 없이는, 위임하는 정부기관 및 부서에게 해당물을 재생산하거나 또는 출판할 수 있는 자동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② 위임업무의 저작권을 왕실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업무의 저작권을 왕실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시 위임 계약에 다음과 같은 관련 조항을 만들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을 왕실로 양도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목표 청중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위임 정부기관이 HMSO로부터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저작권 양도⁵⁶⁾

본인 [저자의 성명] 은 [날짜/연도] 에 본인과 [해당 부서명] 간의 본 계약서에서 정의한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제목] 에 대해 본인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저작권과 저작권의 성질로부터 비롯된 모든 권리를 왕실을 대표하여 [해당 부서명] 에게 본 계약을 통해 양도한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성명: _____

증인: _____

증명날짜: _____

증인성명: _____

55)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1999. *Copyright in Works Commissioned by the Crown*. Copyright Guidance. August 31, 1999(Revised March 15, 2008). [online]. [cited 2010.3.12]. <<http://www.opsi.gov.uk/advice/crown-copyright/copyright-guidance/copyright-in-works-commissioned-by-the-crown>>.

③ 왕실로 양도/이전된 위임업무의 저작권의 성격

엄밀히 말해서 왕실 또는 정부기관으로 양도된 위임업무의 저작권은 왕실 저작권과는 구별된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왕실 저작권은 출판된 해로부터 50년의 보호를 받는 반면, 저작권이 왕실로 양도 또는 이전된 위임업무의 저작권은 일반적인 저작물의 보호기간과 같은 기준인 저자 사망해로부터 70년의 보호를 받는다. 즉, 저작권을 왕실로 양도 또는 이전하는 행위가 보호기간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④ 정부기관이 저자 또는 고용사업체가 저작권을 소유하도록 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저자 또는 고용사업체가 저작권을 소유하도록 두는 것을 선택한 경우, 해당 정부기관은 그 기관 또는 왕권의 기타 부서가 해당물을 재사용하기 위한 영속적이고, 반복할 수 없는 형태의 이용허가에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해당물 생산 시 생산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보유자의 동의가 없이 해당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속적인 이용허락에 대한 권한을 미리 조치하게 되면, 해당 정부기관이 해당물을 사용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마다 저작권소유자에게 이용허락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영국의 이와 같은 저작권 제도에 대해 정부정보를 자유롭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97년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는 한편 왕실 저작권에 대한 검토를 거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 3월에 ‘왕실 저작권 관리의 미래’⁵⁷⁾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행하였다.

이 백서에서는 제한 없이 이용되는 것이 정부에게 이익이 되는 공기록에 대해서 왕실 저작권이 보류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용

56) ibid. Annex A-Sample Commissioning Contract. [online]. [cited 2010.3.12]. <<http://www.opsi.gov.uk/advice/crown-copyright/copyright-guidance/copyright-in-commissioned-works-annexa.doc>>.

57) U.K. Government. 1999. *Future Management of Crown Copyright*. HMSO. White paper. [online]. [cited 2010.3.12]. <<http://www.opsi.gov.uk/advice/crown-copyright/future-management-of-crown-copyright.pdf>>.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공기록 보존기관에 기탁되는 시점에서 미간행된 공개 열람 자료로서 법률, 법률에 대한 설명, 정부의 고지, 정부의 형식(forms), 정부 자문서(예컨대, 정부 녹서), 정부 공식 웹사이트 상의 정부 문서, 상위 수준의 통계(headline statistics), 과학·기술·의학 분야 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정부 해명 기사, 수상 연설문 등이다. 백서는 이들 왕실 저작권이 면제된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출처와 그 저작물이 소장된 공기록 보존기관의 이름을 복제물에 명시하고, 내용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복제물의 경우에는 최종 이용자에게 적절한 라이선스나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나 차트로 이루어진 미간행 육지측량부와 공기록보존소에서 창작한 공기록에 대한 마이크로 및 디지털, 사진 복제물은 왕실 저작권이 면제되는 자료에서 제외된다.⁵⁸⁾

나. 의회 저작권(Parliamentary Copyright)

의회 저작권은 「1988년 저작권, 의장,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의 섹션 165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하원이나 상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다.

이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격을 갖추며, 해당 저작물을 지휘 또는 통제한 상원 또는 하원이 그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주가 된다. 상원과 하원이 함께 해당 저작물을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이 저작권의 최초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의회생산 저작물의 범위는 ① 의회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 수행상 제작한 저작물, ② 의회의 의사절차 녹음물, 영화, 생방송물이며, 다만, 단순히 의회가 위촉하였거나 의회를 대신하여 위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것은 저작물이라 보지 않는다.

58) 정경희. 상게서. p.172.

• 의회 저작권 정의 조항

제165조 (의회저작권)

- (1)상원이나 하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은—(a)제153조 제1항(저작권 보호 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b)의회는 의회가 제작한 저작물,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자가 되며, 양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일 경우, 양원이 최초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 (2)그러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편에서는 “의회 저작권”이라고 한다.
- (3)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대한 의회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까지 존속한다.
- (4)이 조의 목적상 하원이나 상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의회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 수행상 제작한 저작물, (b)의회의 의사절차의 녹음물, 영화, 생방송; 다만, 단순히 의회가 위촉하였거나, 의회를 대신하여 위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라 보지 아니한다.
- (5)공동저작물에서 그 저작자가 전부가 아닌 1인 또는 그 이상이 하원 또는 상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행동하는 경우, 이 조는 그 저작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6)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에 명시된 제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의 규정은 그것이 다른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의회 저작권에 적용된다.
- (7)이 조는 또한 추밀원령이 명시하는 예외나 수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의 다른 입법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편에서 말하는 “의회 저작권”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8)제7항의 추밀원령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다. 클릭유즈 라이선스(Click-Use License)

클릭유즈 라이선스는 왕실 저작권 정보, 공공부문 정보, 의회 저작권 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온라인 이용허락을 칭하는 용어이다. 클릭유즈 라이선스의 종류에는 현재 ‘PSI 이용허락’과 ‘의회 이용허락’이 있다.⁵⁹⁾

<표 3-2> 클릭유즈 라이선스의 종류

이용허락종류	범위	비용청구여부
PSI 이용허락	주요 왕실 저작권 정보와 공공부문 정보	X
의회 이용허락	의회 저작권 정보	X

59) 부가가치가 첨부된 왕실 저작권 정보에 대한 클릭유즈 라이선스인 ‘부가가치 이용허락’이 있었으나, OPSI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이를 철회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1) PSI 이용허락 (PSI License)

PSI 이용허락의 대상 정보는 정부사업에 필수적 요소, 정부정책 설명자료, 해당정보에 대한 유일한 출처, 영국과 유럽 모두에서 법에서 규정, 국민들이 해당정보가 정부와 관계가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길 경우, 그리고 해당 정보를 생산하거나 발행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등 왕실 저작권과 클릭유즈 사용허가를 통해 재사용을 허가하도록 OPSI에 권한을 위임한 공공부문기구에 의해 생산된 공공부문 정보를 다룬다.

그러나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자료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SI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 영국 의회 기록
- 스코틀랜드 의회 기록
- 북아일랜드 의회 기록
- 법원양식
-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지방을 위한 정부언론통지
- 잉글랜드교회의 전체종교회의 조례
- 웨일즈의 국가활동계획
- 출생, 사망, 결혼 및 민간 파트너십 증명서, 혼인등록
- 스코틀랜드 행정언론통지
- 스코틀랜드 (행정기관의)명령
- 웨일즈하원이 만든 것을 포함한 행정명령
- 북아일랜드의 법적 규정
- 영국 법률
- 공공에게 공개가 된 비출판 공공기록

그리고 다음의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PSI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
- 중앙정보국(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 국방과학기술연구소(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 운전기준청(Driving Standard Agency)
 - 운전면허청(Driving Vehicle Licensing Agency)
 - 소방학교(Fire Service College)
 - 토지등록청(HM Land Registry)
 - 보건부의약품규제위원회(Medicines Control Agency), (Medical Devices Agency), 의학기구위원회(Medical Devices Agency), 영국약전위원회(British Pharmacopoeia Commission)등을 포함한 보건의료규정위원회(Medicines and Healthcare Regulatory Agency)
 - 기상청(Met Office)
 - 육지측량부(Ordnance Survey)
 - 스코틀랜드 등록청(Registers of Scotland)
 - 영국수로측량청(UK Hydrographic Office)

또한 다음의 분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자료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SI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다.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 왕실이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
- 부서별 로고
- 다이어그램, 기술적인 그림, 보다 광범위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타자료
- 보안분류, 법적 및 정책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료
- 군사훈장, 배지, 및 기장
- 개인에 관련된 개인정보
- 사진·영화 보관소에 있는 사진 및 영화
- 왕실문장
- 부서의 기밀문서취급인가가 필요한 경우
-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부가가치 자료로 분류되는 경우

한편, OPSI는 2009년 12월 1일부로 부가가치 이용허락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 정보로 여겨지던 대부분의 정보는 이제부터 'PSI 이용허락' 하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출판국(HMSO)의 감사관이 수여한 권위의 위임 하에 그들이 생산한 왕실 저작권 자료에 대한 재사용 인가를 내어주는 정부부처 및 기관⁶⁰⁾, 운영기금에 의하여 생산된 정보 및 데이터는 예외이다.

(2) 의회 이용허락(Parliamentary License)

의회 이용허락은 의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하원과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상원(House of Lords of the Westminster Parliament)이 생산한 자료들을 다루며, 참고로 의사록의 방송은 의회 저작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하원 : 비즈니스 페이퍼(Business Paper), 공공정보 및 공공서비스, 리서치 및 기초지식, 하원행정
- 상원 : 상원일정, 멤버십 및 멤버십 서비스, 행정, 방문자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

재사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클릭유즈 라이선스의 종류를 선택하고, 온라인 면허 시스템인 Click Use 웹사이트⁶¹⁾를 방문하여 해당 이용허락을 신청하면 된다(<표3-3> 참조).

60) 예: 기업청(Companies House), 운전평가위원회(Driving Standards Agency), 운전면허청(Driving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토지등록청(Land Registry), 기상청(Met Office) 등.

61) 클릭유즈 라이선스 홈페이지 <<http://www.opsi.gov.uk/click-use/system/online/pLogin.asp>>.

<표 3-3> 클릭유즈 라이선스 획득 방법

- 1) “Click Use”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다(등록은 무료).
- 2)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다.
- 3) “이용허락신청(Apply for a Licence)”를 클릭하고 공공부문정보 이용허락(PSI Licence), 부가가치 이용허락(Value Added Licence), 의회 이용허락(Parliament Licence) 중 자신이 선별한 이용허락을 선택한다.
- 4) ①PSI이용허락 또는 의회이용허락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허락에 따른 조건사항을 읽고 다음의 자료/정보들이 사용되는 목적들 중 자신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다.
 - 인쇄미디어 출판(Publishing in printed media)
 - 비인쇄미디어 출판(Publishing in non-print media)
 - 리서치 및 개인연구를 위한 복사(Copying for research/private study)
 - 기관 내 사용을 위한 복사(Copying for others within your organisation)
 - 기관 외 사용을 위한 복사(Copying for others outside your organisation)
 - 번역(Translating)
 - 대화(오디오, 점자 등)(Conversation(Audio, Braille, etc.))
 - 기타(Other)
- ②위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사용일 경우에는 기타(Other)를 선택하고 하단의 빈칸에 자신의 목적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 ③조건사항을 모두 읽었으면 이에 동의 한다는 란에 표시를 한다.
- 5) 지원서를 제출한다(Submit Application).
- 6) OPSI가 지원자의 지원서를 받으면 지원자 고유의 면허 번호와 이용허락기간에 대한 인증사항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달받는다.
- 7) 인증을 받게 되면 로그인한 후 자신이 획득한 이용허락을 종류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 8) OPSI가 이용허락소유자를 공개하고 신청자들, 특히 대형기관의 신청자들이 자신이 이용허락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쉽게 돕도록 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기재한 모든 이용허락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
- 9) 비독점적인 권리로 이용허락기간 내에서 허가받은 이용허락의 종류에 따라 해당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다.

2. 호주의 연방저작권(Common Wealth Copyright)

호주 연방저작권⁶²⁾이란 연방이 그 지휘 및 통제 하에서 생산된 다양한 범위의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방의 피고용인이 그들의 고용 과정에서 생산하였거나, 연방에 의하여 임명되었거나, 연방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된 출판 또는 비출판 자료에 대하여 소유하는 저작권이다. 어떤 자료들은 외관상으로는 연방에 의해 소유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소유권은

62) 호주 연방저작권 홈페이지 <http://www.ag.gov.au/www/agd/agd.nsf/Page/Copyright_CommonwealthCopyrightAdministration_Commonwealthcopyright>.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작품 및 기타 제재에 존재한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의회법 내의 저작권과 관련한 왕실의 제한적인 특권과 관련된 것뿐이다. 그리고 1969년 저작권규정, 1969년 저작권심판(절차)규정, 1969년 저작권(국제보호)규정 등은 저작권법의 실행과 관련된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 연방저작권은 저작권 행정에 대한 책임은 현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출판되지 않은 연방저작권 서면자료의 저작권은 책임저자가 관리하며, 해당 자료의 재생산에 대한 요청 역시 관련저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 연방저작권집행부(CCA)⁶³⁾는 출판된 서면자료의 저작권을 관리한다.
- 호주고등법원에 의하여 관리되는 저작권의 재생산을 위한 요청은 호주고등법원의 등록처로 인도되어야 한다.
- 법안 이외의 의회문서는 의회부서의 책임 하에 있다.

1968년 저작권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연방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해당 법에 의거하여, 비평 또는 검토를 위한 재생산, 뉴스 리포팅, 리서치 및 개인연구에는 상당한 무료 재사용이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는 정부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연방저작권 재사용에 대해 발행되는 허가는 제한적 허가가 아니며, 인가된 모든 허가는 호주연방저작권과 정보출처의 승인 대상이 된다.

호주 연방저작권 자료의 재생산을 위한 허가 요청은 다음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재생산된 자료들이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63) 연방저작권집행부는 연방기관들을 대표하여 출판물의 저작권의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그 주요 업무는 ① 연방저작권 자료의 재생산을 하기 위한 대중의 요청에 응답하고, ② 연방기관에 저작권 자료의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저작권집행부는 연방저작권과 관련된 질문 및 피드백을 수령하여, 연방저작권집행부 주소로 편지를 보내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질문 및 피드백 사항을 제출한다. <http://www.ag.gov.au/www/agd/agd.nsf/Page/CopyrightCommonwealth_Copyright_Administration>.

- 저작권 요청 양식

① 웹사이트⁶⁴⁾에 있는 저작권 요청 양식을 사용한 전자제출

- 요청자에 대한 정보 : 소속, ABN 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재생산하고자 하는 연방문서에 대한 정보 : 제목, 저자, 출판연도, ISBN(ISSN, 또는 Cat No.), URL, 관련 자료의 페이지 번호, 그래프·표·사진·그림 등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사용하고자 하는 그래프·표·사진·그림에 대한 설명, 사용하고자 하는 그래프·표·사진·그림의 페이지 번호, 재생산될 복사본의 수, 주식배당(free issue) 여부, 원가회수에 따른 제한적 판매 여부, 상업적 사용 여부, 재생산의 목적, 특별요구사항 또는 지시

② 요청양식에서 요구한 해당 정보를 포함한 편지

호주 연방에서는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 통지에 관해 두 가지 기준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기준은 변형이 가능하다. 다음은 연방저작권 통보 모델이다.

- 호주 연방저작권 통보 모델

① 서면출판물: ©호주연방[연도]

이는 저작물이다. 1968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허용된 사용 이외에는, 연방의 사전서면허가가 없는 절차에 의하여서는 어떠한 부분도 재사용될 수 없다.

② 인터넷 사이트: ©호주연방[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의 공개 연도]

이는 저작물이다. 이 자료는 개인용, 비상업용, 또는 기관 내 보급을 위한 용도로만 원본을 변형하지 않은 그대로 다운로드, 전시, 출력 및 재사용을 할 수 있다. 1968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허용된 사용 이외에는, 모든 기타 권리를 보유한다.

전술한 영국의 왕실저작권 등과 호주의 연방저작권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을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 하에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공공저작물에 관한 모든 저작자의 권한이 완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허락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보 공개에서 정보 제공으로 이행하는 저작권 행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64) <http://www.ag.gov.au/www/agd/agd.nsf/Page/Copyright_CommonwealthCopyright-RequestForm>.

제2절 저작재산권은 제한하고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사례

1.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 CCL)

CCL은 2001년 스탠포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시작되었고,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에게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이다.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어떠한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하여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추출한 다음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몇 가지 유형의 이용허락 규약을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다. 저작자들은 그중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들은 그 저작물에 첨부된 라이선스 내용에 따라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한 저작권자로부터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⁶⁵⁾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① 저작자표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을 행사한다는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영

65) 정진섭, 이미영. 상계서. p.53.

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한다.

④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한다.

Creative Commons는 저작권법이 정비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과 그러한 권리 모두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의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수단은 ‘실시권 계약’이다.

그러한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는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행해지지만, 이용자의 의사표시는 해당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행해지게 되고 저작권자에게는 그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저작권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실시권에 관한 본 건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혹은 그 계약 체결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통상적인 실시권 계약의 경우, 당사자끼리 그 조건에 관해서 교섭한 결과 일정한 문서에 합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료 금액에 관해서도 합의한다. Creative Commons 실시권의 경우에는 실시권의 조건이 사전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Creative Commons 측이 제정한다. 때문에 당사자의 교섭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계약약관에 가까운 본질을 갖는다. 또 이용자가 실

시료를 지불할 필요도 특별히 예정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자는 ‘이용자유영역’에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계약을 맺게 되는 셈이다.⁶⁶⁾

Creative Commons 약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⁶⁷⁾

Creative Commons 약관 5조에서는 저작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해서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있다. 저작물이 훔친 것이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저작물이 제3자의 기업비밀을 누설하고 있는 경우, 저작물이 제3자의 일반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기타 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약관 제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이제까지 많은 기부형 실시권에서는 이 같은 보장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Creative Commons 실시권에서 저작권자로 하여금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어디에선가는 검토해야 하는데 이 때 이 부담을 저작권자가 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기존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검토가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각 단계에서 다시 제3자의 권리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면, 이는 효율적이지 않다.”⁶⁸⁾

이와 관련하여 Karl-Friedrich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⁶⁹⁾을 피력하였다.

“Creative Commons 실시권의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관한 실시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유영역’에의 기부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무료로 저작물을 기부하는 자가 금액적 제한 없이 수많은 실시권자에 대해 엄격한 책

66) Karl-Friedrich Lenz. 著作権とCreative Commons 實施權. [online]. [cited 201.3.12]. <<http://k.lenz.name/j/r/CC.pdf>>.

67) 상계서.

68) Glenn Otis Brown. 2003. On Warranties. [online]. [cited 201.3.12]. <creativecommons.org/weblog/entry/3681>.

69) Karl-Friedrich Lenz. 상계서.

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적절한 계약내용이 아니다. 저작물의 내용을 보장받고 싶다면 그 저작권자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마땅하다.”

“또한 ‘저자를 신뢰한 결과 그 저작물을 Creative Commons 실시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시권자가, 저자의 권리침해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관점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현재 인터넷 상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Creative Commons 실시권에서, 당사자 간에 면밀한 신뢰관계가 없는 것은 보통이다. 저자는 누가 실시권에 관한 저자의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을 성립시켰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시권자가 ‘저자의 검토를 신뢰했다’고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살펴본 바에 따르면, CCL은 새로운 저작권 체계가 아니며 저작권법 틀 안에서의 이용관계 활성화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자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보증을 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권리 구제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CCL의 한계점으로는 본인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유관계가 애매한 상황이거나 1차적 저작물에 일부 변형한 것에 불과한 2차적 저작권의 경우, 원 저작자의 동의 판단여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CCL 설정은 언제든지 적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용된 정보에 대해서 이를 변경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영국의 Data.gov.uk

가. 개요

정부차원에서 Creative Commons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Data.gov.uk’⁷⁰⁾는 영국 공공정보(PSI)의 재이용 라이선스의 새로운 모델로서,

70) <<http://data.gov.uk>> 2010년 1월 21일 런칭.

2010년 1월 21일에 베타버전이 런칭되었다. 영국 정부는 향후에 기존 클릭유즈 라이선스를 이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로 대체하여 2010년 5월말에 본격적으로 런칭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으며, 고든브라운 총리는 그 일환으로 WWW의 창시자인 Tim Berners-Lee와 Web Science Research Initiative의 공동 창시자인 Nigel Shadbolt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공공정보 재이용 네트워크를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된 결과물이 바로 'Data.gov.uk'이며, CC(크리에이티브 커먼스) 3.0 유형에 따라 최신 네트워크 기술을 반영하여 최첨단 서비스로 공공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범위

현재 운영 중인 베타버전의 웹사이트에서는 2,500개 이상의 중앙 정부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공공정보는 CC의 이용조건에 따라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재이용이 가능하다.

웹사이트에 수록되는 대상 공공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정보이다. 과거에는 지방정부나 개별 공공기관에서 채택한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만 해당 기관의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정부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공공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공공정보를 무료로 사용하는 범위는 정보의 복사·배포·전송과 정보의 수용(발취 및 인용 등)이며, 선택에 따라서는 상업적 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의 저작권과 원정보(소스)는 직접 이용 당사자가 확인해야 하며, 정보와 관련된 왜곡, 훼손, 변경,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 라이선스

저작권에 대해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는 왕실저작권(Crown Copyright)이나 왕실데이터베이스권(Crown Database Right)으로 관리되거나 왕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다.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한 처리는 이용자의 책임이며, 이 웹사이트의 정보와 기타 연계된 왕실 정부 사이트는 무료로 유통성 있게 몇 가지 조건하에서 이용과 재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과 관련된 모든 상기 조건은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무시될 수 있으며, 정보나 그 밖의 요소가 적용 가능한 법률하에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있다면, 그 상태는 이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공정거래 혹은 공정이용 권리, 기타 적용 가능한 저작권 예외 및 제한, 작가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 다른 사람이 해당 정보에 대해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퍼블리시티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경우도 이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 CC 모델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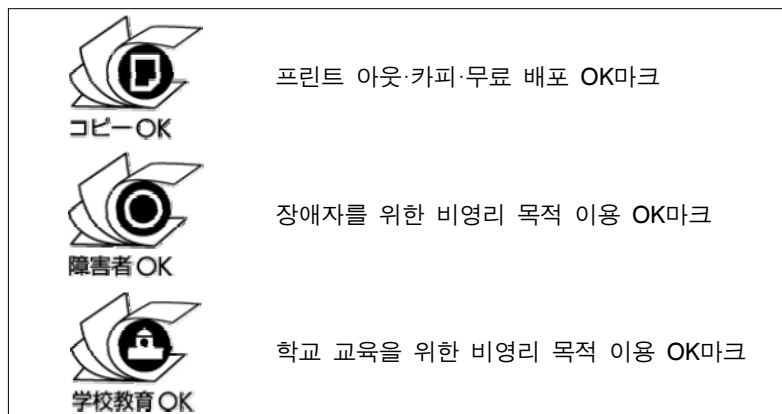
‘Data.gov.uk’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CC 3.0의 모델을 차용하고 있다. 즉, CC 라이선스는 데이터베이스권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만 배타적 데이터베이스권과 같은 다른 권리는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EU의 고유한 개념으로서 CC 라이선스의 유럽 버전에서 채택한 것이다. 라이선스의 견지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파생된 저작물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서 ‘Open Data Commons’는 데이터베이스 권리자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공개’ 라이선스 개념으로 발생하였고, CC는 ‘CC 0(No Rights Reserved)’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CC팀은 2010년 5월 ‘Data.gov.uk’ 런칭시에 필요한 새로운 속성 라이선스의 UK 버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Open Data Commons는 CC와 유사한 데이터베이스 속성 라이선스를 발표할 계획이다.

3. 일본 문화청의 자유이용마크

자유이용마크⁷¹⁾는 2003년 2월 7일 문화청에서 공개한 것으로, 홈페이지나 서적, CG 등의 저작물에 관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저작자가 마크를 문화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콘텐츠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며, 이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일정 조건 안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셈이 된다.

자유이용마크에는 다음 그림으로 표시되는 3종류가 있다.



(그림 3-1) 일본 문화청의 자유이용마크

먼저 맨 위의 ‘프린트아웃·카피·무료배포’ OK 마크는 ‘프린트아웃’, ‘카피’, ‘무료배포’만을 인정하는 마크이다. 변경, 개변, 가공, 삭제, 부분이용, 요약, 번역, 변형, 각색, 번안 등은 불가능하며 그대로 ‘프린트아웃’, ‘카피’, ‘무료배포’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송신이나 방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카피 매체는 종이, 테이프, CD-R, 하드디스크 등 관계없고, 무료배포에는 무료대출도 포함된다. 무료배포 시에는 인쇄비용 및 송료 등 ‘실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 팜플렛에 카피해서 배포하는 것 등은 영리 목적의 이용이기는 하나 무료배포라면 가능하다.

71) 일본의 문화청 홈페이지 <<http://www.bunka.go.jp/jiyuriyo/>>.

두 번째의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OK 마크는 장애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프린트 아웃, 카피, 송신, 대출, 무료배포, 실비의 범위에서 유료배포 등 온갖 이용을 인정하는 마크이다.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카피 등을 행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라도 괜찮다.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패스워드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변경, 개변, 가공, 삭제, 부분이용, 요약, 번역, 변형, 각색, 변안 등도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의 ‘학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OK 마크로,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프린트 아웃, 카피, 송신, 대출, 무료배포, 실비의 범위에서 유료배포 등 온갖 이용을 인정하는 마크이다. 수업뿐 아니라 부 활동, 클럽 활동, 교원 연구회 등도 포함되며, 학교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카피 등을 행하는 사람은 교원·학생이 아니라도 괜찮다. 변경, 개변, 가공, 삭제, 부분이용, 요약, 번역, 변형, 각색, 변안 등도 가능하다. 단, 3종류 마크 모두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유이용마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자유이용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마크 부착한 후 취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착하기 전에 신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저작자 : 인격권을 가짐)과 양수인(재산권을 가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작자라고 하여 임의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 또한 타인과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에는 전원이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저작자 전원의 합의 하에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자유이용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만약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용시 그것을 기술해야 한다.

자유이용마크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저작물 발표가 폭넓고 손쉽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인의 저작물을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이용물을 손쉽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카피OK마크는 인터넷에서 이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3종류 마크 모두 음악이나 동영상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청에서는 “인터넷에서는 저작물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이 마크는 사실상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이 마크를 부착한 경우나 마크의 의미를 오해해서 부착한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 음악 및 동영상에 관해서 현재도 타인의 저작물을 MIDI(전자 악기와 컴퓨터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화하여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나, 동영상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몰래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마크 이용의 오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제외로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마크 공개가 첫 단계인 만큼 앞으로 세부조항을 추가하면서 저작권에 관한 이해도 돕도록 할 것이며, 홈페이지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Q&A를 통해 설명해 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자유이용마크는 저작권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에 관련된 지분권에만 액세스할 수 있는 마크로, 제3자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에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광범위한 자유이용을 촉진하기는 어렵고 다른 라이선스와 비교할 때 대단히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관청 주도의 대단히 공적 성질이 강한 마킹 방식이면서 실제로는 그 활용이 그다지 촉진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⁷²⁾

4. 미국의 연방정부 저작권

가. 공정이용(fair use)

공정이용은 미국연방저작권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되는 네 가지 요인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례별 분석을 강조한 구체적 타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적용

72) 田中宏和, 2009. 著作権の放棄制度についての一考察. [online]. [cited 2010.3.12]. <<http://www.jotsugakkai.or.jp/doc/taikai2009/yokou/earlybird/tanaka.pdf>>.

사례를 초래하기도 하였고, 공정이용 분석의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⁷³⁾

공정이용 법리는 연방법률 제17편 107조에 명문화되었고, 각 사례에서 네 가지 요인에 따른 판단기준을 법원이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네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⁷⁴⁾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3) 사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이용의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공정이용으로 판단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은 네 번째 요건인 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공정이용 판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을 예시하여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요소로는 ①상업적 목적인지의 여부, ②교육적 목적인지의 여부, ③변형적 이용인지의 여부, ④사회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저작물의 성격’이다.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factual works)인지 창작적 저작물(creative works)인지가 공정이용

73) 이규호, 서재권, 상계서. p.22.

74) 상계서. pp.28-35

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저작물이 꼭 사실적이거나 창작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구분하여 사실적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정이용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많이 복제하면 할수록 저작권 침해에 가깝게 판단되는데, 이는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결부되어 이용된 저작물의 양이 많을수록 공정이용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용된 저작물의 양뿐만 아니라 이용된 부분이 지닌 가치도 고려된다.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네 번째 요건은 ‘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만약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원저작권자의 시장을 해칠 정도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잠재적인 시장(potential market)의 범위인데,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문제가 있다. 즉,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측면이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과는 달리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은 여전히 피해갈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⁷⁵⁾

그러나 무엇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사전에 한계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 사례와 이를 둘러싼 이해상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를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법(재판소)을 신뢰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⁷⁶⁾

75) 이규호, 서제권, 상계서. pp.1-2.

76) 藤本英介. 1998. 『ネット環境下の著作権と公正利用』. [online]. [cited 2010.3.12]. <<http://www.nic.ad.jp/ja/materials/iw/1997/proceedings/fujimoto/fairuse.html>>.

이러한 공정이용의 연혁을 살펴보면, 공정이용의 원리(doctrine of fair use)는 영국과 미국에서 판례법에 의해 발달하여 2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1911년의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제2조 제1항 제1호)으로, “사적 학습, 연구, 비평 또는 신문요약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56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제6조 제1항 내지 제3호)은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예외로서 공정한 이용을 ‘fair dealing’이라는 용어로 명문화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Folsom v. Marsh사건(1841)’⁷⁷⁾을 담당한 메사추세츠 주 법원에 의해 형평법상 판례로서 공정이용의 원리가 최초로 정립되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할 정도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새로운 저작물의 성격, 복제물의 가치 및 범위, 그리고 원저작자가 그것에 의하여 입을 피해의 정도”⁷⁸⁾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였고, 그 사용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도입된 공정이용의 요소를 논의한 최초의 미국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명칭을 얻지 못하다가 28년 후인 1869년에 ‘Lawrence v. Dana사건’⁷⁹⁾에서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 이후에도 여러 판례를 통해 발전되다가 1976년 저작권법을 탄생시켰고, 이 법은 최초로 연방법률 제17편 제107조에서 공정이용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재적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의 목적 요건대 저작권법의 존재 의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인 저작자, 저작권의 보호를 후퇴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이용은 여기에 그 근거를 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한 판례에서도, 공정이용의 원칙은 ‘저작권법의 경직적인 적용이 이 법률에서 육성하기를 꾀하는 창작력 그 자체를

77) Folsom v. Marsh, 9 F.Cas. 342, 348 (C.C.Mass 1841).

78) The nature of the new work, the value and extend of the copies, and the degree in which the original authors may be injured thereby.

79) Lawrence v. Dana, 15 F.Cas. 26, 44 (C.C.Mass 1869). 법원은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저작자가 추후의 저작자에게 암묵적으로 양해해 준 발췌행위의 특권을 논의하였고 그것을 공정이용이라고 명명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억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재판소가 이를 회피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다.⁸⁰⁾

저작권의 목적이 보다 좋은 창작 활동에의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학문이나 문화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결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있다고 봤을 때, 창작에의 동기부여와 이용촉진의 적정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하나가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입법이 이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 환경 하에서, 한편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저작권 강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무언가 법적 기술을 이용하여 재판관이 사후적 판단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의 존재가 도리어 문화와 기술의 정체를 초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⁸¹⁾

나. 미국 저작권법상 정부정보

현행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17 U.S.C. §105)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

미국 정부의 저작물

본 법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합중국 정부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합중국 정부가 양도, 유증, 기타에 의해 이전된 저작권을 떠맡고 또한 이를 보유하는 것에 관해서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중국 정부의 저작물’의 정의에 관해서는 미국 저작권법 101조에 “합중국 정부의 관리 내지 직원에 의해 그 공무의 일환으로서 작성된 저작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하원보고서에서는 이하와 같이 보충한다. “합중국 정부의 관리 내지 직원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이라도 공무 이외에서

80) 藤本英介. 상계서.

81) 藤本英介. 상계서.

작성한 저작물이나 자기 자신의 의사로 작성한 저작물에 관해서는, 가령 그 대상이 되는 것이 합중국 정부의 저작물에 관계되거나 공무로서의 자신의 전문적 분야에 관련되는 것이라도, 저작권 취득을 방해받을 이유가 없다.”

또 유사 해석 개념으로서의 ‘고용저작물’⁸²⁾에 관해서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101조에 ‘고용저작물’이 “종업원이 그 고용 범위에서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동법 제201조(b)에는 ‘고용저작물’의 취급으로서 “고용저작물에서는 고용자 기타 해당 저작물이 그 자를 위해서 작성된 것이 본 법에서는 저작자로 간주되며, 양 당사자가 서명이 완료된 서면으로 명시하고 별도의 합의를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이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합중국 정부의 관리 내지 직원’이 “그 공무의 일환으로서 작성”한 저작물에 관해서는 고용저작물의 논리에 따라 그 관리 내지 직원의 저작물이 아니라 합중국 정부의 저작물이라고 간주되나, 그러한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된다.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 공유상태(public domain)에 있다는 사실은 해당 저작물을 작성한 개별 직원 혹은 피용자가 저작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정부 혹은 여타 주체에 의한 배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저작권법에 관한 한 정부도 그 피용자나 직원이 원한다면 해당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을 가할 수 없음을 뜻한다.⁸³⁾

정부저작물에 해당되지만 연방정부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예외는 다음의 2가지이다.

첫째, 미국연방통합법전 제15편에 의거하여 저작권법 제105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방상무장관은 저작자 혹은 재산권자로서 연방정부가 만들었거나 이

82) 하원보고서에 따르면, ‘합중국 정부의 저작물’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고용저작물’의 정의와는 조금 단어 사용이 다르지만 여기에서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되도록 의도 된다.

83) Melville & David. 2002. Nimmer, 1 Nimmer On Copyright 5-81. LexisNexis.

용가능하게 한 표준참조정보(standard reference data)의 전부 혹은 그 일부에 저작권 혹은 저작권의 갱신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하거나 발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⁸⁴⁾

둘째, 1970년의 ‘우편구조조정법(Postal Reorganization Act of 1970)’에 따라 정부저작물의 법리는 연방우편관청의 피용자가 창작한 작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표의 위조 혹은 모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법규를 실시하는 이외에, 우편관청이 선택한다면 우편서비스가 아닌 사적이거나 상업적인 일에 우표 디자인이 복제되지 못하도록 저작권법을 이용할 수 있다.⁸⁵⁾

한편 정부저작물의 법리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해외에서 미국 정부저작물의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 1976년 법의 입법과정에서 미국연방하원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가 부인될 정책적인 근거가 없으며,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정부저작물이 이용되도록 허락을 내주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는 견해이다.⁸⁶⁾

정부저작물에 대해 얘기할 때 쫓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정부가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작성되는 ‘위탁저작물’에 관한 취급이다. 왜냐하면 위탁받은 자는 ‘합중국 정부의 관리 내지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하원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와의 계약 내지 특권 부여 하에 작성되는 저작물에 관해서는, 법안은 의식적으로 단순 일률적으로 저작권을 금지하겠다는 접근을 피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단순히 정부직원 대신에 수탁자를 사용하여 자 기관의 용도를 위해 접근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설정은 적절하지 않으나, 저작권 설정 금지가 중요한 저작물의 작성·배포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만일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민간의 저작자(수탁자)에 의한 저작권 설정의 필요성을 웃돈다고 의회 및 정부기관이 인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규제 내지 계약에 의해 문제 해결을 꾀한다고 하원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⁸⁷⁾

84) 15 U.S.C. §290(e)(a)

85) Paul Goldstein. 1996. *Copyright(2nd ed.)*. Boston: Little Brown. pp.2-54.

86) H. R. Rep. No. 94-1476, 94th Cong., 2d Sess. 59. 1976.

이처럼 ‘위탁저작물’에 관해서는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별도의 법률·규제나 계약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5조는 단서에서 “합중국 정부가 양도, 유증, 기타에 의해 이전된 저작권을 도맡고 이를 보유하는 것에 관해서 그것이 불가능해질 이유는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정부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제105조를 우회하여 정부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사전에 저작물 작성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종래에는 정부에서 출판되어 온 저작물을 민간에서 출판하도록 하는 정부저작물의 ‘민영화’라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상무성에서 출판되었던 ‘U.S. International Outlook’이나 국립암연구소에서 출판되었던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과 같은 정부출판물이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 출판사에서 간행되기 시작한 상황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민영화’된 정부출판물의 저작권은 민간 출판사 측이 보유하게 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이 말하는 ‘합중국 정부’란 연방정부를 말하며 저작권법의 규정은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주정부의 저작물은 주 법률에 따라 그 저작권의 유무가 결정된다. 많은 경우, 저작물의 일부를 공정이용(fair use)에 기초하여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⁸⁸⁾

87) Latman, Alan, Robert A. Gorman and Jane C. Ginsburg. 1989. *Copyright for the Nineties: Cases and Materials*. The Michie Company.

88) 古賀 崇. 2003. アメリカにおける政府情報と著作権をめぐる議論. 『情報ネットワーク法學會誌』. Vol.2: pp1-19.

제3절 저작인격권을 제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인정하는 견해

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을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저작권법 상 저작자인격권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공표권’은 정보공개제도 상의 ‘공개’와 대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일본 판례 및 견해를 소개하고, 저작권법을 적용한 공공정보 규율의 3번째 방식과 연관 지어 검토하기로 한다.

1. 일본 판례를 통해 보는 정보개시제도상 ‘정보개시’와 저작권법상 ‘공표권’의 관계

1983년 일본 가나가와현 공문서 공개조례에 근거해서 현 내의 주민이 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 신축맨션의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의 열람을 청구했지만, 거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각 도면의 공표=공표권 침해=설계회사의 불이익’이므로 ‘비공개 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본 판례에 적용된 ‘가나가와현 기관의 공문서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특히 사업주체에 대해서 ‘명백하게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업정보의 공개에 관해서 제한하고 있다(조례 제5조 1항 2호).

상기 판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⁸⁹⁾

본 판결은 저작자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을 가져옴으로써 정보공개제도가 준비하는 법익보호시스템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 논리대로라면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은 모두 정보공개법에서 개시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 상의 ‘공표권 보호’와 정보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알 권리’가 정면충돌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은 그 추구하는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것일 뿐, 상호 배척하는 성격이 아님은 명백하다.

89) 松井修視, 1997. 著作権法上の公表権と情報公開・知る権利. 『大分県立芸術文化短期大学研究紀要』. 第35卷: pp. 172-174.

또한 공표권은 저작자의 인격권에 관련된 것인데, 본 건의 경우 공표권은 설계 회사에 있으므로 순수한 인격권의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영리사단에 관해서는 저작자 인격권이라고 하더라도 요컨대 영업상 이익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같은 이익은 다른 재산적 이익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행정의 공개성이나 공적 주체의 설명 책임 충족과 같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가 제공한 정보가 공개되어 공표권이 제약을 받는 것도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판례와 마츠이씨의 견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신축택션의 도면이라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여 공공정보로서 취급되는 경우, ‘공표권’을 제한하면 정보청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인정하여 그 정보의 이용에 수반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공공정보 또는 공공저작물에 관해서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제한’하여 정보공개제도에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저작재산권은 인정’하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일본 저작권법상 정보공개를 위한 공표권 제한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이 성립되면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에서의 공표권과의 조정을 위해, 정보공개법 시행 후 저작자가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에 제공한 미공표 저작물에 관해서 개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하며,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공표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이미 표시된 대로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경우 및 정보공개법의 부분개시 규정에 의해 저작자명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은

적용되지 않고, 저작자의 의향에 반하여 이미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저작자명이 표시되거나 또는 저작자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저작권법 상의 공표권 관련 조항

(공표권)

제18조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그 동의를 얻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함)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해당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③ 저작자는, 다음 각 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게재하는 행위에 관해서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그 저작물에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행정기관에 제공한 경우(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의 취지 결정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 함.**)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것 (이하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조례에서 동일함.)

④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이 동조 제1호 2목 또는 3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작물에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시할 때, 또는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이 저작물에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시할 때(이하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조례에서 동일함.)

여기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 내용은 불개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 청구자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본 저작권법 상의 성명표시권 관련 조항

(성명표시권)

제19조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그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 또는 제시할 때, 그 실명 또는 필명을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하거나 또는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 또는 제시할 때 원저작물의 저작자명 표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서,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이미 그 저작자가 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 때

2.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제2항의 규정,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제6조제2항의 규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명의 표시를 생략하게 될 때

여기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개시청구에 관련된 행정문서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기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4장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 실태



제1절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 현황 분석 결과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장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 실태

제1절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 현황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의 유형과 목적 등에 따라 생산에서 제공까지 그 체계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실제 저작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표 기관을 선별하여 대략적인 공공정보의 생산 및 제공 현황과 저작권 관리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의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 기관은 민간에서 활용 수요가 높은 공공정보를 생산·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하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총 1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는 해당 기관의 개별 부서별로 관리되는 경향이 크고,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조차 전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보유 및 저작권 관리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기는 현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의 관리 부서나 이슈가 되고 있는 해당 부서의 일부 정보로 제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정보에 대한 저작권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표 4-1> 조사 대상 기관

구분	번호	기관명	소속부처	소재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1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대전
	2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대전
	3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4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5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지방자치단체	6	서울시청	-	서울
	7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청	청주
공공기관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9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10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11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서울
	12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안동
	13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2) 조사 방법

방문 면접에 의한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방문 면접 수행에 앞서 저작권 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구두 설명으로 조사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별 보유 공공정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의 협조 공문을 배포한 후 대상 기관과의 방문

면접 일정을 협의하여 방문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관련 자료 수집도 함께 수행하였다. 방문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구두 설명 및 일정 협의기간을 포함하여 총 4주가량 소요되었다.

다.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공공정보의 보유 현황, 제공·이용 체계, 제공 실태 및 문제점, 기타 의견 수렴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정보 보유 현황은 정보명, 정보형태, 정보량 등 정보 자체에 대한 내용과 제작자, 발행자, 저작권자 등의 권리 관련 현황으로 구분하였다. 공공정보의 제공·이용 체계는 관련된 근거(법령 등) 및 내부 시행 규정과 제공 방법, 제공 수수료(가격) 정책 그리고 기타 저작권 관리 지침 등의 마련 여부를 포함하였다.

2. 보유 공공정보 현황

본 연구에서 조사한 13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현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정보와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부서에 국한한 것으로 기관 전체의 모든 공공정보 현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개요

공공정보는 크게 아날로그 형태와 디지털 형태로 생산·관리·제공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각종 DB 구축 사업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아날로그 정보 보다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보 활용 시에도 아날로그 보다는 디지털 형태가 더욱 용이하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정보 제공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관리 문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13개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 조사된 공공정보의 형태별 현황

번호	기관명	아날로그정보	디지털정보
1	문화재청	- 문화재 실측도면 - 문화재 사진	- 문화재 이미지 - 문화재 3D자료 - 문화재정보(텍스트)
2	국가기록원	- 기록물(문서, 도면 등) - 계간기록인(책자) - 기록물 해제집	- 기록콘텐츠정보 - 일반문서정보 - 시청각정보 - 중앙행정기관 변천연혁정보
3	국립중앙도서관	- 단행본 - 고서 - 연속간행물	- 국가자료 종합목록 DB - 국가자료 목차정보 DB - 주요자료 원문정보 DB -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DB - 시각장애인용 종합목록 DB -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
4	국립중앙박물관	- 도록	- 유물 이미지 - 유물 정보
5	한국정책방송원		- 대한뉴스 DB - 방송프로그램 DB - 문화영화 DB
6	서울시청		- 서울공연행사정보 - 서울관광정보
7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지원 사업 개발 결과물 : 콘텐츠, 사진 등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디지털교과서 - 사이버가정학습 - 에듀넷
9	한국관광공사		- 국내여행정보 - 관광사진(이미지)
10	한국영상자료원	- 영상자료(필름) - 포스터/스틸 - 음반 - 시나리오 - 간행물	- 영상자료(비디오, 동영상) - 영화인DB - 목록DB
11	한국산업인력공단	- 직업훈련 교재 - 외국인교재 - 발간물	- e-러닝콘텐츠 - 직업훈련용 교재 - 시청각매체 - 외국인교재매체
12	한국국학진흥원	- 고서, 고문서	- 고서, 고문서 DB - 목판, 현판, 서화 DB
13	한국소비자원	- 연구발간물 - 소비자시대(잡지)	-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DB - T-gate(상품정보) - T-price(생필품가격정보)

나. 기관별 보유 정보

(1) 문화재청

문화재청⁹⁰⁾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기관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있다. 지정문화재 정보는 해당 문화재의 실측도면이나 사진, 관련 해설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형태로 해당 문화재 이미지나 3D 도면, 관련 동영상 및 텍스트 형태의 설명 자료를 작성한다.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정보는 동영상이 3~4천 건, 사진(이미지) 1만 2천 건 정도이며, 문화재 건별로 별도의 설명 정보를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현재로서는 대국민 서비스에 한하고 있어 출판 등의 상업적 활용은 불허한다. 다만, 교과서 제작시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며, 교과용 도서보상금 대상으로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저작권 일부가 징수된다.

(2)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⁹¹⁾은 공공과 주요 민간 기록물을 수집·정리·기술·보존·관리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한 공공기록물을 관리한다.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일반문서류(약 276만 건), 시청각류(약 212만 건) 등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화된 기록물은 현재 나라기록검색과 나라기록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⁹²⁾

조사된 국가기록원의 보유 정보는 기록콘텐츠정보, 일반문서정보, 시청각정보, 계간기록인(IN), 기록물 해제집, 중앙행정기관 변천연혁정보 등이 있으며, 기록콘텐츠 정보로 대표적인 것은 컬렉션으로 열람요청이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90)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91)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92)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은 국가기록원에 보유중인 기록물들을 컬렉션, 토픽 등 주제 및 유형별로 온라인 콘텐츠화 하여 서비스하는 사이트이며, 나라기록검색(search.archives.go.kr)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각급기관에서 보유중인 기록정보까지도 검색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

높은 기록물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검색방법,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⁹³⁾은 국내외 자료 750만여 책을 소장하고 있는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 납본, 구입, 기증 등에 따라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각종 서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록 DB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소장 자료에 대한 원문정보 DB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 DB에는 국가자료 종합목록DB(1천9백만 건), 국가자료 목차정보DB(1백30만 건), 주요자료 원문정보 DB(37만 책),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DB(73만 건), 시각장애인 도서관 종합목록 DB(16만 건),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4천 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⁹⁴⁾

(4)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⁹⁵⁾은 국가적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보존·전시하는 기관으로, 지방의 11개 국립박물관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발굴·구입·대여·기증·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며, 소장 유물의 대부분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연구·고증·평가 등을 통해 유물의 다양한 정보를 생산한다.

전국의 국립박물관은 2000년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분산 DB방식의 전국 박물관 정보를 하나의 포털인 'e뮤지엄'⁹⁶⁾에서 제공하고

93)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94) 디브리리 홈페이지 <<http://www.dbrary.net>>.

95)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있으며, 현재 138,743점에 달하는 유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한 총 20만여 점의 유물에 대하여 이미지, 동영상, 상세 설명 정보와 민속 문화, 문화재 등을 소재로 한 동영상 및 시나리오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2,614건의 유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정책방송원⁹⁷⁾은 정부의 정책정보와 공공정보, 문화예술정보 등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송기관이다. 한국정책방송원이 생산·제공하는 정보는 정부의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영상의 기록·보존적 기능을 수행한 기록정보로 케이블, 위성방송 및 인터넷 등의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정책방송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대표적으로 방송자료, 대한뉴스, 문화영화가 있으며, 테이프나 필름자료로 생산하여 원본은 보존하고 복사본 위주로 제공한다. 특히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상태이며⁹⁸⁾ 이들의 베타캠(Beta Cam) 변환 자료만 소장하여 자료 제공 요청시 활용하고 있다. 대한뉴스는 2,014편 9,575칸을 제작하고 552개 베타캠으로 변환하여 'e-영상역사관'에서 제공하고 있고⁹⁹⁾ 문화영화는 2,773편 17,754칸을 제작하여 668개 베타캠으로 변환하여 소장·제공하고 있다.

(6) 서울시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격인 서울시청¹⁰⁰⁾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정 운영

96) e뮤지엄 홈페이지 <<http://www.emuseum.go.kr>>.

97) 한국정책방송원 홈페이지 <<http://www.ktv.go.kr>>.

98) 대한뉴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제작된 원본 전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으며, 문화영화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원본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제작된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다.

99) e-영상역사관 홈페이지 <<http://www.ehistory.kr>>.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보건, 복지, 문화, 교통, 환경 등의 분야별 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작권 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의 문화 및 관광지, 행사 정보 등¹⁰¹⁾을 살펴보았으며 대부분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7)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¹⁰²⁾은 문화산업단지 특화 유치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에듀테인먼트 산업의 청주브랜딩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에듀테인먼트 특화 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고 콘텐츠 중심 창작개발 지원 및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에듀테인먼트 기업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생산한 공공저작물로는 각종 어문저작물과 사진, 심포지엄 결과물 등이 있으며, 공공콘텐츠 신탁을 통해 제공하는 문화상품애플리케이션(약 7천 건) 정보 등이 있다. 그러나 재단의 기능이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인 만큼 지원사업의 결과물인 콘텐츠를 자체적인 공공정보로 소장하기 보다는 생산된 콘텐츠를 특화하여 상표권, 디자인권, 서비스표는 물론 저작권까지 등록하여 생산한 기업에게 권리를 주고 있어서 자체에서 생산·보유·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은 많지 않다.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¹⁰³⁾에서는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정보화를 통해 초등부터 고등교육의 정보를 생산하여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교

100)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101) 서울시 문화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visitseoul.net>>.

10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cjculture.org>>.

10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keris.or.kr>>.

육행정정보화를 통해 교육정책 및 행정 일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과 학술연구정보를 근간으로 한 학술연구·교수학습 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 정보를 생산하고 관련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교과서, 사이버가정학습, 에듀넷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⁰⁴⁾ 디지털교과서(총 20종)는 서책형 교과서 외에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3D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이다. 사이버가정학습(총 201종)은 학습자가 가정 및 학교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1:1 학습관리 및 수준별 개별학습을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서비스이며, 현재 143종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에듀넷은 학생이나 교사,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등 국민 누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게 교육정보를 서비스 받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별 콘텐츠 및 정보들은 교사들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9)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¹⁰⁵⁾는 국내 관광환경 개선과 상품개발, 글로벌 수준의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공기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관광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생산·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문화·관광 등 한국을 대표할 만한 정보들로서 내부 사진작가나 기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제공 중인 국내 여행정보(국문·외국어)와 관광지 사진 등을 포함한 정보량은 DB콘텐츠 2만3천 건, 여행기사

1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초·중·고 교육(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등), 고등 교육(학술교육정보서비스(RISS), 학술자원통계정보 등), 교육행정정보화(나이스, 학교알리미 등)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학술정보를 생산·수집·서비스하고 있다.

105)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or.kr>>.

1천 건, 행사정보 2천5백 건, 관광지 동영상 1천9백 건 등이다. 지자체 및 자체 제작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는 월별 테마를 위주로 최신정보로 갱신하며, 신규 생성 또는 삭제 등 정보의 갱신율이 연 85% 정도이다.

(10)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¹⁰⁶⁾은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 필름은 물론 시나리오, 포스터, 스틸사진, 관련 문헌을 비롯하여 DVD, 온라인 영상물 등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영상자료(필름, 동영상 파일, 영화작품 DB), 영화인 DB, 포스터·스틸(원본, 디지털 파일, 목록 DB), 음반(원판, 디지털 파일, 목록 DB), 시나리오(원본, 디지털 파일, 목록 DB), 문헌(목록 DB), 간행물(목록 DB), 학위논문(목록 DB)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체 홈페이지(고전영화 290여 편)와 영상자료실(고전영화 및 독립영화 2천여 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 정보 중 100여 건은 대리증개하고 있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¹⁰⁷⁾은 평생능력개발, 자격검정, 기능장려, 국제협력 및 해외취업, 외국인고용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를 통한 취업 촉진 등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핵심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학습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근로자 학습, 취업교육을 위한 교재와 시청각 매체를 편찬·보급하고, 직업방송¹⁰⁸⁾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직업관련 방송프로그램,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방송용 콘텐츠(6천 편), e-러닝콘텐츠(276개), 교재(23만 부), 시청각매체, 외국인교재매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날

106)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http://www.koreafilm.or.kr>>.

107)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108) 한국직업방송 WorkTV 홈페이지 <<http://www.worktv.or.kr>>.

로그와 디지털 두 형태의 정보로 생산하고 있으나, 교재는 아날로그 책자, e-러닝콘텐츠는 디지털저작물로만 생산하고 있다.

(12)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¹⁰⁹⁾은 훼손·도난으로 멸실 위기에 있는 민간소장 기록관련 문화유산을 조사·수집하고, 특히 영남지방의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연구를 통해 한국국학진흥원은 고서 9만 점, 고문서 12만 점, 목판 5만8천 점, 현판 500점, 서화 2천 점 등 고전적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소장 기록 자료의 기탁운동을 통하여 소장한 26만여 점의 기록자료 중 사료적 가치가 뛰어난 자료를 DB와 콘텐츠로 구축·개발하여 유교문화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¹⁰⁾ 현재 서비스에는 고서(2만 점), 고문서(3만 8천 점), 유적(660 점), 인물(3천 건), 유물(2천 점), 연표(1천6백 건), 현대간행물(8천 건)이 포함되어 있다.

(13)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¹¹¹⁾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소비 생활과 관련된 불만·피해에 대한 상담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피해·구제·상담DB, 상품 및 가격 정보 및 연구자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모범 상담DB(총 4만5천 건)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상담 내역 가운데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추출하여 재가공한 것으로, 1만여 건 정도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상품 정보¹¹²⁾ 및 가격정보¹¹³⁾를 제공하고 있으며,

109)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reastudy.or.kr>>.

110) 유교넷 홈페이지 <<http://www.ugyo.net>>.

11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

소비자시대(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등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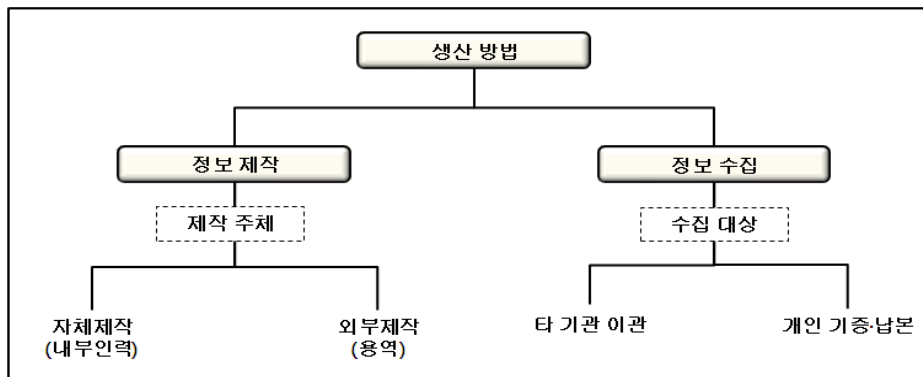
3. 저작권 관리 현황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저작권 보유 여부에 따라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보의 생산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정보를 생산하는 방법은 제작 또는 수집인지, 그리고 제작의 경우 직접 혹은 외주인지, 수집의 경우 단순 위탁과 양도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각 기관의 공공정보 생산 및 제공 현황을 통해 연관된 저작권 관리 사례를 도출하여 전반적인 저작권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 생산 방법의 구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저작권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 생산 방법은 크게 정보 자체를 만들어내는 ‘정보 제작’과 다른 기관 등에서 제작한 정보를 모으는 ‘정보 수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림 4-1) 공공기관의 정보 생산 방법에 의한 구분

112)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상품정보 <<http://www.tgate.or.kr>>.

113) 한국소비자원 생필품가격정보 <<http://price.tgate.or.kr>>.

제작에 의한 정보 생산은 크게 정보를 제작한 주체가 해당 기관의 내부 인력인 경우는 '자체 제작', 외부 업체의 용역으로 제작된 경우는 '외부 제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관리 차원에서 예산 집행의 주무기관에 따라 저작권이 달리 설정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수집에 의한 정보 생산은 크게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경우와 개인으로부터 기증·기탁·납본된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제작

(가) 자체 제작

공공기관의 내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한 경우에 저작권은 분명 해당 기관에 있다. 이 때 정보 생산은 주로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진다. 만일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한 경우라면 아날로그 정보의 원저작자는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디지털 저작물을 생산하기 어렵다.

자체 제작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사례는 주로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거나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내부 직원(혹은 해당 업무를 위해 계약된 직원)이 업무적으로 제작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대부분 해당 기관이 저작권 전반의 권리를 보유한다.

반면, 자체 제작을 하였으나 예산 출처에 따라 해당 기관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다음 항에서 설명할 외부 제작과 유사한 개념으로, 중앙정부기관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업무 위탁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 저작권은 상위 중앙정부기관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자체 제작의 사례는 <표 4-3>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4-3> 자체 제작 사례

해당 정보	특이점	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이미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 한국국학진흥원 디지털 국학 	저작권 기한 만료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 생산	해당 기관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진 한국소비자원 연구발간물 한국소비자원 상담·피해구제 DB 한국정책방송원 대한뉴스, 문화영화 	내부 직원이 직접 정보 제작	해당 기관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 외국어서비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잡지), T-gate 	내부 직원 혹은 업무상 계약된 직원(전문가)이 정보 제작	해당 기관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소비자보호원 모범상담DB¹¹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¹¹⁵⁾ 	중앙부처에서 업무 위탁으로 정보 제작	타 기관 (중앙부처 등)

(나) 외부 제작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외부 업체의 용역으로 정보를 제작한 경우 관행적으로는 발주한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편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외부 제작의 경우라도 계약시 저작권 양도를 명시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동영상 및 3D 도면실측 정보와 설명텍스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디지털교과서, 한국영상자료원의 KOFA(영화학교)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재청의 경우는 해당 정보 제작에 있어 용역사업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디지털교과서는 제작시, 외부 용역 업체가 수록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처리를 하도록 하여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을 양도 받는다.

후자의 경우는 외부 제작이지만 저작권을 양도 받지 않고 그대로 외부 업체에

114) 한국소비자원의 모범상담DB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기 구축한 상담·피해·구제 DB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위탁(예산)으로 모범 사례를 추출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DB로 저작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1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이버가정학습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권리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남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저작권 처리에 대한 원칙 부재로 인해 구체적으로 저작권 양도에 대한 계약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4-4> 외부 제작 사례

해당 정보	특이점	저작권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 문화재동영상 - 문화재청 문화재 설명 텍스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과서 - 한국영상자료원 KOFA(영화학교) 	용역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명시	해당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집필 자료 - 국가기록원 집필 자료 	용역계약서에 저작권 양도를 명시하지 않음	용역업체 (프리랜서)

(2) 수집

수집에 의한 생산은 기 생산된 저작물을 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혹은 개인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가운데 보존·수집·서비스가 주요 업무인 도서관이나 각종 아카이브(보존소)는 대부분 이러한 수집에 의한 정보 생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의 경우 대부분의 저작권은 원 생산기관에 있으며 단지 해당 정보에 대한 소유권만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데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신중하게 확인해야만 한다.

본 조사에서 수집은 수집 방법에 따라 크게 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이관과 개인의 기증·기탁·납본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집된 저작물은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하 만료저작물), 저작자의 생몰 정보가 없어서 저작권 만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거나 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이하 고아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타 기관의 이관에 따른 수집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을 이관한 것으로 대부분 저작권은 원 생산기관에 있다. 그러나 이관된 저작물 가운데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타 기관의 이관에 따른 공공정보 수집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기록원의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들 수 있다.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한국정책방송원(구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하여 원판 혹은 일부를 국가기록원에 소유권을 이관하였다. 대한뉴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제작된 원판(완성본) 전체를, 문화영화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제작하고 있으나, 1976년부터 1981년까지의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들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별도로 서비스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한뉴스 중 1953년에서 1960년에 제작·공표된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 기록물 및 대통령기록물 등을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다.

<표 4-5> 타 기관의 이관에 따른 수집 사례

사례	차이점	저작권
- 국가기록원 대한뉴스, 문화영화 -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	소유권 이관, 저작권은 제작기관에 있음	원 제작기관 보유
- 국가기록원 대한뉴스 일부 (1953~1960년 제작·공표)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해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 소멸

(나) 개인의 기증·납본에 따른 수집

개인이 납본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대부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별개 문제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기증·납본으로 인한 수집 사례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

에게 있지만, 고서·고문서와 같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저작권자의 정보가 없는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자유롭다.

<표 4-6> 개인의 기증·납본에 따른 수집 사례

사례	차이점	저작권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도서	납본으로 수집된 정보	원저작자 보유
-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도서	기증으로 수집된 정보	원저작자 보유 혹은 저작권자 불명
- 한국국학진흥원 고서·고문서	개인 소장의 조선시대 저작물로서 기증으로 수집된 정보	저작권 만료

나. 저작권 관리 방법

저작권 관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공공정보의 생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나 지침 혹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관 내부에서 별도로 마련한 저작권 관리 지침, 둘째,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관리, 셋째, 공공저작물 신탁으로 관리되는 경우 해당 신탁기관의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원론적인 관리 방법이다.

그러나 금번 조사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첫 번째 방식인 기관 내부의 별도 저작권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실제 각 기관에는 대부분 저작권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도 최근에서야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별도의 저작권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 보다는 두 번째 방식인 외부 용역이나 수집 등을 통해 생산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 규정에 따라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 등에 명시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최근 저작권 관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저작권 관리에 대한 분류 항목을 삽입하는 등 저작권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신탁기관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신탁제도를 통해 일부 보유 공공정보를 신탁기관에 맡기고 있다. 신탁은 저작권 처리가 복잡하거나 방대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저작권 관리 방법으로, 현재 공공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공콘텐츠에 대한 신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울러 어문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신탁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한국국학진흥원 등은 일부 공공콘텐츠를 신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는 저작권 관리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저작권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대부분 저작권이 있는 정보에 한하여 귀속 여부를 밝히고, 무단복제나 제3의 이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수준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해당 공공정보에 워터마크나 DRM을 적용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저작권법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이에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표 4-7> 저작권 관리 방법별 기관 사례

저작권 관리 방법	해당 사례
자체 저작권 지침	없음
내부 규정 혹은 계약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록원 -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재청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탁 기관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박물관 - 한국국학진흥원 한옥마을, 조선시대유산기
저작권법	모든 기관

4. 제공 실태 현황

공공정보는 권리 주체에 따라 제공 범위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여 일선에서는 제공 가능 여부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권리 주체의 구분이 가능한 공공정보 사례를 비교해 보고, 이용 대상 및 목적 그리고 전반적인 제공 체계에 대해 해당 사례를 분석하였다.

가. 권리 주체별 제공 현황

(1) 저작권 확보 정보

저작권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은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무단 복제를 금지하거나 이용 목적이나 대상을 제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저작권 미확보 정보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 범위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나 별도 저작권 처리 등 까다로운 이용·제공 절차와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의 발생 소지가 많아서 정보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 미확보 정보의 대표적인 사례는 타 기관에서 작성한 정보이거나 개인 저작물을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미처 계약상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외부 용역 결과물 등이다.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에 포함되는 음원, 초상권 등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수집한

영상자료는 대리중개 방법으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집하는 정보 가운데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존 차원의 원본 제공 보다는 복사본이 제공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고문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보, 한국국학진흥원의 고서·고문서 등이 있다.

나. 이용 대상 및 목적별 제공 현황

공공정보의 제공에 있어 이용 대상은 크게 타 공공기관과 개인/민간기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며, 이는 공익성을 위해 이용하는 데 대한 허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용 대상과 목적은 공공기관의 비영리·공익성과 개인 및 민간기업의 영리·상업성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다만, 개인·민간기업이라도 비영리 혹은 공익성 목적의 이용이라면 정보 제공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표 4-8> 기관별 이용 대상·목적별 제공 현황

기관명	이용대상	공공기관		
	이용목적	비영리/공익성	비영리/공익성	영리/상업성
한국국학진흥원		○	○	
국립중앙박물관		○	○	○
한국관광공사		○	○	
국립중앙도서관		○	○	
한국정책방송원		○	○	○
국가기록원		○	○	

정보의 이용 대상이 주로 공공기관인 경우, 대부분 비영리나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료 또는 소정의 수수료만 부과하여 제공하고 있다. 반면 개인 및 민간 기업의 경우 이용 목적에 따라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개 학술·연구 등을 포함한 비영리 혹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라면 무료 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상업적 활용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부 기관은 저작권 문제 혹은 예산 처리 등의 규정 미비 등으로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 제공 체계 및 비용 산정 근거

공공정보의 제공·이용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공·이용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아울러 신탁을 한 경우는 신탁기관이 정한 수수료 체계에 따른다.

이번의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제공 및 비용(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복제규칙, 박물관 유물관리 지침/유물 관리 규정)과 한국관광공사(콘텐츠 사용 가이드라인), 한국국학진흥원(정관)에 불과하였다.

라. 공공정보의 민간 포털사 및 기업 제공 현황

일부 공공기관은 민간 포털사나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정보는 상업적 활용 보다는 정보서비스에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나 포털사와 제휴를 통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정보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용 확대를 위해 내비게이션·모바일 업체와도 제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책방송원의 e-영상역사관은 접근성, 편의성 등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뉴스 검색의 접근성을 많이 늘리는 차원에서 포털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시범 제공 단계에 있으며 한국국학진흥원도 향후 포털과의 제휴를 통한 정보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조사에서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일선에서 겪고 있는 공공정보의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애로 사항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적된 문제점은 크게 저작권 관리 지침, 자유이용허락, 신탁 운영, 이용 수수료 등의 저작권 전반에 걸친 사항이었다.

1. 저작권 관리 지침 관련

앞서 저작권 관리 현황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적극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온라인 정보서비스 제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기관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체계와 지침을 포괄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일부 저작권 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일선 담당자는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는 이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세워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정보의 저작권 문제는 일개 기관에서 정할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공공기관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특히 정보 이용 및 제공에 있어 저촉되는 저작권법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관리 지침에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연혁적인 적용 범위나 저작권 처리의 과정, 저작권 여부 판단 기준, 대표적인 분쟁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자유이용허락에 대한 의견

공공정보의 자유이용(free use)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저작권 보

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자 미상으로 저작물 이용이 다소 용이한 정보에서부터 자유이용허락을 표시하거나(예를 들어, CCL 활용) 저작권 기증 등을 통해 제한 없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공공정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조치는 합당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대상과 제한을 무한정 풀다보면 정보 제공과 활용이 확산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보다 어려워지면서 정보의 남용이나 오용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일종의 안전장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3. 신탁 운영 관련

2005년 10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공콘텐츠의 신탁기관으로 허가되면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23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신탁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은 저작권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향후 통합적인 공공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 접근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공공정보 신탁 제도는 홍보나 대상 정보 확보의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는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에 응답한 일부 공공기관들도 향후 공공정보의 신탁제도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신탁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기타 의견

공공정보의 제공시 이용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 등에 따른 수입이 기관 자체 수익이 아닌 국가 세입으로 국고에 귀속된다.¹¹⁶⁾

다만, 이용 수수료를 해당기관의 수입으로 할 경우 자칫 공공정보의 제공이 본래의 목적하는 바를 떠나 해당기관의 사실상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자체 수입으로 돌릴 수 있게 되면,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이용 수수료를 과다하게 올릴 수도 있다. 또한 기관과 경쟁적 정보 제공을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제약을 가하여 시장을 도태시킬 수 있고, 확보된 수입을 제공 정보의 품질관리에 쓰기 보다는 정보 제공을 상업적 수준의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원천 데이터 보유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경쟁력으로 민간의 관련 정보 서비스 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관의 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당해 기관에 귀속되어 재투자자의 형태 또는 인센티브의 형태로 활용케 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공정보들이 민간에서의 재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행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회계처리 규정상 공공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해당 공공기관으로 귀속되지 않아 정보 생산의 품질 제고 등 해당 사업에 재투자되기 어려우며 아울러 이로 인해 상업적 활용 등을 허용하는 정보 제공이 무의미하여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기관에서는 공공정보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공공정보 제공에 투입되는 인프라 확충과 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계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1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7조 (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립박물관 관련 규칙 제5조 (요금의 납부) 등 기관별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국가 또는 상위소관부서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5. 시사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자(혹은 기관)에게 고유하게 발생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공공정보의 경우 우선적으로 저작물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해야 한다. 본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우선적으로 해당 공공정보의 생산 단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판단 가능하다.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유형을 구분해 보면 <표 4-9>와 같다.

<표 4-9> 공공정보의 저작권 발생 유형

생산 방법		저작권 발생 취득 근거	저작권
제작	자체제작	원저작자(해당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외부제작	저작권 양도 계약	
		저작권 양도 계약 부재	외부 제작기관
수집	이관·기증·납본	원저작자 생존	해당 원저작자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소멸/미상
		저작자 미상	

이와 같은 저작권 발생 유형에 따라 공공정보를 구분하여 저작권 관리 지침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담당자들은 관련된 저작권 관리 지침이 없어 저작권 관리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실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지, 귀속되더라도 국가 등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민간의 공공정보 제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 저작권 관리 지침은 단편적으로 해설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의 생산에서 제공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저작권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정보의 제공시 제공관련 체계 및 비용 산정 근거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등 타 법률과 저촉되거나 기존 기관에서 수립한 내부 방침과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저작권 관리는 물론이고 정보의 생산 및 제공을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양질의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원활한 민간 활용을 위해서 이용 수수료의 회계 처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신규 정보의 생산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이 부진한 신탁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공공정보의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면 신탁의 원래 취지에 합당한 정보 활용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를 ‘공공재’로서 아울러 ‘국민의 것’으로 인식하여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접근이 적극 보장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5장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제1절 저작권법에 의한 관리방안

제2절 기타 관련법 개선에 의한 관리방안

제5장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제1절 저작권법에 의한 관리방안

1. 현행 법 체제하의 관리방안

현행 저작권법 체제 하에서 공공정보의 저작권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공공정보 소재 및 권리정보 안내와 공공정보 중개서비스 구축·운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공공저작물의 확인된 권리정보(권리자, 저작권 등록·인증 여부, 이용허락 현황 등)를 연계하여 공공정보 소재안내 및 권리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중개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신청 접수, 보유기관과의 연계·협업의 과정 중재는 물론 저작권 여부 확인, 저작권 권리 처리, 계약체결지원 등 공공저작물을 포함한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지원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신탁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취득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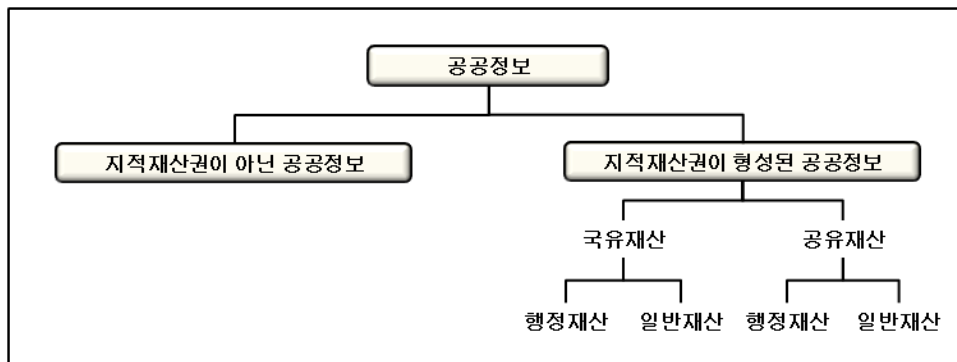
그러나 이에 앞서 먼저 공공기관은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저작물성 여부 판단기준, 저작권 소재 판단기준 등의 저작권 관리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저작물 제공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정보를 구분하여 저작권 형성 유무 판단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공공정보는 크게 지적재산권이 형성된 정보와 형성되지 않은 정보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때 지적재산권이 형성된 정보들이 저작권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상표와 같이 등록을 통해 명확히 권리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저작권의 경우, 특히 공공저작물인 경우 권리 관계 판단이 쉽지 않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¹¹⁷⁾에서는 공공정보를 지적재산권이 형성된 공공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구분하였다. 이는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현행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이 형성된 공공정보는 다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각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1) 지적재산권 형성 유무에 따른 구분

지적재산권이 형성된 공공정보와 지적재산권이 형성되지 않은 공공정보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무형적 재산인 반면에 후자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전자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용이한 반면에 후자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그다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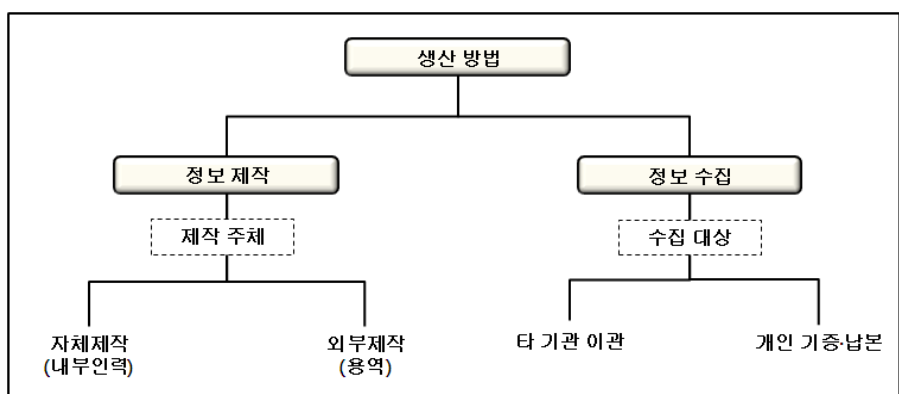
예를 들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이자 공공정보인 사진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이 있었고, 정보공개예외의 사유가 없었다면 사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진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사진에 대한 이용 및 활용까지 허용한 것

117)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9.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은 아니다. 여전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제공받은 자가 국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형성된 공공정보를 제공뿐만 아니라 복제, 실시, 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 및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적재산권자인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지만 계약적 방법으로 이용 범위, 이용 목적, 가공의 범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넓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이 형성된 공공정보와 지적재산권이 형성되지 않은 공공정보는 통제의 가능성과 범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분은 상당히 크게 구분한 것으로서, 이미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분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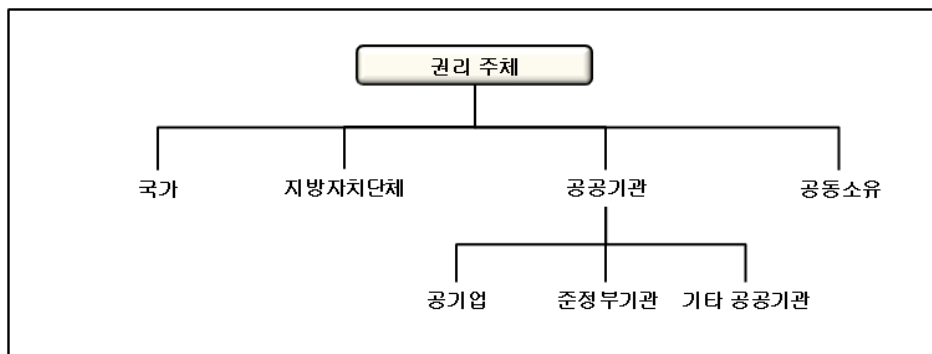
실제로 공공기관은 제공 가능한 공공정보가 저작물이 되는지, 또는 저작물이 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가 되는지, 이용허락은 어느 범위로 하는 것인지 등 공공정보 이용에 있어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가장 당면한 문제는 해당 공공정보가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형성된 공공정보는 좀 더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이 형성된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지재권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이러한 상태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림 5-2) 공공기관의 정보 생산 방법에 의한 구분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은 업무상 제작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업무상 제작한 정보에는 공공기관 자체 비용으로 내부 직원에 의해 제작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타 기관의 비용으로(수탁과제 등) 내부 직원이 생산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자체 비용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어 생산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타 기관의 비용으로 다시 외부에 재 용역을 주어 생산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각각의 경우 서로 다른 권리주체에 따라 저작권이 형성되며,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에 의해 업무상 생산된 정보의 경우는 공공저작물로서 다음과 같이 권리주체를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림 5-3) 공공저작물의 권리주체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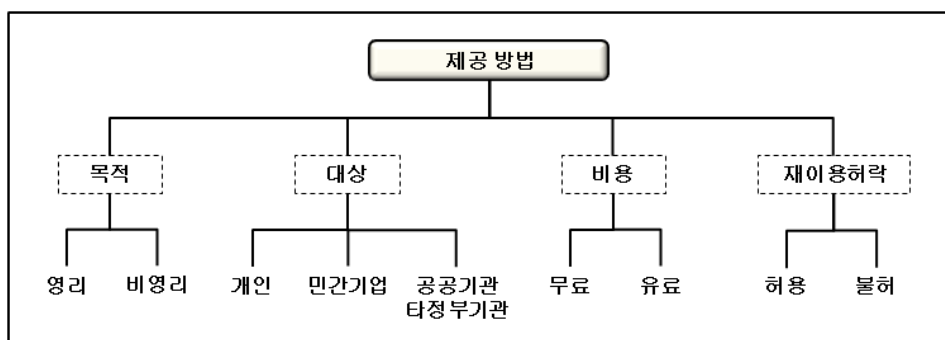
공공기관 자체 비용으로 내부 직원에 의해 생산된 공공정보의 경우 분명한 업무상 저작물로서 공공저작물이 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내부 직원이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수탁된 경우, 또는 외부에 용역을 준 경우 등은 좀 더 면밀하게 권리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 저작권 문제도 조항에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발주기관에서 갖게 된다. 물론 최근 소프트웨어는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또 다른 정보 유형에는 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이관·기증·수탁 받는 경우로서, 이때 기관의 경우는 개인에 비해 권리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민간 활용을 위한 저작권 처리 절차만 분명히 하

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으로 부터의 기증·수탁의 경우는 저작자의 생몰년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워 저작권 만료기간 산정이 곤란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러한 정보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은 직접 제작하거나 수집하여 생산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원정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가공 등을 거쳐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구분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가공의 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저작권 소유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규명된 공공정보 중에서 저작권이 형성된 공공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용 목적, 이용 대상, 재이용허락 유무,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제공 가능한 공공정보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공공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림 5-4) 공공정보 제공에 따른 구분

한편, 이렇게 공공저작물 제공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면, 공공정보의 유통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될 거래상의 문제가 다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신탁을 활성화 한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저작물의 소재 및 이용 방법을 통일성 있고 일관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전에 저작권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이용 확대

공공정보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있는데, 민간에서 공공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 운동을 확산하고, 자유이용 라이선스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일반 저작물의 저작권 기증이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기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저작권 기증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한 제2의 창작활동이다. 저작권 기증은 사회적으로도 지적 가치의 나눔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창작과 이용의 아름다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저작인접권까지 기증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증 운동을 조성하여 공공정보의 자유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자유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CCL이다. CCL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NHN), 다음(DAUM) 등 대부분의 포털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일반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라이선스의 전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해외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국, 호주 등은 이미 공공저작물에 CCL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CCL의 출발은 저작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데 있다. 즉, CCL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가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처분 행위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CCL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CCL에 의한 이용허락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사회적 분위기로 성숙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CCL은 처음 고안될 때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저작자 및 저작권에 관한 정보, 적용된 라이선스의 유형, 추가적인 이용허락과 제한 사항, 영리적 사용과 변경의 허용여부 등의 라이선스 내용을 탐지하고 해석할 수 온톨로지에 근거한 메타데이터를 라이선스 자체에 삽입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CCL을 사용하는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에 대해 통합 메타검색 서비스까지 제공되어야 공공 저작물의 활발한 유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작권의 권한 제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을 제한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가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일반 저작물에 포함시켜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공기관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공공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공공저작물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관련 조문이 별도로 만들어져 현행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개인 저작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법상 정부저작물의 법리는 공익적인 이유에서 저작물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일반 대중에 의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강조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법정이용허락을 규정하여 이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 이용에 관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 제도의 사실상 이용 실적은 저조하다. 그런데 이를 공공저작물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공공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을 규정하는 별도 조문을 마련하여 공공저작물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식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제안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공저작물의 특성상 제한해야하는 권리는 저작권격권 중 공표권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공공저작물의 공표권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공공저작물의 경우 발생하는 동시에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위에서 제안한 법정이용허락의 간소화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저작물의 공표권 제한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보공개를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의한 저작물인지 아니면 일반인(민간기업)에 의한 저작물이 공공기관에 제공된 것인지를 따져 저작재산권 제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의 공개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필요성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이익이 침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의 공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표권이라는 저작권격권은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반면, 저작재산권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공공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법이 개정된 후에는 그 운영에 힘쓰면 되겠지만, 법 개정에는 검토 및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 전까지 국가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 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역사자료 등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국가기관 등에 권리가 있는 공공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제공 및 활용

실적을 평가하여 국가정보화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현재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담당자들이 공공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이유는 저작권과 관련된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은 물론이고 법 개정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2절 기타 관련법 개선에 의한 관리방안

공공정보를 규율하는 기타 관련법으로서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 「국유재산법」 등이 있으며, 이 절에서는 대표적으로 「국유재산법」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사용료 산정방법

라이선스 계약서의 통상의 사용료 산정방법과 아래 「국유재산법」의 사용료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비교를 하지 아니하여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32조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47조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계속)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3.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 ⑤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times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div (\text{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⑥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 ⑧ 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먼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주거용’ 국유재산, ‘경작용’ 국유재산의 언급이 있는 것만 보아도 「국유재산법」이 대상으로 한 주된 재산은 부동산이란 점은 명확하다. 한편, 동조 제2항 제2호에는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역시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유재산법」이 부동산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상정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부동산과 저작권은 사용의 태양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의 산정방법도 달라야 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저작권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 부동산 사용의 독점적 성격과 저작권 사용의 비독점적 성격

부동산은 1인이 사용하면 타인의 사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독점적 사용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국유재산법」은 사용자의 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하여 사용료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성질상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고 더욱이 국유의 저작권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으로 인하여 독점적 사용허가보다는 비독점적 사용허가가 보다 일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산정방법은 국유의 저작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는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간단히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저작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 사적 관계에서의 비독점적 라이선스계약 보다도 훨씬 높은 사용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사용료는 결과적으로 국유저작물의 이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나. 가치평가의 문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토지 외의 재산의 재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 등의 부동산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평가가 쉽고 감정평가법인은 주로 부동산이 전문이므로 가치평가를 해 줄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은 사진, 음악,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중에는 가치평가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저작권이 많다. 그리고 저작물을 가치평가해 줄 기관을 찾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사용료를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은 결국 국유저작물의 이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 정액사용료의 문제

「국유재산법」은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액사용료의 산정방법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당해 유체물을 이용 및 활용하지 아니하고 점유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로 인하여 제3자의 사용이 배제되므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유저작권은 점유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점유에 의하여 제3자의 사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유인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도 무조건 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결국 사용자는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국유저작물의 사용을 꺼려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국유저작물의 이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라. 사용료 면제의 문제

- 국유재산법 제34조

<p>제34조 (사용료의 면제)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p>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

위 「국유재산법」 제34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에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는 매우 협소하다. 반면에 국유저작물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최근에 많은 논의가 있다. 정부에서 일부 국유저작물을 무상으로 사용허락을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법」의 위 규정으로 인하여 무상사용의 허락이 어렵다.

덧붙여 앞서 언급한 정액사용료의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한다. 즉, 사용자가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데 위 규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사용료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저작권 특유의 사용료 산정방법의 미고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유재산법」과 달리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지적재산권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에 대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인 지적재산권의 사용료에 관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국유재산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특허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저작권에도 반드시 적합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로 사용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저작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거나, 사진 전시 등의 영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허가는 그 특성상 사용자의 상업적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저작물의 사용은 반드시 상업적 사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무형적 재산으로 분류되는 저작권과 특허권도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국유재산법」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둘째 치고 지적재산권을 산정하지 않고 사용료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2. 사용허가에 관한 문제

가. 재사용허가 금지의 문제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민법에서 임대차계약에서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유저작권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서 위 규정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에서 국유저작권을 사용하는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수요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업체로부터 발생할 것임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업체들은 국유저작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를 DB화 시키거나 가공하여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최종이용자(end-user)에게 서비스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재사용허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이 국유저작권에 적용되는 국유저작권의 가장 큰 수요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결국 국유저작물의 이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나. 허가방법의 문제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1조에서는 사용허가의 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면 국유저작권을 수의의 방법으로 할 경우가 존재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유저작권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사진 등과 같이 매우 단순한 저작권으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고도의 저작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은 단순한 저작물까지 일반경쟁을 거쳐서 사용허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유저작권 사용허가의 특징은 비독점적 허가란 점에 있다. 부동산과 달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이란 것은 매우 무의미하며, 결정된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사용허가가 수여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 허가기간의 문제

- 국유재산법 제35조

제35조 (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46조

제46조 (대부기간) ①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그 밖의 재산: 1년

②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인 국유저작권은 5년 일반재산인 국유저작권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일단 사용허가를 줄 수 있는 국유저작권이라면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용허가 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국유저작권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무엇이 저작물인지조차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재산인 국유저작권과 일반재산인 국유저작권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저작권의 사용허가에서 사용기간을 달리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듯하다.

한편, 국유저작권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허가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자에게도 사용의 기회를 주고자 갱신의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유저작권은 사용에 있어서 비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굳이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이유도 없고, 따라서 갱신의 횟수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 갱신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유저작권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혼선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견된다.

라. 공동소유 저작권의 사용허가의 문제

「국유재산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공동소유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제11조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단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6호에서 유일하게 공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국유재산법」에서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역시 동법이 국유재산을 부동산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고, 민법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명확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국가가 일반 사인에게 창작을 의뢰한 경우에 저작권이 공동소유가 되는지부터 문제가 된다. 저작권의 공동소유가 발생하는 경로는 부동산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공동소유된 저작권의 사용허가는 일반인 간에 공동소유된 저작권의 사용허가와 다른 이념이 지배한다. 예를 들어 일반인 간에 공동소유된 저작권의 사용허가는 사유물의 관리·처분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 제48조에서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재산권을 행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저작권법 제48조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위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공동소유한 모든 저작물의 사용허가에

있어서 그때마다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계약서를 잘 만듦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다.

마침 「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일반규정」 제56조에서는 국가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은 공동소유로 하고 사용허가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은 계약에 반영될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고 그 전에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 한정되고, 개발자의 사용에만 집중하였지 국가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규정 제56조

<p>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안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p> <p>④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p> <p>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

제6장 결 론



제6장 결론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에서의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공공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구해 왔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공공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 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기를 띠면서 ‘공공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정보 제공 또한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공공정보에 기반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저작권을 문제 삼아 차단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정보의 소유권과 활용에 대한 논란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고등학생이 수도권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경기버스 운행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경기도가 정보 도용이라며 전격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수집해 제공하고 있는 주유소 유가 정보를 한 대학생이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배포했다가 석유공사측이 차단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사실 경기도와 한국석유공사 등은 현행 법 규정 상 민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마땅한 근거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적인 정보 이용을 이유로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론의 못매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버스 운행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을 중지하였으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반 국민들의 공공정보 접근을 자유롭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작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정보의 잠재적 가치 인식을 통해 민간의 활용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특히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방안 부재로 민간의 원활한 이용은 물론 일선 공공기관에서도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 영국, 호주, 프랑스, 미국 등은 공공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저작권법」에 일부 비보호저작물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실제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공공정보의 저작권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정보 관련 현행 입법과 공공정보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 관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정보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공공정보 저작권 관련 사례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공공정보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로서, 이는 전통적인 저작권법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므로 기존 권익을 유지·보존하는데 적합하고, 기존 법제도의 틀을 변형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생산되는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저작권법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견해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왕실저작권, 의회저작권, 클릭유즈라이선스 제도, 그리고 호주의 왕실저작권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저작권법 테두리 하에서도 공공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공공정보의 저작재산권은 제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인정하는 견해로서, 이는 공공정보 이용자의 입장을 극대화한다. 이를 제도화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성명표시는 의무화함으로써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등 52개국에서 각국의 저작권법에 맞게 고유의 CCL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Data.gov.uk'는 CC 3.0 모델과 연계함으로써 영국 공공정보의 재이용 라이선스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공공정보의 저작인격권은 제한하고, 저작재산권은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저작권법」의 저작활동 격려라는 취지에는 반하지만, 일부 저작권은 내용상 제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정보공개법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저작권법」상 공표권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와 대립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행정기관 정보공개법이 성립되면서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익상의 이유로 제공한 경우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본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정보를 둘러싼 저작권 관리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현재 우리 「저작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 유형이 공공정보의 저작권 관리 체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공공저작물의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CCL 도입의 확산 등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행 법령이나 제공 절차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든 공공저작물에 대한 CCL 적용은 현실적으로 힘들며, 사안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저작권법」과의 관계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민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되, 공공정보의 특성에 따라 민간의 저작권자가 양보해야 할 내용(예컨대 일본법에서와 같은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에 대한 제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예컨대 제시된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것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할 것임)으로서의 저작권 행사 등에서 관계 정립의 접점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권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저작권법」상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조문의 신설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정보 중에서 저작물성을 이루고

있는 공공저작물¹¹⁸⁾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동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73조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으로는 실질적인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등록 및 식별체계 부여, 권리관리, 민간유통 촉진 등을 아우르는 법조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향후 공공저작물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 영국은 저작권법 상에서 공공저작물 관련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공공정보의 활용을 위한 법은 기본적으로 공법적 성격의 법으로서 정부 등에 공공정보의 제공·개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기구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동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공공정보의 처분·사용 등에 대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저작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가 필요하다. 저작권의 이념인 창작 의욕의 고취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즉, 공공저작물의 소재 안내를 비롯하여 이용방법이나 절차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의 구축·운용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공공저작물 클리어링 하우스이다.

저작물을 빠른 시간 내에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유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따라서 수많은 공공저작물의 연계·통합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클리어링 하우스가 필요한 것이다. 수집 측면에서는 소재정보 및 메타데이터 실시간 등록·확인, UCI

118) 공공정보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첫째, 창작성이 인정되는 어문·사진·미술·음악·도형·영상 등의 저작물, 둘째,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

(콘텐츠식별체계) 관리가 필요하고, 라이선스 측면에서는 공공저작물 목록, 권리정보 DB가 요구된다. 또한 업무지원 측면에서는 과금 정책 및 회계처리방안, 권리이전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산업적 활용이 이루어져 민간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저작물 신탁제도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민간의 수요자들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개별 공공기관들로부터 각각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그런데 만약 공공저작물에 대한 특정의 신탁기관이 지정되어 있다면 민간 수요자들은 개별 공공기관을 일일이 접촉할 필요 없이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공공정보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 수요자들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의 투자를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감소한다.

또한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저작권 관리 등에 있어 전담인력의 부족이나 전문지식 미흡 등으로 인해 업무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탁제도의 현실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공공저작물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신탁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이러한 신탁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공공저작물 유통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탁기관을 통해 공공저작물 유통이 가능해진다면, 개별 기관에서의 비용 절감은 물론 전체적인 마케팅에 따른 수익 극대화도 도모할 수 있다. 신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이러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 내지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공공정보 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표준약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권리 행사 및 정보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본정책이 수립되어 진다면, 사실상 신탁제도의 실효성은 무의미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업적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에 대한 신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실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공공저작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비보호저작물을 제외한 간행물이나 연감, 백서, 연구보고서, 국정교과서, 그림엽서, 통계, 각종 데이터 등과 같은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민간 제공에 있어서도 이용허락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업무 담당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 그래서 공공저작물의 민간제공을 위한 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민간에서의 저작물 기증·양도에서부터 민간 제공 계약에 필요한 저작권 관리 절차 등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 보급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 실무자 대상 저작권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발생하게 될 공공저작물로 인해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저작권 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저작물에 대한 문제 대응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저작물에 대해 자유이용 확산을 위한 제도화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관리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무조건 배타적인 권리 즉,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만약 공공저작물의 무료 제공이 특정부처의 이익이나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자유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무료제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 자유이용 확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

나 그 방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와 저작권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저작권법」의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의 개방·공유는 많은 민간 수요자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 창달과 더불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비롯하여 저작자를 찾기 어려운 고아(불명) 저작물, 기타 절판 저작물에 대해 동유럽 일부 국가와 같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를 도입하여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관련 법률 개선(「저작권법」, 「국유재산법」 등)
- 공공저작물 유형 분류
- 공공저작물 실태조사(전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체계 수립

그간 국내에서는 공공정보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미흡했었으나, 본 연구 결과가 향후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를 위한 법률 개선 및 정책 수립 등 제반 사항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참고 문헌

• 국내 단행본

- 김윤명. 2009.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류종현. 2008.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1인 1미디어 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개정 저작권법 해설』.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박덕영 역. 2005. 『영국 저작권법』.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익환 외. 2005. 『자유이용 저작물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방석호. 200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달주 역. 2009. 『프랑스 저작권법』.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송영식, 이상정. 2009. 『저작권법개설』. 제5판. 서울: 세창출판사.
- 수호. 2009. 『공공정보 민간 활용을 위한 효과적 정책 지원 방안 수립 연구』.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이규호, 서재권. 2009.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영대. 2006. 『공공정보 상용화에 관한 입법 연구』.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오승종, 이해완. 2005. 『저작권법』. 제4판. 서울: 박영사.
- 임원선. 2007. 『저작권 이용허락 효율화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서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 장주영. 2003. 『미국 저작권 판례』. 서울: 육법사.
- 정진섭, 이미영. 2009.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최영묵 엮음. 2009. 『미디어콘텐츠와 저작권』. 서울: 논형.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7. 『공공정보가 디지털 경제를 움직인다: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9.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연

구』.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내 논문

- 박성호. 2003. 지적재산과 정보공유. 『계간저작권』. 제64호: 2-24.
- 시귀선. 2009.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59-188.
- 윤종수. 2008.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계. 『저스티스』. 통권 106호: 424-461.
- 정경희. 2007.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1): 165-186.
- 정윤경. 2006. 디지털 영상저작물의 집중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3-45.

• 구미 단행본, 논문, 정부문서

- David Sinacore-Guinn. 1993.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European Commission. *Public Sector Information - Raw Data for New Services and Products*. [online]. [cited 2010.3.12].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policy/psi/index_en.htm>.
-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ncil.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fficial Journal L 345, 31/12/2003 P.0090-0096.
- Latman, Alan, Robert A. Gorman and Jane C. Ginsburg. 1989. *Copyright for the Nineties: Cases and Materials*. The Michie Company.
- M. Van Eechoud and B. Van der Wal. 2008. *Creative commons licensing for public sector information: Opportunities and pitfalls*.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
-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9. *The United Kingdom Report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9*.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1999. *Copyright in Works Commissioned by the Crown*. Copyright Guidance. August 31, 1999(Revised March 15, 2008). [online]. [cited 2010.3.12]. <<http://www.opsi.gov.uk/advice/crown-copyright/copyright-guidance/copyright-in-works-commissioned-by-the-crown>>.
-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PSI Licence Terms and Conditions(Licence to Reproduce Public Sector Information)*. [online]. [cited 2010.3.12]. <<http://www.opsi.gov.uk/click-use/system/licenceterms/CCWPS03-00.pdf>>.
- Onsrud, H.J., X. Lopez. 199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isseminating Digital Geographic Data, Products, and Services: Conflicts and Commonalities among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Approaches*. in Masser, Ian and Francois Salge ed. *European Geographic Information Infrastructures: Opportunities and Pitfalls*. London: Taylor and Francis. pp.153-167. <<http://www.spatial.maine.edu/~onsrud/pubs/copyright39.pdf>>.
- U.K. Government. 1999. *Future Management of Crown Copyright*. HMSO. White paper. [online]. [cited 2010.3.12]. <<http://www.opsi.gov.uk/advice/crown-copyright/future-management-of-crown-copyright.pdf>>.
- U.K. Government. 1998. *Crown Copyright in the Information Age*. HMSO. Green paper. [online]. [cited 2010.3.12]. <<http://www.uk-legislation.hmso.gov.uk/advice/crown-copyright/crown-copyright-in-the-information-age.pdf>>.
- WIPO. 2006.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line]. [cited 2010.3.12]. <http://www.wipo.int/about-ip/en/about_collective_mngt.html>.

- 일본 논문, 정부문서

- 일본 국회도서관. 2009. 『종합적인 문서관리시스템 정비에 관해서(総合的な文書管理システムの整備について)』 . [online]. [cited 2010.3.12]. <<http://warpp.ndl.go.jp/info:ndljp/pid/283520/www.soumu.go.jp/gyoukan/kanri/s>>

ogobun.htm>.

일본의 사적녹음보상금분배규정. [online]. [cited 2010.3.12]. <http://www.sarah.or.jp/sarah/sarah05_i.html>.

일본 전자정부평가위원회 2008년도 보고서. [online]. [cited 2010.3.12]. <<http://www.kantei.go.jp/jp/singi/it2/hyoukaworking/dai01/sankou1.pdf>>.

일본 총무성. 『行政情報化推進基本計』. 1997年(平成9年) 12月20日改定. [online]. [cited 2010.3.12]. <<http://www.e-gov.go.jp/doc/19971220doc.html>>.

大塚 奈奈繪. 2001. 電子政府と行政情報. 『情報管理』. 44(6): 430-440.

大橋有弘. 1997. 公的データ流通促進のための法的・制度的課題. 『情報管理』. 39(10): 760-767.

各府省情報化統括責任者(CIO) 連絡會議決定. 2004. 『行政情報の電子的提供に関する基本的考え方(指針)』. [online]. [cited 2010.3.12]. <<http://www.e-gov.go.jp/doc/20041112doc1.pdf>>.

田中宏和. 2009. 著作権の放棄制度についての一考察. [online]. [cited 2010.3.12] <<http://www.jotsugakkai.or.jp/doc/taikai2009/yokou/earlybird/tanaka.pdf>>.

藤本英介. 1998. 『ネット環境下の著作権と公正利用』. [online]. [cited 2010.3.12]. <<http://www.nic.ad.jp/ja/materials/iw/1997/proceedings/fujimoto/fairuse.html>>.

松井修視. 1997. 著作権法上の公表権と情報公開・知る権利. 『大分縣立芸術文化短期大學研究紀要』. 第35卷: 167-174.

Karl-Friedrich Lenz. 著作権とCreative Commons 實施權. [online]. [cited 201.3.12]. <<http://k.lenz.name/j/r/CC.pdf>>.

• 법령정보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영국 Statute Law DB <<http://www.statutelaw.gov.uk>>.

프랑스 Legifrance <<http://www.legifrance.gouv.fr>>.

호주 ComLaw <<http://www.comlaw.gov.au>>.

- 기관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디브리리 <<http://www.dbrary.net>>.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서울시 문화정보서비스 <<http://www.visitseoul.net>>.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유교넷 <<http://www.ugyo.net>>.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http://www.cjculture.or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http://www.creativecommons.or.kr>>.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한국국학진흥원 <<http://www.koreastudy.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상품정보 <<http://www.tgate.or.kr>>.
한국소비자원 생필품가격정보 <<http://price.tgate.or.kr>>.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한국정책방송원 <<http://www.ktv.go.kr>>.
한국직업방송 WorkTV <<http://www.worktv.or.kr>>.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
e-영상역사관 <<http://www.ehistory.kr>>.
미국 Kansas.gov <<http://www.kansas.gov>>.
영국 data.gov.uk <<http://data.gov.uk>>.
영국 OPSI <<http://www.opsi.gov.uk>>.
일본 문화청 <<http://www.bunka.go.jp>>.

부 록



- A. 해외 주요국의 공공정보 관련 저작권법
- B. OPSI 저작권 가이드

부 록 A

해외 주요국의 공공정보 관련 저작권법

1. 영국 저작권법 175
2. 호주 저작권법 188
3. 프랑스 저작권법 206

1. 영국 저작권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10장 기타 규정 및 일반 규정

왕실 및 의회의 저작권

제163조 (왕실 저작권)

- (1)왕실 또는 왕실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 수행상 제작한 저작물은—
- (a)제 153조 제 1항(저작권 보호 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 (b)왕실은 그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
- (2)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편에서는 “왕실 저작권”이라고 한다.
- (3)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왕실의 저작권은 다음의 기간 동안 존속 한다—
- (a)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125년의 기간이 지난 때까지 또는,
 - (b)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75년이 경과되기 전에 상업적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최초 발행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때까지.
- (4)공동저작물에서 그 저작자의 전부가 아닌 1인 또는 그 이상의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 조는 그 저작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5)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에 명시된 제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의 규정은 그것이 다른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왕실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 (6)이 조는 의회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또는 그 한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4조 (법률 및 조치에 대한 저작권)

- (1)왕실은 의회의 모든 법률(스코틀랜드 의회의 법률, 웨일즈 국회의 조치, 웨일즈 국회의 법률) 또는 영국교회 총회의 조치에 대한 저작권에 관하여 자격을 가진다.
- (2)그 저작권은 왕실의 재가가 있는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때까지 왕실의 재가에 의하여 존속한다.
- (3)이 편에서 왕실의 저작권은 이 조의 저작권을 포함한다;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의 규정은 다른 왕실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 (4)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되지 아니한다.
 - (a)영국 교회 총회의 조치나 법률의 경우, 왕실의 재가가 있는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때까지 그리고
 - (b)웨일즈 국회의 조치의 경우, 의회에서 왕실의 재가를 받은 그 해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때까지

제165조 (의회저작권)

- (1)상원이나 하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은—
 - (a)제153조 제1항(저작권 보호 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 (b)의회는 의회가 제작한 저작물,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자가 되며, 양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일 경우, 양원이 최초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 (2)그러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편에서는 “의회 저작권”이라고 한다.
- (3)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대한 의회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때 까지 존속한다.
- (4)이 조의 목적상 하원이나 상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 (a)의회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 수행상 제작한 저작물,
(b)의회의 의사절차의 녹음물, 영화, 생방송;
다만, 단순히 의회가 위촉하였거나, 의회를 대신하여 위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라 보지 아니한다.
- (5)공동저작물에서 그 저작자가 전부가 아닌 1인 또는 그 이상이 하원 또는 상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행동하는 경우, 이 조는 그 저작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6)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에 명시된 제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의 규정은 그것이 다른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 (7)이 조는 또한 추밀원령이 명시하는 예외나 수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의 다른 입법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편에서 말하는 “의회저작권”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8)제7항의 추밀원령을 포함하는 성문규정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제166조 (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 (1)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상원이나 하원 또는 양원에 속한다.
- (2)공공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그 법안이 첫 번째로 제출도니 의회에 속하고, 법안이 두 번째 의회에 상정된 후에는 양원의 공유에 속하며, 법안이 제출된 의회로 법안의 본문이 넘겨진 때로부터 존속한다.
- (3)사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양원에 공동으로 귀속하고, 그 법안의 사본이 양원 중 어느 하나에 최초로 기탁된 때로부터 존속한다.
- (4)개인적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상원에 우선적으로 속하고, 그 법안이 하원에 이송된 후에는 양원이 공유에 속하며, 그 법안이 상원이 제1독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존속한다.

(5)이조에 의한 저작권은 다음에 의하여 소멸한다—

(a)왕실의 재가에 의하여, 또는

(b)그 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법안의 철회나 부결 또는 회기의 만료에 의하여: 다만, 상원 회기 중의 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1911년 및 1949년 의회법에 의하여 그 회기 중에 왕실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그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존속한다.

(6)이 편에서 의회저작권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은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의한 저작권에 적용된다.

(7)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법안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번의 회기에서 통과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된 법안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6A조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저작권)

(1)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스코틀랜드 의회 법인에 속한다.

(2)이 조에서의 저작권은 의회로 법안의 본문이 넘겨진 때로부터 다음의 경우까지 존속한다.

(a)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을 때까지 또는

(b)만일 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법안의 철회나 부결 또는 회기가 만료된 경우

(3)이 편에서의 의회저작권(165조는 제외)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은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의한 저작권에 적용된다.

(4)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법안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왕실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다음 의회에 다시 소개된 법안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

지 아니한다.

제166B조 (북아일랜드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저작권)

- (1)북아일랜드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북아일랜드 의회 에 속한다.
- (2)이 조에서의 저작권은 의회로 법안의 본문이 넘겨진 때로부터 다음의 경우 까지 존속한다.
 - (a)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을 때까지 또는
 - (b)만일 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법안의 철회나 부결 또는 회기가 만료된 경우
- (3)이 편에서의 의회저작권(165조는 제외)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은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의한 저작권에 적용된다.
- (4)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법안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왕실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다음 의회에 다시 소개된 법안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6C조 (웨일즈 국회에 의해 제안된 조치에 대한 저작권)

- (1)웨일즈 국회에 소개된 모든 제안된 국회의 조치에 대한 저작권은 웨일즈 국회에 속한다.
- (2)이 조에서의 저작권은 제안된 국회 조치의 본문이 국회로 넘겨진 때로부터 다음의 경우까지 존속한다.
 - (a)제안된 국회 조치가 의회에서 왕실의 재가를 받을 때까지 또는
 - (b)만일 제안된 국회 조치가 의회에서 왕실의 재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조치의 철회나 부결 또는 회기가 만료된 경우
- (3)이 편에서의 의회저작권(165조는 제외)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은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의한 저작권에 적용된다.

(4)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제안된 국회 조치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회에서 왕실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다음 의회에 다시 소개된 조치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6D조 (웨일즈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저작권)

- (1)웨일즈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에 대한 저작권은 웨일즈 국회에 속한다.
- (2)이 조에서의 저작권은 법안의 본문이 국회로 넘겨진 때로부터 다음의 경우 까지 존속한다.
- (a)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을 때까지 또는
- (b)만일 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법안의 철회나 부결 또는 회기가 만료된 경우
- (3)이 편에서의 의회저작권(165조는 제외)이라 함은 이 조에 의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 편은 다른 의회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에 의한 저작권에 적용된다.
- (4)이 조에 의하여 일단 저작권이 존속한 후에는 법안에 대한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왕실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다음 의회에 다시 소개된 법안에 관하여 이 조의 추후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7조 (의회: 저작권에 관한 보충 규정)

- (1)의회 각 원은 저작권의 소유, 취급, 행사를 위하여,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지위는 정회나 해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저작권자로서의 하원의 직능은 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수행한다; 그리고 의장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의장직이 결원일 경우, 그 직능은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수행할 수 있다.
- (3)이를 위하여 의회 해산시 하원의 의장,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었던 자는 의회의 다음 회기에 그에 대응하는 임명이 있을 때까지 그 직능

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4)저작권자로서의 상원의 직능은 상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수행한다; 그리고 의장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의장직이 결원일 경우, 그 직능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장이 수행할 수 있다.

(5)저작권에 관한 법적절차는—

(a)“하원의장”의 명의로 하원에 의하여 또는 하원에 대하여 제기된다;

(b)“의회 사무관”의 명의로 상원에 의하여 또는 상원에 대하여 제기된다.

[원문]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hapter X. Miscellaneous and General

Crown and Parliamentary copyright

163 Crown copyright

- (1) Where a work is made by Her Majesty or by an officer or servant of the Crown in the course of his duties –
 - (a) the work qualifies for copyright protection notwithstanding section 153(1) (ordinary requirement as to qualific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 (b) Her Majesty is the first owner of any copyright in the work.
- (2) Copyright in such a work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Crown copyright”, notwithstanding that it may be, or have been, assigned to another person.
- (3) Crown copyright in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continues to subsist –
 - (a) until the end of the period of 125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work was made, or
 - (b) if the work is published commercially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75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it was made, until the end of the period of 5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it was first so published.
- (4)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where one or more but not all of the authors are persons falling within subsection (1), this section applies only in relation to those authors and the copyright subsisting by virtue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work.
- (5) Except as mentioned above, and subject to any express exclusion elsewhere in this Part,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in relation to Crown copyright as to other copyright.
- (6)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work if, or to the extent that, Parliamentary copyright subsists in the work (see sections 165 to 166D).

164 Copyright in Acts and Measures

-
- (1) Her Majesty is entitled to copyright in every Act of Parliament, Act of the Scottish Parliament, Measur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Act of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or Measure of the General Synod of the Church of England.
 - (2) The copyright subsists from Royal Assent until the end of the period of 5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Royal Assent was given.
 - (3) References in this Part to Crown copyright (except in section 163) include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nd, except as mentioned above,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in relation to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s to other Crown copyright.
 - (4) No other copyright, or right in the nature of copyright, subsists
 - (a) in the case of an Act or a Measure of the General Synod of the Church of England, until the end of the period of 5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Royal Assent was given, and
 - (b) in the case of a Measur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until the end of the period of 5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Measure was approved by Her Majesty in Council.

165 Parliamentary copyright

- (1) Where a work is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House of Commons or the House of Lords—
 - (a) the work qualifies for copyright protection notwithstanding section 153(1) (ordinary requirement as to qualific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 (b) the House by whom, or under whose direction or control, the work is made is the first owner of any copyright in the work, and if the work is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both Houses, the two Houses are joint first owners of copyright.
- (2) Copyright in such a work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Parliamentary copyright”, notwithstanding that it may be, or have been, assigned to another person.
- (3) Parliamentary copyright in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continues to subsist until the end of the period of 5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work was made.
-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works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House of Commons or the House of Lords include—
 - (a) any work made by an officer or employee of that House in the course of his duties, and
 - (b) any sound recording, film, or live broadcast of the proceedings of that House; but a work shall not be regarded as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
- either House by reason only of its being commissioned by or on behalf of that House.
- (5)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where one or more but not all of the authors are acting on behalf of,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House of Commons or the House of Lords, this section applies only in relation to those authors and the copyright subsisting by virtue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work.
- (6) Except as mentioned above, and subject to any express exclusion elsewhere in this Part,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in relation to Parliamentary copyright as to other copyright.
- (7)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lso apply, subject to any exceptions or modifications specified by Order in Council, to works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any other legislative body of a country to which this Part extends; and references in this Part to “Parliamentary copyright”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 (8) A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an Order in Council under subsection (7) shall be subject to annulment in pursuance of a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166 Copyright in Parliamentary Bills

- (1) Copyright in every Bill introduced into Parliament belong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to one or both of the Houses of Parliament.
- (2) Copyright in a public Bill belongs in the first instance to the House into which the Bill is introduced, and after the Bill has been carried to the second House to both Houses jointly, and subsists from the time when the text of the Bill is handed in to the House in which it is introduced.
- (3) Copyright in a private Bill belongs to both Houses jointly and subsists from the time when a copy of the Bill is first deposited in either House.
- (4) Copyright in a personal Bill belongs in the first instance to the House of Lords, and after the Bill has been carried to the House of Commons to both Houses jointly, and subsists from the time when it is given a First Reading in the House of Lords.
- (5)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ceases –
- (a) on Royal Assent, or
 - (b) if the Bill does not receive Royal Assent, on the withdrawal or rejection of the Bill or the end of the Session:
- Provided that, copyright in a Bill continues to subsist notwithstanding its rejection in any Session by the House of Lords if, by virtue of the Parliament Acts 1911 and 1949, it remains possible for it to be presented for Royal Assent in that Session.
- (6) References in this Part to Parliamentary copyright (except in section 165) include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nd, except as mentioned above,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in relation to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s to other Parliamentary copyright.

- (7) No other copyright, or right in the nature of copyright, subsists in a Bill after copyright has once subsisted under this section;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subsequent operation of this section in relation to a Bill which, not having passed in one Session, is reintroduced in a subsequent Session.

166A Copyright in Bills of the Scottish Parliament

- (1) Copyright in every Bill introduced into the Scottish Parliament belongs to the Scottish Parliamentary Corporate Body.
- (2)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subsists from the time when the text of the Bill is handed in to the Parliament for introduction –
- (a) until the Bill receives Royal Assent, or
 - (b) if the Bill does not receive Royal Assent, until it is withdrawn or rejected or no further parliamentary proceedings may be taken in respect of it.
- (3) References in this Part to Parliamentary copyright (except in section 165) include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nd, except as mentioned above,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in relation to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s to other Parliamentary copyright.
- (4) No other copyright, or right in the nature of copyright, subsists in a Bill after copyright has once subsisted under this section;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subsequent operation of this section in relation to a Bill which, not having received Royal Assent, is later reintroduced into the Parliament.]Annotations:

166B Copyright in Bills of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 (1) Copyright in every Bill introduced into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belongs to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Commission.
- (2)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subsists from the time when the text of the Bill is handed in to the Assembly for introduction –
- (a) until the Bill receives Royal Assent, or
 - (b) if the Bill does not receive Royal Assent, until it is withdrawn or rejected or no further proceedings of the Assembly may be taken in respect of it.
- (3) References in this Part to Parliamentary copyright (except in section 165) include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nd, except as mentioned above,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in relation to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s to other

Parliamentary copyright.

- (4) No other copyright, or right in the nature of copyright, subsists in a Bill after copyright has once subsisted under this section;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subsequent operation of this section in relation to a Bill which, not having received Royal Assent, is later reintroduced into the Assembly.

166C Copyright in proposed Measure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 (1) Copyright in every proposed Assembly Measure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belongs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Commission.
- (2)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subsists from the time when the text of the proposed Assembly Measure is handed in to the Assembly for introduction –
- (a) until the proposed Assembly Measure is approved by Her Majesty in Council, or
 - (b) if the proposed Assembly Measure is not approved by Her Majesty in Council, until it is withdrawn or rejected or no further proceedings of the Assembly may be taken in respect of it.
- (3) References in this Part to Parliamentary copyright (except in section 165) include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nd, except as mentioned above,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in relation to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s to other Parliamentary copyright.
- (4) No other copyright, or right in the nature of copyright, subsists in a proposed Assembly Measure after copyright has once subsisted under this section;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subsequent operation of this section in relation to a proposed Assembly Measure which, not having been approved by Her Majesty in Council, is later reintroduced into the Assembly.

166D Copyright in Bill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 (1) Copyright in every Bill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belongs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Commission.
- (2)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subsists from the time when the text of the Bill is handed in to the Assembly for introduction –
- (a) until the Bill receives Royal Assent, or
 - (b) if the Bill does not receive Royal Assent, until it is withdrawn or rejected or no further proceedings of the Assembly may be taken in respect of it.
- (3) References in this Part to Parliamentary copyright (except in section 165) include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nd, except as mentioned above,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in relation to copyright under this section as to other

Parliamentary copyright.

- (4) No other copyright, or right in the nature of copyright, subsists in a Bill after copyright has once subsisted under this section;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subsequent operation of this section in relation to a Bill which, not having received Royal Assent, is later reintroduced into the Assembly.

167 Houses of Parliament: supplementary provisions with respect to copyright

- (1) For the purposes of holding, dealing with and enforcing copyright, and in connection with all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copyright, each House of Parliament shall be treated as having the legal capacities of a body corporate, which shall not be affected by a prorogation or dissolution.
- (2) The functions of the House of Commons as owner of copyright shall be exercised by the Speaker on behalf of the House; and if so authorised by the Speaker, or in case of a vacancy in the office of Speaker, those functions may be discharged by the Chairman of Ways and Means or a Deputy Chairman.
- (3) For this purpose a person who on the dissolution of Parliament was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Chairman of Ways and Means or a Deputy Chairman may continue to act until the corresponding appointment is made in the next Session of Parliament.
- (4) The functions of the House of Lords as owner of copyright shall be exercised by the Clerk of the Parliaments on behalf of the House; and if so authorised by him, or in case of a vacancy in the office of Clerk of the Parliaments, those functions may be discharged by the Clerk Assistant or the Reading Clerk.
- (5)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copyright –
- (a) shall be brought by or against the House of Commons in the name of “The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and
- (b) shall be brought by or against the House of Lords in the name of “The Clerk of the Parliaments”.

- 영국 저작권법은 ‘VII. The Crown’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장만 수록
- 현 저작권법(version 4, 2007.5.3)의 원문(<http://www.statutelaw.gov.uk>)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수호에서 번역
- 참고 : 박덕영 번역. 2005. 『영국 저작권법(200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호주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제7장 왕실

제1관 왕실 저작권

제176조 (왕실의 지시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왕실 저작권)

- (1)이 섹션과는 별도로, 연방정부 혹은 자치주의 지시나 통제에 의거해서 제작한 문학, 드라마(연극), 뮤지컬 혹은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저작권은 이 서브섹션에 의해 그 작품에 존재하게 된다.
- (2)연방정부 혹은 자치주는, 연방정부 및 자치주의 지시나 통제에 의거해서 제작한 문학, 드라마, 뮤지컬 혹은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해당하며, 이 장 및 제10장의 조건에 따른다.

제177조 (왕실의 지시에 따라 호주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왕실 저작권)

만일 연방 정부 혹은 자치주의 지시나 통제에 의거해서 처음으로 출판된다면, 연방 정부 혹은 자치주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문학, 드라마, 뮤지컬 혹은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되며, 이 장과 제10장의 위 조건에 따른다.

제178조 (왕실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필름과 레코딩에 대한 왕실 저작권)

- (1)이 섹션과는 별도로, 연방 정부 혹은 자치주의 지시나 통제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사운드 레코딩이나 영화 필름의 저작권이 연방정부 혹은 자치주에 없다면, 그 레코딩이나 필름에 대한 저작권은 서브섹션에서 명시한 바를 따른다.
- (2)이 장과 제10장의 조건에 따르는 연방 정부 혹은 자치주는, 연방 정부 혹은 자치주의 지시나 통제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사운드 레코딩이나 영화 필름에 대해 그 저작권을 갖는다.

제179조 (저작권의 소유와 관련된 조항들은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제176조 내지 제178조는, 연방 정부 혹은 자치주를 대신하거나 혹은 그들에 의해 저작물의 저자와 혹은 영화 필름이나 사운드 레코딩의 제작자와의 어떤 합의에 구속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 저작물, 레코딩, 혹은 필름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자나 제작자에게 주어지거나 혹은 합의에 명시된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제180조 (저작물에 대한 왕실 저작권의 유효기간)

(1) 연방 정부 혹은 자치주가 소유하거나, 혹은 제179조가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하게 될 문학, 드라마, 혹은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a) 저작물이 출판되지 않는다면, 그 저작권은 저작물이 출판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연방 정부나 자치주에 존재 한다; 그리고

(b) 저작물이 출판된다면, 연방 정부나 자치주가 그 저작권을 갖거나, 만일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첫 번째 출판 바로 이전에 존재한다면, 그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는 그 해당연도가 지나고 나서 50년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작권이 존재하게 된다.

(2) 다음에 이어질 서브섹션에 종속될 수 있는, 연방 정부나 자치주가 소유 하거나, 혹은 제179조가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하게 될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그 작품이 처음으로 출판된 해당연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50년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저작권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3) 연방 정부나 자치주가 소유하거나, 혹은 제179조가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하게 될 조각이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그 조각이나 사진이 처음 출판된 해당연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50년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

제181조 (레코딩과 필름에 대한 왕실 저작권)

연방 정부 혹은 자치주가 소유하거나 혹은, 제179조가 적용되는 저작권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 없다면, 소유하게 될 사운드 레코딩이나 영화 필름에 대한 저작권은, 그 레코딩이나 필름이 처음 출판된 해당연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50년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존재한다.

제182조 (이 장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저작권에 대한 제3장과 제4장의 적용)

- (1) 제3장(저작권의 존재, 유효기간, 혹은 소유와 관련된 제3장의 조항들과는 다른)은 그것이 제3장에 의해 문학, 드라마, 뮤지컬 혹은 예술 작품에 존재하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에 의해 그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적용이 된다.
- (2) 제4장(저작권의 존재, 유효기간, 혹은 소유와 관련된 제4장의 조항들과는 다른)은 그것이 제4장에 의해 레코딩이나 필름에 존재하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에 의해 그 레코딩이나 필름에 존재하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적용이 된다.

제182조의A (법률 조항 및 판결문 등에 대한 저작권)

- (1) 규정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권의 속성상 왕실의 특권이나 특전을 포함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을 대표하거나 그 사람에 의해 그 저작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복제함으로써, 혹은 제작함으로써 침해받지 않는다.
- (2) 제1항은, 복사본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그리고 그 수수료의 금액이 복사본을 만들어 제공하는 비용을 초과한다면, 저작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복제함으로써 혹은 제작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
- (3) 제1항에서 **규정된 저작물**이 의미하는 것:
 - (a) 연방법 혹은 주법, 특별자치주의 사법부 입법안 혹은 연방법이나 주법 혹은 그러한 입법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률문서; (조례, 규칙, 규정 혹은 부칙을 포함한다)
 - (b) 연방법원 및 주법원 혹은 특별자치주의 판결, 명령 혹은 판정문;
 - (c) 호주연방정부, 자치주 혹은 특별자치주의 법령 혹은 다른 입법안에 의해 수립된 재판소가 내리는 판결, 명령 혹은 판정문;

-
- (d)재판소나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이유로서 그 재판소나 법원은 (c)에서 명시된 것을 말한다; 혹은
- (e)법원이나 재판소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혹은 유일한 구성원으로서든 그 혹은 그녀가 내리는 결정을 위해, (c)에서 명시된 재판소 구성원의 혹은 (c)에서 명시된 법원의 다른 구성원 혹은 재판관, 혹은 판사가 내리는 이유.

제2관 왕실 저작권 자료의 사용

제182조의B (정의)

(1)이 부분의 제2항을 따른다:

민간 저작권 협회는 저작권 신고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단체를 의미한다

저작권 자료는:

- (a)작품; 혹은
- (b)작품의 출판; 혹은
- (c)사운드 레코딩; 혹은
- (d)영화 필름; 혹은
- (e)텔레비전 혹은 음향 방송; 혹은
- (f)사운드 레코딩이나 영화 필름 혹은 텔레비전이나 음향 방송에 포함된 작품.

정부는 호주연방정부 혹은 주정부를 의미한다.

설명: 주는 호주특별자치주, 북부특별자치주 그리고 노포크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A.C.T. 자치정부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10항(3)(n)을 보시오

정부 사본은 제183조 제1항에서 만들어진 저작권 자료의 복사본을 의미한다.

제182조의C (관련 민간 저작권 협회)

단체는 제6장의 제3관하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과 관련하여 이 관의 목적을 위

해 민간 저작권 협회로서 단체의 신고가 효력을 발휘한다면, 정부 사본과 관련된 관련 민간 저작권 협회이다:

- (a) 모든 정부 사본; 혹은
- (b) 최초의 정부 사본을 포함하는 정부 사본.

제183조 (왕실의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자료의 사용)

- (1) 문학, 드라마, 뮤지컬 혹은 예술 작품이나 그러한 작품의 출판물 혹은 사운드 레코딩, 영화 필름, 텔레비전 방송 혹은 음향 방송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연방정부나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해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행동한다면, 그 저작권에 명시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 (2) 연방정부가 다른 국가의 정부와 합의나 협의를 통해 그 국가의 국방에 필요한 상품을 그 국가로 제공하기로 했다면:
 - (a) 그 합의나 협의를 추구하며 그러한 상품의 제공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 (b) 그 합의나 협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상품을 어떤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각각 연방정부의 서비스를 위한 일로 간주될 것이다.
- (3) 권한이 제1항하에서 위임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이나 혹은 그 이후에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권한은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어질 수 있다.
- (4)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어떤 행위가 제1항하에서 행해졌을 때,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가능한 빨리, 만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경우, 저작권자에게 미리 명시된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알렸하는무가 있으며 또한 그 저작권자가 때때로 할 필요가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공지할 의무가 있다.
- (5)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어떤 행위가 제1항하에서 행해졌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조건들은 저작권 재판소가 정한 조건에 따르며, 그 행위가 행해지기 전이

나 혹은 그 이후에, 연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저작권자 사이에 합의되었으나 그 합의가 불이행될 경우에 해당한다.

- (6)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들을 결정하는 합의나 라이선스 (이 법의 시작전이나 그 이후에 주어지거나 만들어질 것으로서)는, 만일 연방정부의 법무장관이나 주정부의 법무장관이 그 합의나 라이선스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제1항하에서, 이 법의 발효이후에, 그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무효가 된다.
- (7) 한 물품이 판매되고 그 판매가 제1항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물품의 구매자와 그 구매자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연방정부나 혹은 주정부가 그 저작권자인 것처럼 그 물품을 거래할 자격을 얻는다.
- (8) 제1항하에서 행해진 행위는 작품이나 다른 대상의 출판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저작권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이 법의 어떤 조항도 그 적용이 고려되지 않는다.
- (9) 어떤 저작권과 관련하여 독점적인 라이선스가 시행중인 경우, 앞서 명시한 이 섹션의 서브섹션들은 효과를 지니는데, 그 서브섹션에서 지칭된 저작권 소유자가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얻은 자일 경우에 그렇다.
- (11) 연방정부나 주정부 혹은 북부 특별자치주의 통제에 따라 교육 기관이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한 작품이나 다른 대상의 전체 혹은 그 일부를 복제, 카피 혹은 통신하는 것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북부 특별자치주의 서비스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83조의 A (정부 서비스를 위한 복제에 대한 특별 협의)

- (1) 제183조 제4항과 제5항은, 만일 한 단체가 사본과 관련하여 이 관의 목적을 위해 관련 민간 저작권 협회이고 또 그 단체가 민간 저작권 협회로서 그 기능을 멈추지 않는 한, 정부 사본(그것이 만들어질 때마다)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만일 제183조 제5항이 정부 서비스를 위해 특정한 기간에 만들어진 정부 사본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러한 복사본(배제 사본들을 제외한)과 관련하여 관련 민간 저작권 협회에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생산될 적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
- (a)민간 저작권 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방식; 혹은
 - (b)만일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제153조의K하에서 저작권 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방식.
- (3)일정 기간 동안 (배제된 사본을 제외한) 정부 사본과 관련하여 민간 저작권 협회에 지불될 정당한 보상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그 기간 동안 정부 서비스를 위해 제작될 사본들의 예상 매수를 고려해야 하며, 그 복사본은 관련 민간 저작권 협회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 (b)(a)의 목적을 위해 복사본의 매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샘플링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4)지불될 정당한 보상을 산출하는 방식은 정부 사본의 다른 종류나 등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 (5)제4항은 그 방식이 민간 저작권 협회와 정부에 의해 합의되었든 혹은 저작권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었든 간에 적용된다.
- (6)이 조에서:
- 배제된 사본**이라 함은 관련 정부에게 있어 그 사본 제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부 사본을 의미한다.

제183조의B (정부 사본을 위해 지불될 정당한 보상의 지불과 회수)

- (1)제183조의A의 제2항에 따라 민간 저작권 협회에 지불될 정당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지불되어야 한다:
- (a)민간 저작권 협회와 정부에 의해 합의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혹은
 - (b)만일 저작권 재판소가 제153조의K의 제3항에 의거해서 지불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한 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에서 제시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 (2)만일 합의나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민간 저작권 협회는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채무의 형태로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3조의C (샘플링을 수행하는 민간 저작권 협회의 권한)

- (1)이 조는, 만일 정부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지는 정부 사본을 위해 제183조의

A의 제2항에 따라 지불될 정당한 보상을 산출하는 방식이 정부와 관련 민간 저작권 협회에 의해 합의되거나 혹은 저작권 재판소에 의해 결정된다면, 적용된다.

- (2) 민간 저작권 협회는 정부가 점유한 특정 시설에서 특정 기간 동안 그 방식에 따라서 샘플링을 수행하고자 함을 정부에 서면으로 공지할 수 있다. 그 특정 기간은 그 공지가 주어진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시작되어서는 안된다.
- (3) 정부는, 정당한 근거에 의거해서, 그 공지에 명시된 시설 및 기간 동안 샘플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거부에 대한 통지는 샘플링이 수행될 수 있는 대안 시설 및 대안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 (4) 만일 정부가 민간 저작권 협회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샘플링은, 그 거부가 철회되지 않는 한, 그 거부 사항에 명시된 시설과 그 기간 동안은 수행될 수 없다.
- (5) 만일 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명시한 기간 동안 혹은 그 기간 이전에 이미 표명한 반대를 철회한 경우에는, 민간 저작권 협회에 의해 서면으로 위임 받은 사람이 공지에 명시된 그 시설에 들어가서 그 리고 그 시설에서 일하는 정부 직원을 위해 통상 근무일에 그 방식에 따라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다.
- (6) 정부는, 샘플링 수행과 관련하여 그 정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시설물 및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3조의D (민간 저작권 협회의 연간 보고 및 회계)

- (1)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그 해당연도의 일부분동안 민간 저작권 협회였던 단체는 그 해당연도 동안 민간 저작권 협회로서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며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그 보고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 (2) 민간 저작권 협회는 재정 상태와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해 주는 회계 자료를 유지해야 한다(신탁기금과 같은 거래를 포함한다).
- (3) 회계 자료는 민간 저작권 협회의 사실적이고 공정한 회계가 때때로 준비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회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 (4)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그 해당연도의 일부분동안 민간 저작권 협회였던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야 한다:
- (a)민간 저작권 협회의 회원이 아닌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 (b)회계에 대한 회계사의 보고서 및 회계 자료의 사본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5)법무부 장관은, 서브섹션이나 이 조항에서 장관에게 주어지는 문서의 사본이, 장관이 그 문서를 받은 이후에 하원의 의정기간 15일 이내에 국회의 양원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 (6)민간 저작권 협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본에 대해 합당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 (a)이 조 하에서 민간 저작권 협회가 준비한 모든 회계 자료 및 보고서; 그리고
 - (b)회계 감사에 대한 회계사의 모든 보고서.
- (7) 이 조는 구체화된 법에 따라 계좌 및 연간 수익에 대한 준비 및 제출과 관련된 협회의 의무사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183조의E (민간 저작권 협회 규정의 변경)

만일 민간 저작권 협회가 규정을 변경한다면, 그 변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변경에 대한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는 진술과 함께 변경된 규정 사본을 법무부 장관과 저작권 재판소로 보내야 한다.

제183조의F (유통 협약의 검토를 위해 재판소에 지원하기)

- (1)민간 저작권 협회나 그 협회의 구성원은 일정 기간 징수하는 유통량을 위해 민간 저작권 협회에 의해 채택되거나 채택되도록 건의된 협약의 검토를 위해 저작권 재판소에 지원할 수도 있다.
- (2)만일 저작권 재판소가 제153조의KA 하에서 협약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다른 협약으로 대체할 명령을 내린다면, 그 재판소의 명령을 반영하는 그 협약은 민간 저작권 협회에 따라 채택된 것처럼 영향을 끼치지만, 그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시작된 유통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원문]

Copyright Act 1968

Part VII – The Crown

Division 1 – Crown copyright

176 Crown copyright in original works made under direction of Crown

- (1)Where, apart from this section, copyright would not subsist in an original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Commonwealth or a State, copyright subsists in the work by virtue of this subsection.
- (2)The Commonwealth or a State is, subject to this Part and to Part X,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an original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Commonwealth or the State, as the case may be.

177 Crown copyright in original works first published in Australia under direction of Crown

Subject to this Part and to Part X, the Commonwealth or a State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an original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first published in Australia if first publish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Commonwealth or the State, as the case may be.

178 Crown copyright in recordings and films made under direction of Crown

- (1)Where, apart from this section, copyright would not subsist in a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Commonwealth or a State, copyright subsists in the recording or film by virtue of this subsection.
- (2)The Commonwealth or a State is, subject to this Part and to Part X,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a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Commonwealth or the State, as the case may be.

179 Provisions relating to ownership of copyright may be modified by agreement

The last three preceding sections have effect subject to any agreement made by, or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r a State with the author of the work or with the maker of the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as the case may be, by which it is agreed that the copyright in the work, recording or film is to vest in the author or maker, or in another person specified in the agreement.

180 Duration of Crown copyright in original works

- (1) Copyright in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of which the Commonwealth or a State is the owner, or would, but for an agreement to which the last preceding section applies, be the owner:
- (a) where the work is unpublished—continues to subsist so long as the work remains unpublished; and
 - (b) where the work is published—subsists, or, if copyright in the work subsisted immediately before its first publication, continues to subsist, until the expiration of 50 year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work was first published.
- (2) Subject to the next succeeding subsection, copyright in an artistic work of which the Commonwealth or a State is the owner, or would, but for an agreement to which the last preceding section applies, be the owner, continues to subsist until the expiration of 50 year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work was made.
- (3) Copyright in an engraving or photograph of which the Commonwealth or a State is the owner, or would, but for an agreement to which the last preceding section applies, be the owner, continues to subsist until the expiration of 50 year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engraving or photograph is first published.

181 Duration of Crown copyright in recordings and films

Copyright in a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of which the Commonwealth or a State is the owner, or would, but for the operation of an agreement to which section 179 applies, be the owner, subsists until the expiration of 50 year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recording or film is first published.

182 Application of Parts III and IV to copyright subsisting by virtue of this Part

- (1)Part III (other than the provisions of that Part relating to the subsistence, duration or ownership of copyright) applies in relation to copyright subsisting by virtue of this Part in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in like manner as it applies in relation to copyright subsisting in such a work by virtue of that Part.
- (2)Part IV (other than the provisions of that Part relating to the subsistence, duration or ownership of copyright) applies in relation to copyright subsisting by virtue of this Part in a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in like manner as it applies in relation to copyright subsisting in such a recording or film by virtue of that Part.

182A Copyright in statutory instruments and judgments etc.

- (1)The copyright, including any prerogative right or privilege of the Crown in the nature of copyright, in a prescribed work is not infringed by the making, by reprographic reproduction, of one copy of the whole or of a part of that work by or on behalf of a person and for a particular purpose.
- (2)Subsection (1) does not apply to the making, by reprographic reproduction, of a copy of the whole or a part of the work, where a charge is made for making and supplying that copy, unless the amount of the charge does not exceed the cost of making and supplying that copy.
- (3)In subsection (1), a prescribed work means:
 - (a)an Act or State Act, an enactment of the legislature of a Territory or an instrument (including an Ordinance or a rule, regulation or by law) made under an Act, a State Act or such an enactment;
 - (b)a judgment, order or award of a Federal court or of a court of a State or Territory;
 - (c)a judgment, order or award of a Tribunal (not being a court) established by or under an Act or other enactment of the Commonwealth, a State or a Territory;
 - (d)reasons for a decision of a court referred to in paragraph (b), or of a Tribunal referred to in paragraph (c), given by the court or by the Tribunal; or
 - (e)reasons given by a Justice, Judge or other member of a court referred to in paragraph (b), or of a member of a Tribunal referred to in paragraph (c), for a decision given by him or her either as the sole member, or as one of the members, of the court or Tribunal.

Division 2—Use of copyright material for the Crown

182B Definitions

(1) Subject to subsection (2), in this Division:

collecting society means a company in respect of which a declaration is in force under section 153F.

copyright material means:

- (a) a work; or
- (b) a published edition of a work; or
- (c) a sound recording; or
- (d) a cinematograph film; or
- (e) a television or sound broadcast; or
- (f) a work that is included in a sound recording, a cinematograph film or a television or sound broadcast.

government means the Commonwealth or a State.

Note: State includes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he Northern Territory and Norfolk Island: see paragraph 10(3)(n), as modified by the A.C.T. Self Government (Consequential Provisions) Regulations (Amendment) (Statutory Rules 1989 No. 392).

government copy means a reproduction in a material form of copyright material made under subsection 183(1).

(2) A reference in subsection (1) to a work does not include a reference to a literary work that consists of a computer program or a compilation of computer programs.

182C Relevant collecting society

A company is the relevant collecting society in relation to a government copy if there is in force, under Division 3 of Part VI, a declaration of the company as the collecting society for the purposes of this Division in relation to:

- (a) all government copies; or
- (b) a class of government copies that includes the first mentioned government copy.

183 Use of copyright material for the services of the Crown

(1) The copyright in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or a published edition of such a work, or in a sound recording, cinematograph film, television broadcast or

-
- sound broadcast, is not infringed by the Commonwealth or a State, or by a person authorizing or doing writing by the Commonwealth or a State, doing any acts comprising the copyright if the acts are done for the services of the Commonwealth or State.
- (2) Where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has made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 the Government of some other country for the supply to that country of goods required for the defence of that country:
- (a) the doing of any act in connexion with the supply of those goods in pursuance of the agreement or arrangement; and
- (b) the sale to any person of such of those goods as are not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the agreement or arrangement;
- shall, for the purposes of the last preceding subsection, be each deemed to be for the services of the Commonwealth.
- (3) Authority may be given under subsection (1) before or after the acts in respect of which the authority is given have been done, and may be given to a person notwithstanding that he or she has a licence granted by, or binding on, the owner of the copyright to do the acts.
- (4) Where an act comprised in a copyright has been done under subsection (1), the Commonwealth or State shall, as soon as possible, unless it appears to the Commonwealth or State that i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to do so, inform the owner of the copyright, as prescribed, of the doing of the act and shall furnish him or her with such information as to the doing of the act as he or she from time to time reasonably requires.
- (5) Where an act comprised in a copyright has been done under subsection (1), the terms for the doing of the act are such terms as ar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act is done, agreed between the Commonwealth or the State and the owner of the copyright or, in default of agreement, as are fixed by the Copyright Tribunal.
- (6) An agreement or licence (whether made or granted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fixing the terms upon which a person other than the Commonwealth or a State may do acts comprised in a copyright is inoperative with respect to the doing of those act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under subsection (1), unless the agreement or licence has been approved by the Attorney General of the Commonwealth or the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 (7) Where an article is sold and the sale is not, by virtue of subsection (1), an infringement of a copyright, the purchaser of the article, and a person claiming through him or her, is entitled to deal with the article as if the Commonwealth or State were the owner of that copyright.

-
- (8)An act done under subsection (1) does not constitute publication of a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and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relating to the duration of any copyright.
- (9)Where an exclusive licence is in force in relation to any copyright, the preceding subsections of this section have effect as if any reference in those subsections to the owner of the copyright were a reference to the exclusive licensee.
- (11)The reproduction, copying or communication of the whole or a part of a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for the educational purposes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or under the control of, the Commonwealth, a State or the Northern Territory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be deemed not to be an act done for the services of the Commonwealth, that State or the Northern Territory.

183A Special arrangements for copying for services of government

- (1)Subsections 183(4) and (5) do not apply in relation to a government copy (whenever it was made) if a company is the relevant collecting society for the purposes of this Division in relation to the copy and the company has not ceased operating as that collecting society.
- (2)If subsection 183(5) does not apply to government copies made in a particular period for the services of a government, the government must pay the relevant collecting society in relation to those copies (other than excluded copies) equitable remuneration worked out for that period using a method:
- (a)agreed on by the collecting society and the government; or
 - (b)if there is no agreement—determined by the Tribunal under section 153K.
- (3)The method of working out equitable remuneration payable to a collecting society in respect of government copies (other than excluded copies) for a period must:
- (a)take into account the estimated number of those copies made for the services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period, being copies in relation to which the society is the relevant collecting society; and
 - (b)specify the sampling system to be used for estimating the number of copies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a).
- (4)The method of working out the equitable remuneration payable may provide for different treatment of different kinds or classes of government copies.
- (5)Subsections (3) and (4) apply whether the method is agreed on by the collecting society and the government or is determined by the Tribunal.
- (6)In this section:
- excluded copies* means government copies in respect of which it appears to the

government concerned that i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making of the copies.

183B Payment and recovery of equitable remuneration payable for government copies

- (1) Equitable remuneration payable to a collecting society under subsection 183A(2) must be paid:
 - (a) in the manner, and at the times, agreed on by the collecting society and the government; or
 - (b) if the Tribunal has made an order under subsection 153K(3) specifying how and when payments are to be made—in the manner, and at the times, specified in the order.
- (2) If equitable remuneration is not pai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r the Tribunal's order, the collecting society may recover the remuneration as a debt due to the society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183C Powers of collecting society to carry out sampling

- (1) This section applies if the method of working out equitable remuneration payable under subsection 183A(2) for government copies made for the services of a government has been agreed on by the government and the relevant collecting society or has been determined by the Tribunal.
- (2) The collecting society may give written notice to the government that the society wishes to carry out sampling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during a specified period at specified premises occupied by the government. The period specified must not start earlier than 7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 (3) The government may give the collecting society a written objection, based on reasonable grounds, to the proposal to carry out sampling during the period, or at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notice. However, if it does so, the notice of objection must propose an alternative period during which, or alternative premises at which, as the case may be, sampling may be carried out.
- (4) If the government gives the collecting society an objection, sampling may not be carried out during the period, or at the premises, to which the objection relates unless the objection is withdrawn.
- (5) If the government has not objected, or has withdrawn any objection it made, before or during the specified period, a person authorised in writing by the society may, during that period, enter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notice and carry out sampling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on any ordinary working day

for government staff who work in the premises.

- (6)The government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at the person who attends at the premises is given all reasonable and necessary facilities and assistance for carrying out the sampling.

183D Annual report and accounts of collecting society

- (1)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end of each financial year, a company that was a collecting society during any part of the year must prepare a report of its operations as a collecting society during the year and send a copy of the report to the Attorney General.
- (2)A collecting society must keep accounting records correctly recording and explaining the transactions of the society (including any transactions as trustee) and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society.
- (3)Accounting records must be kept in a manner that will enable true and fair accounts of the society to be prepared from time to time and to be conveniently and properly audited.
- (4)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end of each financial year, a company that was a collecting society during any part of the year must:
- (a)have its accounts audited by an auditor who is not a member of the society; and
 - (b)give a copy of the audited accounts and the auditor's report on the audit to the Attorney General.
- (5)The Attorney General must cause a copy of a document given to the Attorney General under subsection (1) or paragraph (4)(b)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the Parliament within 15 sitting days of that House after the Attorney General received the document.
- (6)A collecting society must give its members reasonable access to copies of:
- (a)all reports and audited accounts prepared by it under this section; and
 - (b)all auditors' reports on the audit of the accounts.
- (7)This section does not affect any obligations of a collecting society relating to the preparation and lodging of annual returns or accounts under the law under which it is incorporated.

183E Alteration of rules of collecting society

If a collecting society alters its rules, it must give a copy of the altered rules, together with a statement of the effects of, and reasons for, the alteration, to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Tribunal within 21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alteration was made.

183F Applying to Tribunal for review of distribution arrangement

- (1) A collecting society or a member of a collecting society may apply to the Copyright Tribunal for review of the arrangement adopted, or proposed to be adopted, by the collecting society for distributing amounts it collects in a period.
- (2) If the Tribunal makes an order under section 153KA varying the arrangement or substituting for it another arrangement, the arrangement reflecting the Tribunal's order has effect as if it had been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ng society's rules, but does not affect a distribution started before the order was made.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저작권법은 'VII. The Crown'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7장만 수록• 원문 'http://www.comlaw.gov.au/ComLaw/Legislation/ActCompilation1.nsf/0/2E3EEB3B6191AB60CA2574FF0081BA02?OpenDocument'를 참고하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번역 |
|--|

3. 프랑스 저작권법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제1부 문학·예술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의 객체

제1절 저작권의 성질

제111조의 1

- (1) 정신적 창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그의 창작의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 무체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이 권리(저작권)는 이 법전의 제1편과 제3편에서 규정한 정신적 인격적 성질과 재산적 성질을 포함한다.
- (3) 이 법전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저작물의 창작에 관하여 저작자가 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취득에 영향이 없다.
- (4) 제3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저작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관련 공공기관, 법인격을 부여받은 독립행정기관, 프랑스 은행의 직원인 경우에도 그가 저작권을 가진다.
- (5) 공무원 저작자의 직무를 정한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급행정청으로부터 그 어떤 사전적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공무원 저작자에 대하여는 이 법전 제121조의 7의 1, 제131조의 3의 1부터 제131조의 3의 3까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권의 소지자

제113조의 9

- (1) 반대의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개인 또는 복수의 피용자가 직무의 수행 또는 고용주의 지시를 받아서 창작한 소프트웨어 및 그의 자료에 대한 재산권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만 고용주에게 귀속한다(소프트웨어에 대

한 업무상저작).

- (2)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지를 관할하는 제1심 지방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한다.
- (3)이 규정의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행정기관 등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자인격권

제121조의 7의1

- (1)저작권법 제111조의 1, 제3항에 명시된 직무상 또는 지시를 받아서 저작물을 창작한 공무원에게 인정된 공표권은 공무원의 지위, 조직 및 당해 공무원을 채용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업무 등을 정한 규정을 존중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 1.저작물의 수정이 저작자의 명예와 명성을 해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절정한 저작물의 수정을 상급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
- 2.상급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철회권과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제3장 권리이용

제1절 일반규정

제131조의 3의 1

- (1)공무상의 완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 공무원에 의하여 직무상 또는 지시를 받아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정당하게 국가에 양도된다.
- (2)국가는 제1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권 공무원저작자에게 우선적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학술적 기술적 성질의 공기업이나 학술적

문화적 전문적 공기업이 학술적 기술적 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사법상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1조의 3의 2

제131조의 3의 1은 직무의 수행으로 또는 지시를 받아서 공무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적 성질을 가지는 공기업,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기관 및 프랑스 은행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131조의 3의 3

제131조의 3의1과 제131조의 3의 2의 적용방법은 「공세 유 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그 명령은 특히 그 공무원을 채용한 공법인이 제131조의 3의1의 제2항 후문에 규정된 경우에 그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때에 그 저작물을 저작자인 공무원이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원문]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remière Partie :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Article L111-1

- (1) L'auteur d'une oeuvre de l'esprit jouit sur cette oeuvre, du seul fait de sa création, d'un droit de propriété incorporelle exclusif et opposable à tous.
- (2) Ce droit comporte des attributs d'ordre intellectuel et moral ainsi que des attributs d'ordre patrimonial, qui sont déterminés par les livres Ier et III du présent code.
- (3) L'existence ou la conclusion d'un contrat de louage d'ouvrage ou de service par l'auteur d'une oeuvre de l'esprit n'empêche pas dérogation à la jouissance du droit reconnu par le premier alinéa, sous réserve des excep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 (4) Sous les mêmes réserves, il n'est pas non plus dérogé à la jouissance de ce même droit lorsque l'auteur de l'oeuvre de l'esprit est un agent de l'Etat,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d'un 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administratif, d'une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 dotée de la personnalité morale ou de la Banque de France.
- (5)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L. 121-7-1 et L. 131-3-1 à L. 131-3-3 ne s'appliquent pas aux agents auteurs d'oeuvres dont la divulgation n'est soumise, en vertu de leur statut ou des règles qui régissent leurs fonctions, à aucun contrôle préalable de l'autorité hiérarchique.

Article L113-9

- (1) Sauf dispositions statutaires ou stipulations contraires, les droits patrimoniaux sur les logiciels et leur documentation créés par un ou plusieurs employé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ou d'après les instructions de leur employeur sont dévolus à l'employeur qui est seul habilité à les exercer.
- (2) Toute contestation s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st soumise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u siège social de l'employeur.
- (3) L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agents de l'Etat, des collectivités publiques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à caractère administratif.

Article L121-7-1

(1)Le droit de divulgation reconnu à l'agent mentionné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L. 111-1, qui a créé une oeuvre de l'espri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après les instructions reçues, s'exerce dans le respect des règles auxquelles il est soumis en sa qualité d'agent et de celles qui régissent l'organisation, le fonctionnement et l'activité de la personne publique qui l'emploie.

L'agent ne peut :

- 1.S'opposer à la modification de l'oeuvre décidée dans l'intérêt du service par l'autorité investie du pouvoir hiérarchique, lorsque cette modification ne porte pas atteinte à son honneur ou à sa réputation ;
- 2.Exercer son droit de repentir et de retrait, sauf accord de l'autorité investie du pouvoir hiérarchique.

Article L131-3-1

(1)Dans la mesure strictement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le droit d'exploitation d'une oeuvre créée par un agent de l'Eta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après les instructions reçues est, dès la création, cédé de plein droit à l'Etat.

(2)Pour l'exploitation commerciale de l'oeuvre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l'Etat ne dispose envers l'agent auteur que d'un droit de préférence. Cette disposition n'est pas applicable dans le cas d'activités de recherche scientifique d'un 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 ou d'un 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scientifique, culturel et professionnel, lorsque ces activités font l'objet d'un contrat avec 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rivé.

Article L131-3-2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31-3-1 s'appliquen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ux établissements publics à caractère administratif, aux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dotées de la personnalité morale et à la Banque de France à propos des oeuvres créées par leurs agent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ou d'après les instructions reçues.

Article L131-3-3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articles L. 131-3-1 et L. 131-3-2. Il définit en particulier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un agent, auteur d'une oeuvre, peut être intéressé aux produits tirés de son exploitation quand la personne publique qui l'emploie, cessionnaire du droit d'exploitation, a retiré un avantage d'une exploitation non commerciale de cette oeuvre ou d'une exploitation commerciale dans le cas prévu par la dernière phrase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131-3-1.

- 프랑스 저작권법은 공공정보 규정에 대한 별도의 장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만 수록
- 번역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자료 『프랑스 저작권법』 (서달주 역, 2009) 참고
- 원문은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69414&dateTexte=20100318' 참고

부 록 B

OPSI 저작권 가이드

I. 개요

o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2005년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 정보 재이용을 위한 표준 제정, 공공정보 접근과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대중, 정보산업, 정부, 공공부문 등에 광의의 서비스 제공

II. 가이드 현황

o 정부부처, 각 기관, 왕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이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및 접근, 관련 권고사항 제공

- 장관 및 공무원들이 작성한 글의 출판
- 공공 기록물의 저작권
- 법원 문서의 복제
- 왕실 위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 UK,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주요, 부수 법안 복제
- 출생, 사망, 혼인 및 동거 증명서
-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및 웨일즈 정부 보도자료 복제
- 웨일즈 공립학교 등 교과과정의 복제
- 저작권과 출판 공지문
- 영국 의회 법안 및 관련 참고자료 복제
- 국회 의사록 복제
- 정보 자산 등록부 및 정보의 자유 - 정보 접근에 대한 반응
- 정보 출판 제도의 자유
- 영국 여권 표지 복제
- 왕실 저작권 -정부 부서 개요
- 왕실 저작권 발췌 자료의 재사용
- 왕실 저작권의 면제

III. 세부 분야별 가이드라인

1. 학술지와 공식 회의에서 장관 및 공무원들이 작성한 글의 출판

o 활용 목적

- 정부 부서, 기관이 저널, 출판물에서 출판을 위한 소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
- 출판인이 저자에게 의뢰하여 출판을 위한 소논문을 준비할 때
- 장관, 공무원이 회의나 세미나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회의 주최자가 회의 자료집으로 출판하고자 할 때

o 이용 절차

- 저자 및 관련 부서 수장의 동의
- 장관 작성 논문의 경우 Minister's Private Office 허락만으로 충분

o 이용 허락의 범위

- 전 세계에 걸쳐 모든 형태로의 논문 출판
-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형태로 소논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 Copyright Licensing Agency가 운영하는 저작권 공동 사업에 포함된 논문에 대한 이용 권한
- 그 소논문이 목차 서비스, 요약 그리고 문서 전달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권한

o 이용 조건

- 원저자와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을 경우
- 원저자와 관련 부서 그리고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
- 소논문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목적으로 출판되지 않는 경우
- 원저자의 승인 없이 글을 수정하지 못하며 정확하게 복사해야 함
 - ※ 출판과 동시에 원저자에게 출판된 소논문의 복사본 배송

2. 공공 기록물의 저작권

o 배경

- 왕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들은 저작권이 면제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왕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미출판 공공 기록물 포함
- 왕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와 그렇지 못한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 공공기록물 : 공공 기록물은 국립 박물관, 국립 보건국 및 국립 관리 기관과 같은 정부산하 단체를 포함하여, 영국 및 연방 내 국가들의 중앙 정부의 그리고 중앙 법률 기관의 기록물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을 위해 선택되며, 영국의 기록물 보관소와 다른 저장 기관들에 보존된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30년이 지나면 공공 열람이 가능

o 저작권이 면제된 공공기록물들은 사용자가 형식 및 매체에 대한 제약 없이 왕실저작물에 대한 복사, 인용, 색인, 전사(轉寫), 출판 및 방송 가능

- 수수료, 인세, 특별한 라이선스 승인없이 사용 가능
 - ※ 문서의 복사를 포함하여 이미지의 복제는 저작권 면제에 해당되지 않음

o 저작권 면제의 조건

- 기록 문서의 참고 문헌 인용, 공공 기록물 보관소의 이름을 인용함으로써 왕실 저작물의 출처가 제시되고
- 저작물의 기증본이 조정관 혹은/그리고 왕실 저작물이 보존되는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제공될 때

o 저작권 면제 공공기록물 범위

- 공공 열람을 위해 공개된 자료
-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제출되는 시점에 미출판된 자료의 경우, 혹은 그렇게 제출되는 시점에 미출판된 자료를 포함한 경우

o 저작권 면제 예외 자료

-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제출되기 전에 출판된 자료
-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 공공 열람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자료
- 거래 가능 정보 (Tradeable Information)를 구성하고 자료
- 왕실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료
- 공공 기록물로 정의되지 않은 채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보존된 자료

o 왕실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 기록물

- 많은 공공 기록물들이 왕실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그러한 자료를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얻어야 함
- 지도 측량, 북아일랜드의 지도 측량 그리고 영국 수로 측량국의 미출판 기록물
- 공공 기록물 보관소가 만드는 공공 기록물의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필름 카드, 디지털 형식 및 사진 형태의 복사물은 거래가능 정보이지만, 그것들이 담고 있는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 이 같은 자료의 복제에는 공식적인 라이선스 및 수수료 부과

3. 법원 문서의 복제

o 법원 문서의 공식적인 서식과 관련하여 저작권 면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술

o 저작권 면제 법원 서식

- 가족 소송 법 1991/가족 소송 법원 규정(혼인 소송) 1991/가족 소송 법원 규정(아동법) 1991/부모 책임 동의 규정 1991/변호사 권한 규정(규정안) 1994/보호 법원 규칙(변호사 권한) 1994/카운티 법원 규칙(서식) 1982/대법원 규칙-1998년에 수정/ 민사 소송법 및 규약 (1999)
- 면제되는 법원 서식의 조건은 입법에 대한 영국의 출판인 버전에 나타나 는 서식들의 공식 버전이나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발표된 서식에만 적용

o 사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서식의 복사
- 서식의 대안 버전 출판과 판매
- 책자에 서식의 복제버전을 포함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식 모음집의 일부분으로 서식들이 포함되는 경우
- 적절한 모든 매체를 통해 서식의 복사본을 배포하는 경우
- 스크린 상에서 개인별 상세정보를 완료하기 위해 컴퓨터에 서식을 복제하는 경우
- 인터넷 상에 서식들을 자세히 기술하는 경우
- 많은 서식들이 기술된 여왕 폐하의 법원 서비스 웹사이트에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걸어둔 경우

4. 왕실 위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o 배경

- 1988년 저작권, 의장 및 특허법 163조에 따르면, 왕실의 관료들이나 공무원이들 자신들의 의무 이행 가운데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왕실이 그 저작권을 가짐
- 이 가이드의 목적은 정부 부서들이 저작물을 위탁할 때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왕실에 양도되기 위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설명

o 목적

- 정부 부서들이 저작권을 위탁할 때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왕실에 양도되기 위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설명

o 저작권 통제

- 어떤 저작권자든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복사, 출판, 및 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면에 여러 방법으로 통제도 가능

- 저작물 위탁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소유를 양도하지 않으며 만일 그러한 사용이 위탁 계약의 조항에 따라 특별한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위탁 부서나 기관들이 그 저작물 자체를 복제하거나 출판할 자동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못함
- 왕실의 저작권을 양도 받은 정부 부서는 일반적으로 그 저작물 접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정부 간행물 출판국을 통해 저작물 복제에 관한 권리 역시 포함 (그러나, 저자가 인격권(Moral Right)까지 양도하는 것은 아님)

o 저작권 양도 방식

- 위탁 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며 위탁 계약 샘플은 이 가이드 부록에 제공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제작의 위탁에 있어, 정부 부서들은 또한 저작물로부터 그 저작물이 독창적이며 어떤 제3자도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갖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함

o 정부/왕실에 양도된 저작물

- 왕실 저작권은 영국 법에 따라 특별하게 정의되며, 왕실에 양도된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왕실 저작물은 왕실에 양도된 저작권의 저작물과는 다른 저작권 보호를 받음. 일반적으로 출판된 왕실 저작문서는 저작물이 출판된 해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받지만 양도된 저작권은 저작물 보호의 일반적인 조항에 따라, 저자 사후 70년 동안 보호

o 저작권 양도 승인

- 양도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함
: © Queen's Printer and Controller of HMSO
-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은 정부 간행물 출판국 라이센싱부, Kew, Richmond, Surrey, TW9 4DU에 보고 되어야 함
- 스코트랜드에 기반한 정부 부서들 및 기관들이 위탁한 저작물을 위해서는 다음의 저작권 표시가 있어야 함 : © Queen's Printer for Scotland

-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은 Office of the Queen's Printer for Scotland Licensing Division, Admail ADM4058, Edinburgh, EH1 1NG에 보고

o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부분의 저작물은 1988년 저작권, 의장 및 특허법의 4장에 따라 필수적으로 4가지의 도덕
 - 저자나 감독관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대할 권리
 - 저작물의 저자에 대해 거짓으로 표명하지 않을 권리
 - 사진 및 필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5. UK,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 최초 및 2차 법안 복제

- o 공식적인 출처로부터 입법은 저작권 포기에 따라 자유롭게 복제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는 그러한 절차를 설명

o 자료의 포함 범위

- UK 의회 및 북아일랜드 의회 법령
- 웨일즈 국회가 만든 법률 문서
- 북아일랜드의 법률안
- UK 의회 및 북아일랜드 의회 법안에 대한 주석
- 영국 국교회 대종교회의에서 결의된 조치들

o 저작권 면제 조건하에서의 허용 범위

- 모든 매체를 활용한 출판 및 복제
- 배포 및 판매를 위한 자료의 복사
-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자료의 복제
- 무료 및 유료 웹사이트 상에서의 자료 복제
- 공식 입법 웹사이트에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는 것

- 입법 웹사이트상에 기술된 자료를 스크린 및 프린터로 다운로드 하는 것
-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의 자료 복제
- 연구나 개인적인 학업을 목적으로 한 장 혹은 여러장 복사본을 만드는 것
- 도서관이 자료에 대한 비용을 별충하기 위한 우선적인 필요에 따라 독자들에게 사본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혹은 여러 복사본을 제작하는 것
- 도서관 서가의 재고를 보충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이 복사하는 것
- 민간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한 어떤 조직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사
- 세미나 혹은 훈련의 맥락에서 복제하는 것
- 석사 및 박사 논문 내에서 복제하는 것
-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

o 자료 이용자의 의무

- 자료의 모든 복제는 공식적인 버전에 따라야 함
- 자료는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유능한 번역자가 번역해야 함
- 최신 자료의 복제만이 가능하며 예전 자료가 최신 자료인 것처럼 복제되어서는 안 됨
- 자료는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관점에 따라 혹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자료의 복제 버전은 그것이 공식적인 지위를 의미하거나 혹은 정부에 의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별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제시해야 한다;
- 대중에게 배포되는 자료의 복사본에는 그 자료의 공식 버전임을 증명하는 출판 표시가 삭제되어야 함
- 왕실 문양은 그것이 복제되는 자료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할 때만 복제될 수 있음

6. 출생, 사망, 혼인 및 동성혼 증명서

- o 이 가이드는 공식적인 출생, 사망, 혼인 그리고 동성혼 증명서 복제에 대한 설명 제시

o 복제를 위한 허락 조건

- 출생, 사망, 혼인 혹은 동성혼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증명서 복제를 이용해서는 않됨. 어떤 일의 등록에 대한 증거로 사본이 요청되는 경우, 지방 등록 사무소나 일반 등록 사무소로부터 공식 증명서를 주문해야 함
- 복사본은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 및 광고하기 위해, 혹은 재경부가 승인했음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못함
- 왕실 문양과 정부 부서의 로고를 오직 증명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만 복제해야 함

7.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및 웨일즈의 정부보도 자료

o 이 가이드는 저작권 포기가 공식적인 언론 보도자료 및 발표의 복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 정부 언론 보도 자료는 1988년 저작권, 의장 및 특허법 163조에 따라 왕실 관료 및 사무원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에 의해 왕실 저작권으로 인정

o 자료 포함 범위

- 정부 부처 및 각 기관에서 발표된 공식적인 언론 발표와 보도 자료를 포함

o 저작권 면제의 의미

- 이용자들은 공식적인 허가나 수수료 지불 없이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판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 준수 필요
 - 자료가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며 다른 이들을 혼동시키거나 오도해서는 안 됨
 - 자료는 올바른 승인 표시를 나타내야 함
 - 자료가 복제될 때는 왕가 문장(紋章)은 삭제

o 면제조건하에서의 허용 범위

- 자료의 복제와 출판. 이는 상업적인 정보 상품의 일부로서의 출판도 포함

- 배포와 판매를 위한 대량 복제
- 무료 배포를 위해 무료 복사본을 대량을 만드는 것
- 뉴스 리포팅을 목적으로 한 복제
- 인터넷상의 출판
- 공식적인 정부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스크린과 인쇄물로 다운로드받는 행위
- 인트라넷에서의 자료 복제
- 민간 연구 및 학업을 목적으로 한 장 혹은 대량 복제하는 행위
- 도서관이 독자들에게 사본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혹은 여러 복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 도서관 서가의 재고 보충을 위한 복제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사
- 세미나 혹은 훈련 맥락의 복제 행위
- 석사 및 박사 논문 내에서의 복제 행위
- 다른 언어로의 번역 행위

o 승인

- 자료의 복제본이 출판, 배포, 발표될 때 다음과 같은 승인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정부 간행물 출판국의 조정관과 여왕의 스코틀랜드 출판인의 허락을 얻어 복제된 왕실 저작권 자료임”

8. 웨일즈 교과과정의 복제

- o 이 가이드는 다양한 웨일즈 공립학교 교과과정이 어떻게 자유롭게 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o 사용 허가
 - 자료의 복제와 출판
 - 배포와 판매를 위한 대량 복사 행위
 - 무료 배포를 위한 대량의 무료 복사본 제작 행위

- 뉴스 리포팅을 목적으로 한 자료의 복제
- 연구 및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한 장 혹은 대량 복제 행위
- 인터넷상의 출판
- 인트라넷에서의 자료 복제 행위
- 도서관이 자료에 대한 비용을 벌충하기 위한 우선적인 필요에 따라 독자들에게 사본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혹은 여러 복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 도서관 서가의 재고 보충을 위한 복제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사;
- 세미나 혹은 훈련 맥락의 복제 행위
- 석사 및 박사 논문 내에서의 복제 행위
- 다른 언어로의 번역 행위

o 왕실 보호 자료의 이용을 위한 조건

- 자료의 모든 복제는 공립학교 교과과정 문서의 공식 출판 버전으로부터만 들어져야 함
- 자료는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유능한 번역가를 활용해야 함
- 최신 자료의 복제만이 가능하며 예전 자료가 최신 자료인 것처럼 복제되어서는 안 됨. 이전 자료가 현재 자료와의 비교 및 비슷한 분석을 목적으로 복제되는 경우 현재 자료에 대한 적절한 표시와 함께 예전 자료가 대체되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함
- 자료는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관점에 따라 혹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자료의 복제 버전은 의회나 ACCAC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판별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제시해야 함
- 왕실 문장(紋章)과 의회 혹은 ACCAC 로고나 비슷한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배포되거나 이용 가능한 자료의 복사본에서 삭제되어야 함

o 승인

- 자료가 다른 이들에게 출판, 배포 혹은 발표될 때 자료의 출처가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승인 표시가 사용되어야 함

9. 저작권과 출판 안내

o 이 가이드는 공식적인 출판에 기술되어야 하는 적절한 저작권 및 출판 안내문에 대해 정부 부서들과 기관들에 권고 사항을 제시

o 다양한 안내의 필요성

- 저작권 소유 여부 및 자료의 재사용을 위한 협의 여부의 공지 필요
- 왕실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공지는 자료의 공식적인 지위를 확인시켜 줌
- 자료 재사용을 위한 공식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 안내
- 왕실이 소유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확인
- 출판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검색 편의 증진
- 부가적인 정보 제공

o 안내문에 포함될 내용

- 저작권 서술
- 출판인 및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세부사항
- 자료 재사용 및 라이선스 허가에 대한 세부사항
- 왕실이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에 대한 저작물의 세부사항
- 정부 부처의 웹사이트 주소
- 환경에 대한 진술;
- 데이터 보호법에 대한 명시

10. 영국의회의 법안과 법안에 대한 설명 자료의 복제

o 이 가이드에서는 법안 및 법안에 대한 설명의 자유로운 복제를 위한 이용 환경에 대해 제시

o 의회 저작권 포함 범위

- 의회에 제출된 법안
- 의회 법안에 대한 설명문

o 사용 허가의 범위

- 자료의 출판 및 복제 행위
- 배포 및 판매를 위한 복사 행위
- 뉴스 리포팅을 목적으로 한 복제 행위
- 인터넷 유무료 웹사이트 상에서의 자료 복제 행위
- 의회 웹사이트에 하이퍼링크 연결 행위
- 의회 웹사이트로부터 법안과 설명문을 스크린 및 프린터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
- 인트라넷에서의 자료 복제 행위
- 연구 및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한 장 혹은 대량 복제 행위
- 도서관이 자료에 대한 비용을 벌충하기 위한 우선적인 필요에 따라 독자들에게 사본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혹은 여러 복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 도서관 서가의 재고 보충을 위한 복제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사;
- 세미나 혹은 훈련 맥락의 복제 행위
- 석사 및 박사 논문 내에서의 복제 행위
- 다른 언어로의 번역 행위

o 사용 조건

- 반드시 의도된 의미와 적용에 맞도록 오도되지 않는 문맥과 태도로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함
- 품위 없이 보일 수 있는 문맥에서 혹은 광고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됨
- 개인, 회사 혹은 단체를 비방하는 상황에서의 이용 불가
- 복제될 때, 의회 저작권 자료는 상원이나 하원의 권한에 의해 출판된 것으로 그 취지를 삼아서는 안 됨. 또한 복제된 자료가 공식적인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상징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형식 및 스타일로

복제되어서는 안 됨

- 라이선싱 협약과 수수료 부과
 - 법안과 설명문의 텍스트 사용을 위한 수수료 부과는 없음

11. 국회 의사록의 복제, 웨일즈 국회 의사록

- 이 가이드에서 제시되는 조건과 의무사항이 충족되면 의사록은 웨일즈 국회나 정부 간행물 출판국으로부터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음
- 저작권 면제의 의미
 - 왕실이 의사록으로부터 그 내용의 복제를 위해 라이선스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사용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의미
- 허용 범위
 - 자료의 출판 및 복제 행위
 - 배포 및 판매를 위한 복사 행위
 - 뉴스 리포팅을 목적으로 한 복제 행위
 - 인터넷 유무료 웹사이트 상에서의 자료 복제 행위
 - 의회 웹사이트에 하이퍼링크 연결 행위
 - 의회 웹사이트로부터 법안과 설명문을 스크린 및 프린터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
 - 인트라넷에서의 자료 복제 행위
 - 연구 및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한 장 혹은 대량 복제 행위
 - 도서관이 자료에 대한 비용을 벌충하기 위한 우선적인 필요에 따라 독자들에게 사본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혹은 여러 복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 도서관 서가의 재고 보충을 위한 복제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사;
 - 세미나 혹은 훈련 맥락의 복제 행위
 - 석사 및 박사 논문 내에서의 복제 행위
 - 영어나 웨일즈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행위

o 이용자의 의무

- 복제는 의사록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함
- 의사록 자료는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함
- 복제되는 의사록 자료는 가장 최신 버전이어야 함
- 웨일즈어 텍스트는 영어 번역에 대한 옵션과 함께 공식적인 버전으로 복제되어함
- 의사록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면, 유능한 번역자에 의해 충실히 번역되어야 함

o 일반 조건

- 의사록 복제본이 출판, 열람 혹은 배포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왕실 저작권임을 영어와 웨일즈어로 공지해야 함
“웨일즈 국회 의사록은 왕실 저작권이다. 의사록 자료는 웨일즈 국회와 정부 간행물 출판국이 발표하는 왕실 저작권 정책 가이드에 따라 복제된다”
- 의사록 보관소의 이름과 적절한 문서 참고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의사록 자료의 출처와 버전을 나타내 주어야 함
- 모든 복제 권리들은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행사될 수 있음
- 의사록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맥락이나 제품 광고와 관련해서는 이용되지 않아야 함
- 의사록은 정당, 조직, 회사 혹은 개인들을 잠재적 및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이용되지 않아야 함
-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복사 불가

12. 정보 자산 등록부 및 정보의 자유 - 정보접근에 대한 조직적 반응

- o 이 가이드는 정부의 정보 자산 등록부의 정보 자유 출판 제도(FOI) 내에서의 역할과 정보 자산 등록부가 FOI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제시
- o 정보 자산 등록부는 미출판 정보 자원의 목록으로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www.inforoute.hmso.gov.uk에서 웹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 가능

- 정부는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 그 정보는 얼마나 유용한가, 그리고
- 정보 요청을 위한 연락처

o 검색엔진을 통해 어느 부서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지, 정보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함께 제시

o 정보 자산 등록부는 정부 간행물 출판국이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생성

o 정보 자유법 2000

-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 부여하며 면제 조항 제시
- 면제 조항들에 구속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부서가 요청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통지 받아야 하며, 정보 존재를 통지 받았다면 공개되어야 함

13. 정보 공개 자유 제도

o 이 가이드의 목적은 정식 라이선스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해주며, 정보 자유 입법아래 공공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과 그러한 정보의 재사용 사이를 구분하는 데 있음

- 정보 자유법 2000에 의거하여 각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계획을 채택 및 유지할 의무를 지님 정보 공개 계획은 개별 공공 기관이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향이 있는 정보의 세부 사항들을 제공
- 정보 공개 계획안에서 열거한 정보 중에서 정보 자유법에 의거하여 공개될 수 있는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정보 자유법에 따라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문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자동적인 권리를 지니지 못함

- 공정 거래에 따라 저작권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복제될 수 있음
 -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 및 개별 학업
 - 비평, 리뷰, 뉴스 리포팅

14. 영국 여권 표지의 복제

- 영국 여권은 1981년 영국 국적법 및 수정안에서 정의된 영국 시민과 다른 범주의 영국 국적인에게 신원 및 여권 서비스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 이 가이드라인은 영국 여권의 표지가 복제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음
- 여권 표지의 복제
 - 왕실 문장(紋章)을 포함한 여권의 표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작품의 일부분으로 복제될 수 있으며, 홍보와 광고 작품도 포함
 - 작품의 커버를 주요 초점으로 해서는 안되며, 광고나 표지상에서의 복제는 오직 부수적인 성격에만 가능
 - 여권은 변경 없이 복제(즉, 회사 이름이나 다른 정보가 여권 표지 정보에 들어갈 수 없음)
- 실제 여권으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왕실 문장(紋章)이 들어간 여권의 복제 요청은 정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15. 왕실 저작권 - 정부 부처를 위한 개요

- 이 가이드의 목적은 정부 부서들에 왕실 저작권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왕실 저작권은 무엇인가
 - 저작권 소유
 - 왕실 저작권 정보의 재사용
 - 저작권과 출판

o 저작권 소유

-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나 기관이 소유. 공무원이 만든 저작권 자료의 경우, 왕실이 그 저작권을 소유하며 정부 부처는 자체의 권리로서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함

o 왕실저작권 정보의 재사용

- 저작권 정보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라이선스의 형식으로 허가가 주어짐

16. 왕실 저작권 발췌 자료의 재사용

o 왕실 저작권 자료의 재사용의 진행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기 위해, 공식 자료로부터 250자 미만의 발췌문은 라이선스에 대한 필요 없이 재사용 가능

o 포함 범위

- 사본과 상업적 텍스트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 표, 도표 그리고 서식에 나타난 텍스트
 - 정부 부서가 자료의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진술한 경우. 예를 들어, 빈번하게 업데이트되는 자료와 오래된 정보가 개인의 건강, 안전 및 안정에 잠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 부서의 공식 허락을 받지 않는 공식적인 도안과 부서 로고의 재사용

o 텍스트 발췌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정확하게 재사용되는 경우
- 출처를 명시하고 왕실 저작권임을 진술하는 경우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광고할 목적으로는 재사용될 수 없음
- 오래된 자료가 현재 자료인 것처럼 제시되지 못함

17. 왕실 저작권의 면제

- 왕실 저작권이 주장되더라도 재사용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음
- 포함 범위
 - 다음 범주의 자료들은 저작권 면제에 해당
 - 1차 및 2차 입법안
 - 입법안에 대한 설명문
 - 정부 언론 통지문
 - 과학, 기술, 혹은 의학적 성격의 공개 페이지
 - 미공개 공공 자료
 - 정부 서식들
 - 정부 컨설팅 문서
 - 정부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기술된 정부 문서
 - 통계 자료
 - 장관의 연설문과 소논문
 - 판면 배열

- OPSI의 Copyright Guidance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요약 번역
- 원문은 '<http://www.opsi.gov.uk/advice/crown-copyright/copyright-guidance/index>' 참고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발행일 2010년 3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02-3704-9114

팩스 : 02-3704-9154

인쇄처 크리홍보주식회사 (전화 : 02-737-5377)

<비매품>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일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만약 일부 내용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